

퇴행하는 한국 검찰

발행일 | 2010년 3월 9일

제 작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목차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퇴행하는 한국 검찰

서문	3
1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5
2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인사	25
3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주요 수사	68
4부 이명박 정부 2년 주요 일지	171

서 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검찰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1999년부터는 특별검사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한편 1997년에는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기도 했고, 지휘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일선 검사들의 수사가 이루어지던 검사동일체 원칙도 지난 2004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비록 형식적이거나 폐기되어 부당한 지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집권세력은 검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을 뿐 아니라, 법원, 검찰, 변호사 양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면서 검찰분야에서는 형사소송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재정신청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결실이 있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가 맞물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는 검찰개혁과 검찰감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차고 넘치던 지난 2년이였다. 특히 지난 2009년은 검찰이 왜 개혁대상이어야만 하는지를 검찰 스스로가 여실히 드러내 보였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검찰은 과거 '정치검찰'의 모습으로 철저히 되돌아가고 말았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 장악, 집권세력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방송매체·일반 시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일그러진 법무검찰.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 준 모습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은 검찰의 모습을 낱알이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내놓은 <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에 이어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를

내놓는다.

보고서가 관찰한 시기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0년 2월까지 지난 2년이다. 보고서는 지난 2년 동안 검찰 전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1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들을 기록한 2부 '검찰 인사' 편, 지난 2년간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의 개요와 담당자, 처리경과와 결과를 담은 3부 '주요 사건' 편, 지난 2년 동안 검찰(법무부 포함)의 주요 행적을 기록한 '검찰(법무) 주요 일지' 편 등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부 '주요 사건' 편에서는 지난 2년간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을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집권세력 관련 수사 ●공안 관련 수사 ●선거 관련 수사 ●기타 수사'로 나누어 모두 38개의 사건을 담았다. 이 가운데 검찰이 2009년에 다룬 사건은 14개, 2008년에 다룬 사건은 24개로 특히 2008년 사건은 지난 <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에도 다룬 내용이나, 최근 재판 경과 및 결과까지 반영해 함께 정리했다.

물론 검찰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이 같은 기록들이 모여 검찰감시, 나아가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1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하 태 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I.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 2년은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전 방위로 보여준 해다. 이명박 정부 1년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렸다면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해라고 볼 수 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더없이 관대했던 검찰, 과잉형사범죄화 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여론몰이식 수사와 표적·과잉수사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과 **한상률 전 국제청장 사건**, 그리고 박연차 게이트에 등장했던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의혹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언저리에는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는 나약함을 보였고 접근하더라도 부실수사로 마무리하였다.

거약을 척결한다는 거대담론 뒤에 실정법과 **검찰윤리**를 위반한 자신들을 숨겨버렸던 검찰이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위장전입,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등 실정법 위반과 비윤리적 행위는 법무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비윤리적인 언행과 비상식적인 해명도 문제였지만 청문회장에서 거짓진술이 밝혀져 거약척결의 선봉장이 될 사람으로서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자질을 드러내어 결국 후보직을 사퇴한 인사도 있었다.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형평성을 잃은 수사로 일관하더니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수사기록공개를 거부해 피고인과 변호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결국 항소심 법원에 의해 공개된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

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수사기록 공개 거부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일련의 무죄 판결로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드러났다. MBC ‘피디수첩’의 농수산 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등이 검찰의 과잉범죄화 시도가 1심 법원에 의해 제어되었다. 검찰권이 정권의 의지실현에 동원되어 남용된 예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판결이고, 신대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이다. 이 모두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도 법치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맞추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원되어 무리하게 형사범죄화하려 했던 탓이다.

II.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리고 ‘검찰개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가의 권력남용과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검찰의 표적·편파·과잉수사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다시 정권의 시녀로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정권과 검찰의 수상한 유착관계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분노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망시켜야 현 정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검찰 권력을 시녀처럼 끌어들었고 이에 검찰은 증거도 없이 추측기사를 써대는 보수언론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결과를 얻으려다 비극적 사건에 대한 책임론의 대상이 되었다.

연일 스포츠 중계처럼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이 방송을 타고 신문을 장식했다. 검찰은 오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브리핑이고, 언론은 언론대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무기로 피의사실을 기사화한다.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브리핑 형식으로 공개하고 언론이 취재내용을 덧붙여 활자화하면 우리는 유죄가 틀림없다고 단정 짓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간데없고 유죄심증만 쌓이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피의자는 범죄자가 되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자신을 방어하기도 어렵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혹여 무죄판결이 난다하더라도 짓이겨진 피의자의 명예는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게 수사상 비밀엄수와 관련자들의 인권존중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의 수사방식과 언론브리핑 방식이 문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권을 견제할 시민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통제가 절실함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III. ‘효성과 한상률’

이에 반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그 언저리에 대한 수사는 부실당어리었다. 200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핵심은 ‘대통령 사돈기업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였다. 야당은 검찰의 ‘빠주기 부실·축소수사’로 몰아붙이고 여당은 10.28 제보선을 겨냥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에 검찰은 새로운 범죄혐의가 없는데 수사할 수 있느냐며 재수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검찰수사가 충실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또 살아있는 권력과 그 언저리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랬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더니, 효성그룹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내사 종결하면서 결가지라고 볼 수 있는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 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혀내고는 전·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의혹 첩보에 비해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어 축소·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였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조석래 효성 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수사과정을 재차 설명하는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죽은 권력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는 매일 수사브리핑을 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세세히 공개한 반면 조석래 회장을 비밀리에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은 수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의 태도가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사였기에 그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운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이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은 권력형 비리일수록 더욱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받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떠올린다. 하토야마 현직 총리의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여 일본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에 대비되는 한국 검찰의 태도에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IV. ‘검찰윤리’

과거에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2009년처럼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예외 없이, 그것도 법무검찰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직후보자들이 위장전입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부당소득공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및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되어 국민을 실망시킨 적은 없었다.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또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결국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 자진 사퇴하였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되었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더라’는 식의 도덕수준의 하향화가 후보자 개개인에게도 상처가 될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의 구성원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에게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도덕성과 법규범 준수 면에서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청과 법무부 두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악화되었고 **검찰윤리**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사들이 법무검찰의 수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도덕불감증 정부’, ‘준법의식 체포’인 정부라는 낙인이 찍히고, 위장전입이나 탈세로 적발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들먹이면 과연 그들에게 법집행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들어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진 것이다. “만인이 아니라 특권층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라는 어느 정치인의 냉소가 떠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공허해지고 만다. 집회시위 때마다 시위대를 향한 법치와 준법의 요구는 더욱 저항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V. ‘용산참사’

용산참사의 수사와 재판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시작되었다. 강경진압의 폭력성은 망루의 화마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채 철거민의 불법성만 부각되었다. 결국 강경 진압한 경찰이나 철거용역업체는 공정한 법집행이자 공권력 행사라며 면죄부를 받고 망루에서 희생당한 철거민과 살아남은 자들만 범죄자라는 굴레를 쓰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졌다. 국민이 죽어나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이 없이 공권력의 남용은 진압에서부터 수사과 기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발화원인에 대해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경찰의 애초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밝혀진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 일방적인 수사였다는 비난

을 초래하였다. 또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 그 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이 같은 부실수사 때문에 몇 차례나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편파수사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조차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았다.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판준비절차의 강화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준수법기관이라는 검찰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와 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입장에서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형사소송절차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최대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은 소추자의 지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준수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VI. ‘공소권 남용’

2010년 초 법원의 연이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검찰로서는 기소하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시절을 생각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범죄서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도 범죄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맞추어 검찰 수사권이 동원된 나머지 무리하게 형사범죄화하려 했던 탓이 크다. MBC ‘피디수첩’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등이 검찰의 과잉범죄화 시도를 합리적으로 제어한 것이다. 검찰권이 정권의 의지실현에 동원된 탓도 있다. 그 예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판결이고, 신태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 등이다.

이 정부가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정부정책비판이 국가안보나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반민주, 법치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수사과 기소는 애당초 무리였다. ‘피디수첩’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 교체가 이를 반증했고, 이것이 1심 판결에 의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의 무죄 비율이 높아지고, 대형 정치적 사건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에서는 책임져야 할 자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죄 없는 자를 무리하게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VII. 나가며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원인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검찰 스스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검찰은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법원 탓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검찰이 기소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법관의 자질이 나 이념성향에 있다고 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자질과 이념성향을 따지기에 앞서,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판결에 대한 반발이나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반성이다.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충실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이 기회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내내 무죄 판결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진정 법치의 길로 나가야 한다. ■

2008 ~ 2009년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던 사례가 매우 많았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는데,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권한을 남용했거나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권한 남용, 공익 대변자로서의 책무 회피 등과 관련해 2008~2009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검사 16인”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전직 검사 출신이고 직무관련성 면에서 법무검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6인에 포함되었음)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초래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피의사실 공표, 용산참사 수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무혐의 처리와 수사기록 공개 거부,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로 확인된 정연주 KBS 전 사장·인터넷논객 미네르바·PD수첩 사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으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권 행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6명, 경남 출신이 3명으로 영남권 출신이 9명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1)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경북 영주/경북고/고려대 법대/사시 25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사건**을 수사할 당시, 형사2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09년 1월 18일까지). 특히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한 임수빈 형사2부장과 갈등을 빚으며 수사를 강행한 지휘

2)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춘천지검장, 경남 하동/부산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

- 최교일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형사6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철거민 농성자만을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형사재판중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3)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청주지검장, 대구/대구 청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09년 1월 10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4)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경남 산청/대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7회)

- 김수남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9년 1월 19일부터)

5)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2010 2월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경기 용인/경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4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
- * 퇴임 후 '스테이트윌서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과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6)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2010년 2월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장, 강원 삼척/대일고/성균관대 법대/사시 27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핵심멤버인 대검 수사기획관

7)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경북 봉화/영주고/서울대 법대/사시 29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1과장

8) 이석환 대검 중수2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중수2과장, 광주/광주 송일고/고려대 법대/사시 31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2과장

9) 김주선 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부천지청 차장, 강원 속초/강릉고/단국대 법대/사시 29회)

-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하였으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

10) 안상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경북 김천/우신고/고려대 법대/사시 30회)

- **용산참사 철거민 관련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부장검사

11) 전현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구/화곡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

-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임수빈 형사2부장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시행하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12) 박은석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충북 청원/세광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

-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부장검사

13) 김영한 전 법무부장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법무부장관. 2009년 9월 퇴임함.

*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11회

14)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민정수석비서관. 2009년 9월 퇴임한 뒤, 2010년 2월 현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임

* 서울, 경동고, 한양대 법대, 사시 18회

15) 임채진 전 검찰총장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검찰총장.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책임지고 퇴임함.

*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16)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작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현재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사시 20회



전국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1. ‘스폰서 검사’ , ‘위장전입 검사’ , ‘촌지검사’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들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들의 실정법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한 해였음.

과거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검찰 책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권한남용 의혹 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2009년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그의 뒤를 이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가 연이어 사회문제가 되어 법무검찰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음.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또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 결국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 자진사퇴하고, 이러한 인사실패의 책임을 지고 정동기 민정수석도 사퇴했음.

‘천성관 사건’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소득공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및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차관을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음. 이 때문에 정무기관 중에서도 더욱더 도덕성과 법규범 준수 면에서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청과 법무부 두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악화되었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된 김준규의 경우, 검찰청 출입기자들과의 만찬에서 이른바 ‘금품제공 추첨이벤트’를 진행해 ‘촌지검사’라는 비난을 초래해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으며,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아무런 경고성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민들이 법무검찰

조직의 혁신 가능성을 또 한 번 체념하게 만들었음.

2. 검사 체면을 구겨버린 3인방 ‘천성관-김준규-이귀남’

1) ‘스폰서 검사’ 비난 자초하고 비상식적 답변으로 중도사퇴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 경과 >

- 2009년 6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6월 3일 사직함에 따라 실시한 신임 총장 후보자 지명임)

- 7월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7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직 사퇴 발표, 청와대 사의 수용

- 7월 15일,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검사직 퇴임

정동기 민정수석 사의

< 문제가 된 사항들 >

가. 아파트 구매자금을 후원받는 등 사업가와 부적절한 후원관계를 맺음

2009년 4월 천 후보자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업 등을 하는 사업가 박경재로부터 차용증 없이 15억5천만원을 빌렸음. 또 박경재와 수차례 골프여행 등 해외부동산투여행을 다녀오고 천성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박경재가 고가의 면세품을 함께 구매한 사실이 드러남. 이는 천 후보자가 사업가와 부적절한 후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음.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박경재와 자주 만나지 않는, 즉 그다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15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 중 상당액을 차용증 없이 빌렸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채질하였음. 또 15억5천만원 중 8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했음.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동반한 것에 대해서도 여행을 함께 갔는지도 몰랐으며 그냥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 같다는 비상 식적인 해명을 하여 비난을 초래하고, 결국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경재가 동일한 고가의 명품가방을 동시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천 후보자의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음.

나.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빌린 고급차량의 실제 운전자

천 후보자와 30년 지기라고 주장하는 석 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차량(제네시스)이 2008년부터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관리 장부에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음. 이는 천 후보자가 석 모씨의 후원을 받아 고급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또한 ‘스폰서 검사’ 비난을 불러일으켰음.

이에 대해 천 후보자 측은,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석 모씨의 아들이 서울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천 후보자의 집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아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관리대장에 등록했다고 해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으로 논란을 더 부채질하였을 뿐이며, 실제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고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주차장 CCTV를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거부하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음.

다. 주민등록법 위반

199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살던 천 후보자는 같은 해 5월 주소지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로 바꾸었다가, 6월엔 다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바꿈.

이는 천 후보자의 아들이 강남의 1고교로 배정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주소지만 영등포구 여의도로 바꾼 뒤, 다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바뀌 원하던 1고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음.

이는 실제 거주지와 달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 행위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었음.

라. 증여세 탈루

천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9년 4월까지 동생과 처가 쪽에서 이자 없이 8억원을 빌렸으나, 이에 대해 납부했어야 하는 증여세 500만원을 내지 않았음이 드러남.

세법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음.

마. 아들의 호화결혼식에 대한 허위 답변

천 후보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의심스러운 금전대여를 통해 구입하고, 공직자로서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천 후보자가 아들의 결혼식을 검소하게 거행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천 후보자를 두둔하였음. 천 후보자 또한 주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아들의 결혼식을 ‘교외의 조출한 장소’에서 했다고 대답했음.

그러나 청문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실제 천 후보자의 아들의 결혼식장은 최고급(6성급)호텔인 서울의 W호텔 야외 예식장이었다고 바로 지적을 하여, 주성영 의원들의 두둔성 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천 후보자의 대답이 거짓이었고 이는 매우 거센 비난을 불러 일으켰음.

바. 청렴성 논란

천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연봉이 8천만원 정도인 천 후보자가 매월 8백만원에 달하는 금융채무이자를 갚아야 하고, 천 후보자의 부인은 최고급 차량을 구매하려했거나 리스하려 하고, 또 수백만원 대의 고가 명품을 여러 차례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음. 또 천 후보자의 아들도 자신의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는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청렴성의 수준을 너무 벗어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

2) 위장전입과 부적절한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장 경력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 경과 >

- 2009년 6월 말, 김준규 대전고검장, 검찰에서 퇴직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퇴직함)
- 2009년 7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자직 사의함
- 2009년 7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
- 2009년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회

- 2009년 8월 19일,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 문제가 된 사항들 >

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김 후보자는 부인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의 주소지를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ㄱ아파트에서 서초구 반포동 ㄴ아파트로 바꾼 뒤, 다시 1년 만에 사당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되돌림. 이 기간 중에 김 후보자는 계속해서 사당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1994년 2월 가족과 함께 동작구 대방동 ㄱ아파트로 이사함.

가족이 1년간 주소지를 따로 둔 것은 딸을 반포동에 있는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처와 딸의 주소지를 지인이 살고 있는 반포동 ㄴ아파트로 허위 신고한 것임.

이외에도 세 차례 더 실제 거주지대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스스로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혔음.

나. 아파트 매입금액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

김 후보자는 1999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를 살 때, 실제 거래가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에 매입금액(4억 1천만원)을 기재함. 이는 이중계약서 또는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으며, 실제 김 후보자는 세금을 적게 낸 것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함.

다. 검사장 재직하면서 맡은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장

김 후보자는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 모 신문사가 주최하는 미인대회인 ‘미스코리아’ 대회 대전 충남 선발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평일 근무일인 4월 29일에는 예비심사에 직접 참석하느라 집무실을 비움.

여성의 상품화라는 논란 때문에 사회적 비판을 받고 공익성이 없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공중파 방송중계도 중단된 행사라는 점과, 공공기관의 행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신문사)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식

이 부족함을 보여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받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밝힘.

라. 기타

2006년~2008년 사이에 펀드 판매 수익과 상가 임대소득 등으로 각각 7,300여만 원, 5,600여만 원, 760여만 원을 소득이 있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 종합소득세 등을 내면서 자기 몫의 기본(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김 후보자는 본인의 (근로)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 부인을 ‘배우자 공제’ 대상에 올려 연간 100만원씩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음.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따르지 않고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던 것이 드러났음.

또 2006년 결혼한 큰 딸이 사용한 430만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올려 부당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이 드러났음.

3)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 경과 >

- 2009년 6월 말, 이귀남 법무부차관, 차관직 사퇴 및 검찰에서 퇴직(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퇴직함)
- 2009년 9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이귀남 전 법무부차관 지명(전임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내각일부교체에 따른 인사임)
- 2009년 9월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2009년 9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취임

< 문제가 된 사항들 >

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이 후보자는 1997년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이 실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부인의 화실이 있는 용산구 청파동

주택으로 바꾸었다가 98년 3월 다시 실제 거주하는 이촌동으로 바꾸었음.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힘.

나. 아파트 매입금액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

이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살 때, 실제 거래가(3억8,250만원)보다 8,750만원 낮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에 매입금액(2억9,500만원)을 기재하여 신고함. 이는 이 중계약서 또는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으며, 실제 이 후보자는 500여만원 정도의 세금을 적게 낸 것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잘못인 점을 인정한다’고 답함.

다. 기타

이 후보자는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와 인천 구월동 재건축 아파트의 실소유주임에도 이를 동생과 처남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는 이 두 아파트의 소유주인 동생과 처남이 각각 이 아파트들을 임의로 매매처분할 수 없도록 이들이 이 후보자의 부인과 ‘매매계약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혹이었음.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동생과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장모가 이를 받기 위해 딸이 이 후보자의 부인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고 주장함.

4) 기자금품제공 이벤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준규 검찰총장

- 2009년 11월 3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상견례를 겸한 저녁식사를 자리를 가졌음.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식사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 번호뽑기 이벤트를 벌인 뒤, 당첨된 기자 8명에게 현금 또는 수표 5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누어주었음.

김 총장은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카페로 옮긴 뒤에도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번호뽑기 방식으로 2명의 기자에게 나누어주었음.

이러한 사실은 김 총장으로부터 금품이 담긴 봉투를 받은 한겨레 신문사 소속 기자가 봉투안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회식 다음날 돌려주고 기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알려졌다. 금

품을 받은 기자들 중 일부는 대검찰청에 되돌려주고, 일부는 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같은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촌지 검사’라는 신조어를 유행하게 만들었음.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힘.

- 2009년 11월 9일 참여연대는 김 총장의 행동은 검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인 만큼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심의 청구 요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국회의원들도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했음.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9년 12월3일과 12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에 징계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답신하였음. ■

2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인사

1. 2008 ~ 2009년 19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검찰(법무부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는 다음 19개가 우선 손꼽히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법무부장관
- 법무부차관
-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자료 작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형사사건(공안사건 포함)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 법무부기획조정실장 : 법무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종합 및 조정, 법질서 바로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8조)
- 검찰총장
- 대검차장
- 대검 중수부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관할하며 중앙수사1과장, 2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 지휘하며 대검수사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
- 대검수사기획관 : 대검 중앙수사부에 속해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지도,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관련 사항(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대검 중수부장을 보좌하다.
- 대검중수1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중수2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공안부장 : 대검 공안부를 관할하며 공안1과장, 2과장을 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기획관 :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공안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1과장 : 대공사건, 선거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2과장 :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교육 등 단체관련 공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범죄정보기획관 :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부정부패사범 정보,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이상 범죄정보1담당관 소관),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이상 범죄정보2담당관 소관)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8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판1,2부, 총무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3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첨단범죄수사 1,2부, 금융조세조사1,2,3부 및 외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이들 19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 [표1]과 같다.

- 19개 직책 중 대구경북 출신(출생지 및 고교 포함)이 맡고 있는 직책을 보면,
 - △ 2008년 3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2과장,
 - △ 2009년 1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1과장,
 - △ 2009년 8월 인사발령 기준 :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안2과장이다.

- 또 19개 직책 중 고려대 법대 출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보면,
 - △ 2008년 3월 인사발령 기준 :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공안2과장,
 - △ 2009년 1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1과장
 - △ 2009년 8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2과장이다.

이 두 경우를 합쳐서 살펴보면, 즉 19개 직책 중 대구경북 출신 또는 고려대 법대 출신이 맡은 직책은

- △ 2008년 3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상 8개 직책)
- △ 2009년 1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1과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상 9개 직책)
- △ 2009년 8월 인사발령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1과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공안2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장(이상 8개 직책)이다.

【표1】 19개 주요 직책 인사

직책 /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 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기수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08년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009년 1월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법무부장관
2009년 9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법무부차관(2009년) -대구고검장
검찰총장						
2008년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2009년 1월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대검찰청검찰총장
2009년 8월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11	전 대전고검장
대검 차장						
2008년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10	

2009년 1월	문성우	광주	광주일 고	서울대 법대	11	법무부차관(2008)
2009년 8월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12	수원지검장(2009초) -검찰국장(2008)
법무부차관						
2008년	문성우	광주	광주일 고	서울대 법대	11	
2009년 1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대구고검검사장
2009년 8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13	서울남부지검장(2009초) -광주지검장(2008)
서울중앙지검장						
2008년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10	
2009년 1월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12	수원지검장
2009년 8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14	대검공안부장(2009초) -울산지검장(2008)
법무부 검찰국장						
2008년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13	
2009년 1월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13	법무부 법무실장
2009년 8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서울고검 차장(2009초) -서울중앙1차장(200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08년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일 고	서울대 법대	15	
2009년 1월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중앙3차장(2008)
2009년 8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중앙3차장(2009초) -대검수사기획관(2008)
대검 중수부장						
2008년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13	
2009년 1월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14	대검기획조정부장
2009년 8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1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09 초)-사법연수원 부원장(2008)
대검 공안부장						
2008년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13	
2009년 1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14	울산지검장
2009년 8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13(?)	춘천지검장(2009초) -부산지검1차장(2008)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8년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수원지검1차장
2009년	정병두	경남	부산동	서울대	16	수원지검1차장

1월		하동	고	법대		
2009년 8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 1차장(2009초) -대검 미래기획단장(2007)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2차장
2009년 1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공안기획관
2009년 8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 공안기획관(2009초) -대검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8년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인천지검2차장
2009년 1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수사기획관
2009년 8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 고	서울대 법대	18	법무부 대변인(2009초) -서울중앙형사1부장(2008)
대검 수사기획관						
2008년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2009년 2월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17	법무부대변인
2009년 8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중앙형사1부장(2009초) -검찰과장(2008)
대검 중앙수사1과장						
2008년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 고	연세대 법대	19	
2009년 2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2부장
2009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중앙탐단범죄수사2부장 (2009초)-서울서부형사5부장
대검 중앙수사2과장						
2008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2009년 2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21	해남지청장
2009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대검 중수2과장(2009초) -해남지청장(2008)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2008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2009년 2월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범죄정보기획관
2009년 8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대검 중수1과장(2009)-서울 중앙금융조세조사2부장(2008)
대검 공안기획관						
2008년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2009년 2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대변인
2009년	봉 옥	서울	여의도	서울대	19	여주지청장(2009초)-서울중앙

8월			고			금융조세조사1부장(2008)
대검 공안1과장						
2008년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20	
2009년 2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 고	고려대 법대	21	대검공안2과장
2009년 8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대검 공안2과장(2009초) -대검 피해자인권과장(2008)
대검 공안2과장						
2008년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 고	고려대 법대	21	
2009년 2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피해자인권과장
2009년 8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대구지검 공안부장(2009초) -울산지검공안부장(2008)

2. 2008 ~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직책중의 하나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이 자리는 검찰과 국제청,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며, 실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2010년 2월 현재까지 3명을 임명한 바 있는데, 모두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권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검찰고위 간부 출신의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표2】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기수	검찰 최종 경력
2008년 2월	이종찬	경남 고성	삼천포 제일고	고려대 법대	2	전 서울고검장(03.2 퇴임)
2008년 6월	정동기	서울	경동고	한양대 법대	8	전 대검차장(09.1 퇴임)
2009년 9월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0	전 서울고검장(09.7 퇴임)

이는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천명했던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 내역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은 모두 4명(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이호철)이었는데, 3명은 비검찰 출신이고, 1명(박정규)만 검찰출신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울동부지청 형사3 부장이 최종 경력으로 고위 간부 출신이 아니었다.

*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들

문재인(03.2~04.2) - 박정규(~05.1) - 문재인(~06.5) - 전해철(~07.12) - 이호철(~08.2)

3. 2008~2009년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 검찰 최고위 간부출신을 임명했다는 점 외에도 기수서열 관계에 매우 민감한 것이 법무검찰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기수서열이 높은 사람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법무검찰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총장은 사법연수원 9기인데, 같은 시기에 법무부장관을 맡았던 이는 사법연수원 1기의 김경한 장관이었다. 이 때의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종찬(연수원 2기)과 정동기(연수원 8기)였다.

검찰총장보다도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수가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무부장관의 기수서열이 매우 높은만큼 굳이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청와대의 의중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구조였다.

김경한 장관이 2009년 8월에 퇴임하고, 임채진 총장이 6월에 퇴임한 뒤의 구조는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한 법무검찰 조직 통제구조로 다소 변모했다.

이 두 사람을 이어 2009년 9월에 법무부장관이 된 이는 사법연수원 12기의 이귀남 장관이며, 2009년 8월에 검찰총장이 된 이는 사법연수원 11기의 김준규 총장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민정수석비서관에 사법연수원 10기의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보다 기수서열상 앞선 이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 고등검사장급 이상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이 맡은 직책은

△ 2008년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장, 대검처장.

△ 2009년 1월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고검장

△ 2009년 8월 기준 :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임

- 고등검사장급 이상에 고려대 법대 출신이 맡은 직책

△ 2008년 기준 : 대구고검장

△ 2009년 1월 기준 : 법무부차관

△ 2009년 8월 기준 : 법무부장관,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임

- 이를 종합하여, 고등검사장급 이상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 또는 고려대 법대 출신이 맡은 직책은

△ 2008년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장, 대검처장, 대구고검장 (4개 직책)

△ 2009년 1월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서울고검장 (3개 직책)

△ 2009년 8월 기준 :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4개 직책)임

[표3] 고등검사장 이상 직책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 지역	출신 고교	출신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08년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009년 1월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2009년 9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법무부차관(2009년) -대구고검장
검찰총장						
2008년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법무연수원장
2009년 1월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2009년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11	전 대전고검장

8월				법대		
대검 차장						
2008년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차장(2007)
2009년 1월	문성우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21	법무부차관(2008)
2009년 8월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2	수원지검장(2009초) -검찰국장(2008)
법무연수원장						
2008년	김태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부산지검장(2007)
2009년 1월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지검장(2008)
2009년 8월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부산지검장(2009초) -중수부장(2008)
법무부차관						
2008년	문성우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21	법무부 검찰국장(2006)
2009년 1월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대구고검장(2008)
2009년 8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남부지검장(2009초) -광주지검장(2008)
서울고검장						
2008년	박영수	제주	동성고	서울대 법대	20	대전고검장(2007.3)
2009년 1월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차장(2008)
2009년 8월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법무부 검찰국장(2009초) -법무실장(2008)
대전고검장						
2008년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 법대	21	대구지검장(2007)
2009년 1월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부산고검장(2008)
2009년 8월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법무부 법무실장(2009초) -전주지검장(2008)
부산고검장						
2008년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대전지검장(2007)
2009년 1월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 법대	21	대전고검장(2008)
2009년 8월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북부지검장(2009초) -대전지검장(2008)
대구고검장						
2008년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대검 중수부장(2007)

2009년 1월	이준보	전남 강진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광주고검장(2008)
2009년 8월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창원지검장(2009초) -법무연수원기획부장(2008)
광주고검장						
2008년	이준보	전남 강진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대검 공안부장(2007)
2009년 1월	신상규	강원 철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21	인천지검장(2008)
2009년 8월	신상규	강원 철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21	인천지검장(2008)
서울중앙지검장						
2008년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지검장(2007.11)
2009년 1월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2	수원지검장(2008)
2009년 8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대검공안부장(2009초) -울산지검장(2008)

- 검사장급(고등검사장급 제외)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이 맡은 직책

△ 2008년 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검찰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8개 직책)

△ 2009년 1월 기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검찰부장, 서울서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청주지검장, 부산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 대전지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인권국장(13개 직책)

△ 2009년 8월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인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부산지검장, 창원지검장, 제주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지검 1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4개 직책)

- 검사장급(고등검사장급 제외)에서 고려대 법대 출신이 맡은 직책

△ 2008년 기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울산지검장(4개 직책)

△ 2009년 1월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관,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인권국장(8개 직책)

△ 2009년 8월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제주지검장, 대구지검 1차장(7개 직책)임

- 이를 종합하여, 검사장급(고등검사장 제외) 직책중에서 대구경북 출신(고교 포함) 또는 고려대 법대 출신자가 맡은 직책은

△ 2008년 기준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검찰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10개 직책)

△ 2009년 1월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관, 대검 공안부장, 대검 검찰부장, 서울서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청주지검장, 부산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인권국장(17개 직책)

△ 2009년 8월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부산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제주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지검 1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8개 직책)임

[표4] 검사장 직책별 인사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 지역	출신 고교	출신 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법무부 검찰국장						
2008년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기획조정부장(2006)

2009년 1월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법무부 법무실장(2007)
2009년 8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서울고검 차장(2009초) -서울중앙1차장(2008)
법무부 법무실장						
2008년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법무부 법무실장(2007)
2009년 1월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전주지검장(2008)
2009년 8월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대구지검 1차장(2009초) -고양지청장(200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08년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4	서울고검 송무부장(2007)
2009년 1월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일 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기획조정실장(2008)
2009년 8월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부산고검 차장(2009초) -대전지검차장(2008)
법무부 검찰관						
2008년	곽상욱	서울	한일고	서울대 법대	24	고양지청장(2007.3)
2009년 1월	곽상욱	서울	한일고	고려대 법대	24	법무부 검찰관(2008초)
2009년 8월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고검 검사
법무부 기초실장						
2008년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일 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 차장(2007)
2009년 1월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8)
2009년 8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9초) -대검수사기획관(2008)
대검 중앙수사부장						
2008년	박용서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청주지검장(2007)
2009년 1월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24	대검 기획조정부장(2008)
2009년 8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09초) -사법연수원 부원장(2008)
대검 공안부장						
2008년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3	삼성비자금 특별수사본부장 (2007)
2009년 1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울산지검장(2008)
2009년 8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춘천지검장(2009초) -부산지검 1차장(2008)
대검 형사부장						

2008년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대검 형사부장(2008)
2009년 1월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 시	서울대 법대	24	청주지검장(2008)
2009년 8월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일 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2009초) -기획조정실장(2008)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2008년	민유태	경기 김포	중경고	연세대 행정학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08)
2009년 1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사법연수원 부원장(2008)
2009년 9월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고검 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8년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24	대전고검 차장(2007)
2009년 1월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광주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공판부장(2009초) -서울중앙2차장(2008)
대검 공판송무부장						
2008년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광주지검 차장(2007)
2009년 1월	남기춘	서울	홍대부 고	서울대 법대	25	대구지검 1차장(2008)
2009년 8월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광주지검 차장(2009초) -서울동부지검차장(2008)
대검 검찰부장						
2008년	이창세	경북 칠곡	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청주지검 차장(2007.3)
2009년 1월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오 성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검찰부장(2008초)
2009년 8월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27	창원지검 차장(2009초) -부천지청차장(2008)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8년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수원지검 1차장(2007)
2009년 1월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1차장(2008)
2009년 8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1차장(2009초) -대검미래기획단장(2007)
서울동부지검장						
2008년	이복태	경남 밀양	경성고	성균관대 법대	21	법무부 검찰관(2007)
2009년 1월	김종인	충남 천안	경북고	서울대 법대	22	대구지검장(2008)

2009년 8월	박한철	부산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3	대구지검장(2009초) -대검공안부장(2008)
서울남부지검장						
2008년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23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2007)
2009년 1월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광주지검장(2008)
2009년 8월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울산지검장(2009초) -춘천지검장(2008)
서울북부지검장						
2008년	박상욱	경기 시흥	경기고	서울대 법대	20	의정부지검장(2007.3)
2009년 1월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대전지검장(2008)
2009년 8월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 시	서울대 법대	24	대검 형사부장(2009초) -청주지검장(2008)
서울서부지검장						
2008년	안창호 (직대)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대검 형사부장(2008)
2009년 1월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창원지검장(2008)
2009년 8월	곽상욱	서울	한일고	고려대 법대	24	법무부 검찰관(2008초) -서울고검검사(2008)
의정부지검장						
2008년	박태규	경남 남해	남해중 고	동아대 법대	23	춘천지검장
2009년 1월	박기춘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2008)
2009년 8월	이재원	광주	광주일 고	서울대 법대	24	전주지검장(2009.05) -광주고검 차장(2009초)
인천지검장						
2008년	신상규	강원 철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21	광주지검장(2007)
2009년 1월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2	부산지검장(2008)
2009년 8월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서부지검장(2009초) -창원지검장(2008)
수원지검장						
2008년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2	서울남부지검장(2007)
2009년 1월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 고	서울대 법대	22	법무부 검찰국장(2008)
2009년 8월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23	광주지검장(2009초) -서울남부지검장(2008)
춘천지검장						
2008년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7)

2009년 1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부산지검 1차장(2008)
2009년 8월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9초) -수원지검1차장(2008)
대전지검장						
2008년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사법연수원 부원장(2007)
2009년 1월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2008)
2009년 8월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기획조정부장(2009초) -광주지검차장(2008)
청주지검장						
2008년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시	서울대 법대	24	대구고검 차장(2007)
2009년 1월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대구고검 차장(2008)
2009년 8월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법무부 기초실장(2009초) -서울중앙지검3차장(2008)
대구지검장						
2008년	김종인	충남 천안	경북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감찰부장(2007)
2009년 1월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공안부장(2008)
2009년 8월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청주지검장(2009초) -대구고검차장(2008)
부산지검장						
2008년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2	서울서부지검장(2007)
2009년 1월	박웅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중수부장(2008)
2009년 8월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4	의정부지검장(2009초) -범죄예방정책국장(2008)
울산지검장						
2008년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부산지검 1차장(2007)
2009년 1월	김학익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춘천지검장(2008)
2009년 8월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공판송무부장(2009초) -대구지검1차장(2008)
창원지검장						
2008년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제주지검장(2007)
2009 1월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8)
2009년 8월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감찰부장(2008초) -서울고검 검사(2008)

광주지검장						
2008년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공판송무부장(2007)
2009년 1월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남부지검장(2008)
2009년 8월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사법연수원 부원장(2009초) -대검공판송무부장(2008)
전주지검장						
2008년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2006)
2009년 1월	민유태	경기 김포	증경고	연세대 행정학	24	대검 형사부장 직무대리(2008)
2009년 5월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광주고검 차장(2009초) -서울고검 형사부장(2008)
2009년 8월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부산지검 1차장(2009초) -성남지청장(2008)
제주지검장						
2008년	박영관	전남 신안	목포고	성균관대 법대	23	
2009년 1월	김정기	전북 정읍	전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고검 차장(2008)
2009년 8월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09초) -서울북부지검차장(2008)
서울고검 차장						
2008년	김정기	전북 정읍	전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고검 공판부장(2007)
2009년 1월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8)
2009년 8월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구고검 차장(2009초) -서울고검 공판부장(2008)
대전고검 차장						
2008년	-					
2009년 1월	석동현	경북 성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고검 송무부장(2008)
2009년 8월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인권국장(2009초) -의정부지검차장(2008)
대구고검 차장						
2008년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007)
2009년 1월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고검 공판부장(2008)
2009년 8월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대구지검 서부지청장(2009초) -서울서부지검차장(2008)
부산고검 차장						
2008년	김상봉	서울	동성고	성균관대 법대	22	서울고검 차장(2007)
2009년	주철현	전남	여수고	성균관대	25	대전지검 차장(2008)

1월		여수		법대		
2009년 8월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26	서울고검 형사부장(2009초) -인천지검 1차장(2008)
광주고검 차장						
2008년	조한욱	부산	경남고	부산대법대	23	서울고검 형사부장(2007)
2009년 1월	이재원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24	서울고검 형사부장(2008)
2009년 8월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26	서울고검 송무부장(2009초) -전주지검차장(2008)
서울고검 형사부장						
2008년	이재원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24	수원지검 안산지청장(2007)
2009년 1월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26	인천지검 1차장(2008)
2009년 8월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법대	26	성남지청장(2009초) -울산지검차장(2008)
서울고검 공판부장						
2008년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2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007)
2009년 1월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26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8)
2009년 8월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26	부산지검 동부지청장(2009초) -서울고검검사(2008)
서울고검 송무부장						
2008년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25	대전지청 천안지청장(2006)
2009년 1월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26	전주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27	대검 수사기획관(2009초) -법무부 대변인(2008)
대전지검 차장						
2008년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25	인천지검 1차장(2007)
2009년 1월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26	서울남부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27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9초) -대검 공안기획관(2008)
대구지검 1차장						
2008년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25	서울북부지검 차장(2007)
2009년 1월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2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2008)
2009년 8월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27	서울동부지검 차장(2009초) -법무부 검찰담당관
부산지검 1차장						

2008년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23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7)
2009년 1월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25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008)
2009년 8월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27	인천지검 1차장(2009초) -수원지검 2차장
광주지검 차장						
2008년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25	서울동부지검 차장(2007)
2009년 1월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26	서울동부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일고(제주)	서울대법대	27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2007)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8년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24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7)
2009년 1월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25	대검 공판송무부장(2008)
2009년 8월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26	대전지검 차장(2009초) -서울남부지검차장(2008)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08년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23	법무부 정책기획단장(2007)
2009년 1월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26	서울북부지검 차장(2008)
2009년 8월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27	청와대 민정2비서관(08.8) -대검 범죄정보기획관(2008)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2009년 8월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25	대전고검 차장(2009초) -서울고검 송무부장(2008)
법무부 인권국장						
2009년 1월	조영근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25	의정부지검 차장
2009년 8월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	27	서울서부지검 차장

4. 2008 ~ 2009년 검찰 중간 간부

- 일부 소규모 지청의 부장과 각 고등검찰청 검사 등 일부 중간간부를 제외한 중간간부급의 인사내역임.

[표5] 중간 간부급 (고검 검사급 중 일부 제외)

소속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
법무부						
대변인	2008년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년 1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2008년					
	2009년 1월	김용남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용남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감찰담당관	2008년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27
	2009년 1월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법질서/규제 개혁담당관	2008년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박 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박 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법무심의관	2008년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법무과장	2008년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서울대 법대	32
국제법무 과장	2008년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서울대 법대	32
국가송무 과장	2008년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통일법무 과장	2008년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2009년 8월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법조인력 정책과장	2008년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최세훈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최세훈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상사법무 과장	2008년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일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일고	고려대 법대	32
검찰과장	2008년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형사기획 과장	2008년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진경준	전남 목포		서울대 법대	
	2009년 8월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공공형사 과장	2008년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법대	32
국제형사 과장	2008년	진경준	전남 목포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흥락	경북 경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법제 과장	2008년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법대	33
범죄예방 기획과장	2008년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2009년 1월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2009년 8월	송진섭	경남 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법대	32
사회보호청 과장(보호 법제과장)	2008년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서울대	32
	2009년 8월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인권정책 과장	2008년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법대	31
인권지원과 장(인권구조 과장)	2008년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현철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 법대	33
인권옹호과 장(인권조사 과장)	2008년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현철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여성아동 과장	2008년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 법대	33
	2009년 1월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대	35
	2009년 8월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대	35
대검찰청						
대변인	2008년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범죄정보 기획관	2008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범죄정보 1담당관	2008년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범죄정보 2담당관	2008년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윤석열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33
과학수사 기획관	2008년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과학수사 담당관	2008년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2009년 8월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32
디지털수사 담당관	2008년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1월	최성진	전남 구례	대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최성진	전남 구례	대성고	서울대 법대	33
정책기획 과장	2008년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장호중	서울	창릉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32

정보통신 과장	2008년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수사기획관	2008년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중수1과장	2008년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1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중수2과장	2008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석환	광주	광주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첨단범죄 수사과장	2008년	이동열	경기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동열	경기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영중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형사1과장	2008년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2과장	2008년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32
조직범죄 과장	2008년	이준명	경북 영주	경신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최윤수		부산내성고	서울대 법대	31
마약과장	2008년	최윤수		부산내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최윤수		부산내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피해자인권 과장	2008년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주원	경남 창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주원	경남 창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33
공안기획관	2008년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29
공안1과장	2008년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공안2과장	2008년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공안3과장	2009년 3월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8년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공판송무 과장	2009년 8월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2008년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29
	2009년 1월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감찰1과장	2009년 8월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8년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감찰2과장	2009년 8월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서울대 법대	32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3차장	2009년 8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2008년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형사1부장	2009년 8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08년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형사2부장	2009년 8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8년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일고	고려대 법대	29
형사3부장	2009년 8월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08년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형사4부장	2009년 8월	허상구	부산	부산통고	부산대 법대	31
	2008년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 법대	30
형사5부장	2009년 8월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08년	김하중	전남 담양	사례지오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염동신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6부장	2009년 8월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8년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7부장	2009년 8월	장호중	서울	창충고	서울대 법대	31
	2008년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8부장	2009년 8월	이 옥	전남 고흥	사례지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2008년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조사부장	2009년 8월	김학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8년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총무부장	2009년 8월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32
	2008년	염동신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공안1부장	2009년 8월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08년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공안2부장	2009년 8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8년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2009년 1월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공판1부장	2009년 8월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08년	조정철	경북 달성	청주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민만기	경남 밀양	마산고	성균관대 법대	30
공판2부장	2009년 8월	양근복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31
	2008년	김창현	부산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 옥	전남 고흥	사례지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특수1부장	2009년 8월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08년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특수2부장	2009년 8월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해광고	서울대 법대	31
	2008년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2009년 1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특수3부장	2009년 8월	권오성	경북 칠곡	경남고	경북대 법대	32
	2008년	김광준	경북 경주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해광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1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8년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첨단범죄수사1부장	2008년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첨단범죄수사2부장	2008년					
	2009년 1월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위재전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법대	31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8년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29
	2009년 1월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8년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진경준	전남 목포		서울대 법대	
금융조세조사3부장	2008년					
	2009년 1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외사부장	2008년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서울동부지검						
차장	2008년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2009년 1월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2009년 8월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형사1부장	2008년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형사2부장	2008년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김희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1월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형사4부장	2008년	김희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1월	위재전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성진	대구 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 법대	32
형사5부장	2008년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창희	서울	경기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8월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법대	32
형사6부장	2008년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공판부장	2008년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31
	2009년 1월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법대	33
서울남부지검						
차장	2008년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2009년 1월	한우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영렬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형사1부장	2008년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 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0
	2009년 8월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형사2부장	2008년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서울대	29
	2009년 1월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허태욱	부산	부산배정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3부장	2008년	이 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4부장	2008년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형사5부장	2008년	원범연	충남 공주	공주대 부고	성균관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형사6부장	2008년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1
	2009년 8월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공판부장	2008년	박철완	전북 익산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서울북부지검						
차장	2008년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2009년 1월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형사1부장	2008년	임재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신문식	경북 문경		연세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2009년 1월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인원	전북 남원	울산우신고	성균관대 법대	31
형사4부장	2008년	이제관	부산	부산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인원	전북 남원	울산우신고	성균관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형사5부장	2008년	송길룡	전남 고흥	조선대 부고	조선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성준	부산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6부장	2008년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1월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희중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공판총무부장	2008년	김진원	경남 함양	함양종합고교	부산대 법대	31
	2009년 1월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서울서부지검						
차장	2008년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회교	27
	2009년 8월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형사1부장	2008년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용호	경북 예천	신일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8월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서정식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8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정석우	경남 진해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양근복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백중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김용호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지석배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5부장	2008년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33
공판부장	2008년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태광	충남 예산	예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조인형	전남 강진	전남고	연세대 법대	33
의정부지검						
차장	2008년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최준원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형사1부장	2008년	김 한	전북 완주	전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허태욱	부산	부산배정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8월	남삼식	경남 거창	성동고	고려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손영기	대구	대구경신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송길홍	전남 고흥	조선대부고	조선대 법대	30
	2009년 8월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임성	서울	경기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1월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태훈	강원 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 법대	32
형사5부장	2008년	류혁상	서울	마포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1월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8월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공판송무부장	2008년					
	2009년 1월	김태훈	강원 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전석수	충북 청원	대광고	서울대	34
고양지청장	2008년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2009년 1월	김현정	부산	부산대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서울대 법대	27
고양지청차장	2008년	정윤기	전남 광양	순천고	전남대 법대	27
	2009년 1월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29
인천지검						
1차장	2008년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2009년 8월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2차장	2008년	송찬영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27
	2009년 1월	이영렬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최준원	대구 달성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박재권	경기 안산	동인천고	한양대 법대	29
형사2부장	2009년 8월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2008년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제관	부산	부산상업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3부장	2009년 8월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법대	31
	2008년	권도욱	대구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법대	31
형사4부장	2009년 8월	윤보성	전남 강진	해동고	경희대	31
	2008년	이성욱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윤보성	전남 강진	해동고	경희대	31
형사5부장	2009년 8월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	고려대 법대	32
	2008년	이 옥	전남 고흥	사례지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공판송무부장	2009년 8월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서울대 법대	33
	2008년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종휘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32
공안부장	2009년 8월	이원규	충북 제천			32
	2008년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	고려대 법대	32
특수부장	2009년 8월	오자성	대구	대구영신고	성균관대 법대	33
	2008년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2009년 1월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32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9년 8월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08년	최운식	충남 금산	대전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33
외사부장	2009년 8월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서울대법대	34
	2008년					
	2009년 1월	김희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부천지청장	2009년 8월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2008년	성시웅	충남 예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5
	2009년 1월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부천지청차장	2009년 8월	백중수	경기 양주	부평고	고려대 법대	27
	2008년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수원지검						
1차장	2008년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28
2차장	2008년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2009년 1월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박중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신문식	경북 문경		연세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강태순	경남 진양	부산상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이상현	경남 마산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 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 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형사4부장	2008년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 부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나기주	전남 나주	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공판송무 부장	2008년	김성준	부산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법대	34
공안부장	2008년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송진섭	경남 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법대	32
	2009년 8월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특수부장	2008년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	2008년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09년 1월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성남지청장	2008년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2009년 1월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성남지청 차장	2008년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27
	2009년 1월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여주지청장	2008년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29
	2009년 8월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평택지청장	2008년	이영렬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8월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안산지청장	2008년	구본민	전남 담양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2009년 1월	문규상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안산지청 차장	2008년	신은철	대전	대전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박종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안양지청장	2009년 3월	이부영	강원 인제	서울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26
	2009년 8월	이은중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27
안양지청 차장	2009년 3월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춘천지검						
차장	2008년	박충근				27
	2009년 1월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1부장	2008년	이재덕	경기 화성	동국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백성근	경남 진주	진주고	동아대	32
	2009년 8월	김기준	경남 김해	동아고	서울대법대	33
2부장	2008년	김성렬	전남 함평		단국대 법대	33
	2009년 1월	서흥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찬중	충북 옥천	청주 세광고	중앙대 법대	34
강릉지청장	2008년	이의경	경북 예천	대구대륜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원주지청장	2008년	김진태	강원 춘천	성수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속초지청장	2009년 8월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8년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1월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3
영월지청장	2009년 8월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3
	2008년	이종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법대	33
	2009년 8월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법대	33
대전지검						
형사1부장	2008년	이중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2009년 1월	강창조	제주	오현고	연세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김영태	충북 청주	청주 청석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이선훈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형준	강원 영월	영월고	한양대 법대	32
특수부장	2008년	박 철	서울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법대	34
공판부장	2008년					
	2009년 1월	임용규	경기 이천	수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충한	서울	자양고	고려대	34
홍성지청장	2008년	정병하	경남 산청	진주고	연세대 법대	28
	2009년 1월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용호	경북 예천	신일고	연세대 법대	30
공주지청장	2008년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33
	2009년 1월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선인고	서울대법대	34
	2009년 8월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선인고	서울대법대	34
논산지청장	2008년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서산지청장	2008년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2009년 1월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천안지청장	2008년	이재순	충북 영동	신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박충근				
	2009년 8월	강인철	경남 하동	홍대부고	고려대 법대	28
청주지검						
차장	2008년	문규상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신은철	대전	대전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1부장	2008년	김현호	전북 임실	원광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법대	33
2부장	2008년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2009년 1월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34
	2009년 8월	권종영		대신고	서울대 법대	34
충주지청장	2008년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제천시청장	2008년	박윤희	경북 상주	김천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완규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이완규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대	32
영동지청장	2008년	김영총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운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운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	34
대구지검						
2차장	2008년	차동언	경남 울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2009년 8월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형사1부장	2008년	서범정	대구	거제 중앙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이현득	경북 성주	대구능인고	경북대법대	29
	2009년 8월	권도욱	대구	대구대룡고	고려대 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정성운	전남 담양	광주송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법대	30
	2009년 8월	홍종호	경북 군위	대구성광고	성균관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년	송영호	대전	대전고	충남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종호	전남 무주	제주제일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4부장	2008년	장영돈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2009년 8월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영남고	서울대 법대	33
공판부장	2008년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재훈	경북 성주	대일외고	서울대 법대	38
	2009년 8월	박두순	충남 서천	면목고	서울대법대	34
공안부장	2008년	유희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33
	2009년 8월	김재훈	경북 성주	대일외고	서울대 법대	38
특수부장	2008년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2009년 1월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 법대	34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8년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 법대	34
안동지청장	2008년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현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이현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33
경주지청장	2008년	장인중	서울	송실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서정식	경남 밀양	밀양고	건국대 법대	40
	2009년 8월	변창범	제주	제주우현고	고려대 법대	35
포항지청장	2008년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2009년 1월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29
	2009년 8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김천지청장	2008년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8월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8
상주지청장	2008년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한수	서울	송실고	서울대	34
	2009년 8월	김한수	서울	송실고	서울대	34
의성지청장	2008년	정종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1월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34

영덕지청장	2008년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1월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법대	34
대구서부지청장	2008년	이중환	경북 구미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2009년 1월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박춘근				
대구서부지청 차장	2008년	임상길	전남 진도	목포고	고려대 법대	27
	2009년 1월	장인중	서울	송실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대구서부지청 1부장	2008년	손태근	밀양	경남 마산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영남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심재계	경북 영천	영진고	경북대 법대	34
대구서부지청 2부장	2008년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박용기	충남 부여	군산제일고	고려대 법대	35
부산지검						
2차장	2008년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27
	2009년 1월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2009년 8월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29
형사1부장	2008년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방철수	전북 남원	전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법대	30
형사2부장	2008년	고석홍	전북 고창	장충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남삼식	경남 거창	성동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정용수	경남 거창	경북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3부장	2008	이상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년 1월	정용수	경남 거창	경북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8월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법대	31
형사4부장	2008년	이종재	서울	용산고	한양대 법대	32
	2009년 1월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5부장	2008년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강경원	경북 영주	영주 중앙고	한양대 법대	33
공판부장	2008년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 철	서울	광주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도읍	부산	동고	동아대 법대	35
공안부장	2008년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2009년 1월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8월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3
특수부장	2008년	최세훈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차맹기	경남 밀양	창원고	서울대 법대	34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8년	김희중	경남 산청	진주기계고	부산대 법대	33
	2009년 1월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대	34
외사부장	2008년					
	2009년 1월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09년 8월	박성동	경남 진주	동성고	경찰대 행정학	34
부산동부지청장	2008년	이건중	서울		서울대 법대	25
	2009년 1월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8월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27
부산동부지청 차장	2008년	김종로	경남 밀양	경남 세종고	부산대 법대	27
	2009년 1월	최해중	경남 김해	대광고	성균관대 법대	28
	2009년 8월	염동신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30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2008년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박형수	경북 울진	영진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8월	박형수	경북 울진	영진고	서울대 법대	32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2008년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강경원	경북 영주	영주 중앙고	한양대 법대	33
	2009년 8월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34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2008년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곽규택	부산	해광고	서울대 법대	35
울산지검						
차장	2008년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27
	2009년 8월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형사1부장	2008년	손영재	경북 경산	성서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1월	강길주	전남 신안	조선대부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8월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2부장	2008년	강길주	전남 신안	조선대 부고	고려대 법대	30
	2009년 1월	홍충호	경북 군위	대구성광고	성균관대 법대	31
	2009년 8월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서울대 법대	32
공안부장	2008년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특수부장	2008년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최정운	울산	울산학성고	서울대 법대	34
창원지검						
차장	2008년	김현정	부산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 법대	28
형사1부장	2008년	방철수	전북 남원	전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용주	울산	금성고	부산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태광	충남 예산	예산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2부장	2008년	김성은	경남 창원	마산고	성균관대 법대	32
	2009년 1월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서흥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법대	34
공안부장	2008년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오자성	대구	대구영신고	성균관대 법대	33
	2009년 8월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특수부장	2008년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2009년 1월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2009년 8월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34
공판송무부장	2008년					
	2009년 1월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황순철	대구	대구성광고	경북대 법대	35
전주지청장	2008년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2009년 1월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2009년 8월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통영지청장	2008년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밀양지청장	2008년	김주원	경남 창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이종철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이종철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4
거창지청장	2008년	백중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34
	2009년 8월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34
광주지검						
형사1부장	2008년	박환용	전북 남원	전주고	서울대 사회교	28
	2009년 1월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서울대	29
	2009년 8월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서울대	29
형사2부장	2008년	박재권	경기 안산	동인천고	한양대 법대	29
	2009년 1월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2009년 8월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형사3부장	2008년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성진	대구 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 법대	32
	2009년 8월	김중휘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32
공안부장	2008년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성렬	전남 함평		단국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영규	전남 담양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특수부장	2008년	이상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2009년 1월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8월	김재구	강원 인제	경문고	서울시립 법대	34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8년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2009년 1월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 철	서울	광주고	서울대 법대	34
공판부장	2008년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김영규	전남 담양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이종환	강원 정선	문일고	고려대 법대	35
목포지청장	2008년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1월	김하중	전남 담양	사례지오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하중	전남 담양	사례지오고	고려대 법대	29
장흥지청장	2008년	김창희	서울	경기고	연세대 법대	32
	2009년 1월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 법대	34
순천지청장	2008년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2009년 1월	차동언	울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순천지청차장	2008년	조상수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28
	2009년 1월	임재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09년 8월	김희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해남지청장	2008년	이석환	광주	광주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2009년 1월	문찬석	전남 영광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34
	2009년 8월					
전주지검						
차장	2008년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정윤기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8
1부장	2008년	이광진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정인균	전북 순창	전주고	한양대 법대	31

	2009년 8월	하충현	경남 창녕	배명고	한양대 법대	33
2부장	2008년	이광진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년 1월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신환	전북 전주	경신고	경희대 법대	35
군산지청장	2008년	김충률	전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법대	26
	2009년 1월	이은중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8월	이의경	경북 예천	대구대륜고	고려대 법대	28
정읍지청장	2008년	박형관	전남 보성	광주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이진우	전남 영광	광주동신고	한국외대 법대	23
	2009년 8월	이진우	전남 영광	광주동신고	한국외대 법대	23
남원지청장	2008년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년 1월	이형택	전북 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 법대	34
	2009년 8월	이형택	전북 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 법대	34
제주지검						
차장	2008년	손기호	부산	부산 해동고	서울대 법대	27
	2009년 1월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2009년 8월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일고	고려대 법대	29
1부장	2008년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년 1월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8월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부장	2008년	이승환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33
	2009년 1월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09년 8월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 법대	35

5. 2008 ~ 2009년 주요 수사 관련부서 인사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대검 중수부장							
2008년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청주지검장(2007)	부산지검장-법무연수원장
2009년 1월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24	대검 기획조정부장(2008)	사직
2009년 8월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009초)	-
대검 수사기획관							
2008년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3차장-법무부 기초실장
2009년	홍만표	강원	대일고	성균관	27	법무부 대변인	서울고검 송

1월		삼척		대 법대			무부장
2009년 8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대검 중앙수사1과장							
2008년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평택지청장-대검과학수사기획관
2009년 1월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중앙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범죄정보기획관
2009년 8월	노승권	대구	대구 실인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중앙 첨단범죄수사2부장	-
대검 중앙수사2과장							
2008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특수2부장-포항지청장
2009년 1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2009년 8월	이석환	광주	광주 송일고	고려대 법대	31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2) 대검찰청 공안부

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대검 공안부장							
2008년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3	삼성비자금 특별수사본부장(2007)	대구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
2009년 1월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울산지검장(2008)	서울중앙지검장
2009년 8월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춘천지검장(2009초)-부산지검1차장(2008)	-
대검 공안기획관							
2008년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장	서울중앙2차장-대전지검차장
2009년 1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대검 대변인	서울중앙2차장
2009년 8월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29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대검 공안1과장							
2008년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공안1부장-통영지청장
2009년 1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009년 8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대검 공안2과장	-
대검 공안2과장							
2008년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인천지검 부부장 (법제처파견)	대검 공안1과장
2009년 1월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대검 공안2과장
2009년 8월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대구지검 공안부장	-
대검 공안3과장							
2009년 3월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남원지청장	-

3) 일반 형사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직책/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8년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수원지검 1차장 (2007)	서울고검차장-법무부 검찰국장
2009년 1월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1차장 (2008)	춘천지검장
2009년 8월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1차장 (2009초)-대검미래기획단장(2007)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2008년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대변인-서울중앙3차장
2009년 1월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수사기획관
2009년 8월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법무부 법무심의관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2008년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29	대검 공안1과장	사직
2009년 1월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일고	고려대 법대	29	법무부 법무심의관	제주지검 차장
2009년 8월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2008년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검 대변인

2009년 1월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형사2부장
2009년 8월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08년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서울북부지검형사3부장	원주지청장-인천지검2차장
2009년 1월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 법대	30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고검 검사
2009년 8월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2008년	김하중	전남 담양	사례지오고	고려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총무부장	목포지청장
2009년 1월	염동신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부산동부지청차장
2009년 8월	박군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형사1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2008년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29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2009년 1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1부장
2009년 8월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2008년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서울고검 검사-고양지청차장
2009년 1월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2009년 8월	이 옥	전남 고흥	사례지오고	고려대 법대	31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사직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2008년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대검 감찰2과장	전주지청장-법무부 감찰담당관
2009년 1월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충주지청장
2009년 8월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2008년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법무부 국제법무부과장	법무연수원 교수-법무부 정책기획단장
2009년 1월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인천지검 특수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2009년 8월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32	안산지청 3부장	-
----------	-----	-------	-----	--------	----	----------	---

4) 선거 및 공안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직책/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2차장	서울고검공판부장-대검기획조정부장
2009년 1월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대검 공안기획관	대전지검 차장
2009년 8월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대검 공안기획관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008년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 검사(국정원 파견)
2009년 1월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 공안1과장	통영지청장
2009년 8월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2008년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감찰1과장-평택지청장
2009년 1월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수원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2009년 8월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

5) 기업범죄 및 특수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직책/인사시점	이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 직책	이후 직책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8년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인천지검 2차장	법무부 기조실장-청주지검장
2009년 1월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기조실장

2009년 8월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법무부 대변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2008년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대검 중수1과장	수원지검2차장-인천지검1차장
2009년 1월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대 동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원주지청장
2009년 8월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해광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2008년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법무부 보호기획과장	충주지청장-수원지검2차장
2009년 1월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 중수2과장	포항지청장
2009년 8월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2008년	김광준	경북 경주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동부형사1부장-대구서부지청차장
2009년 1월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해광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서울중앙특수1부장
2009년 8월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1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8년	봉 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29	대검 혁신기획과장	여주지청장-대검 공안기획관
2009년 1월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법무연수원 위원	법무부 대변인
2009년 8월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8년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부장	대검 중수1과장-대검범죄정보기획관
2009년 1월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 정책기획과장	여주지청장
2009년 8월	진경준	전남 목포		서울대 법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2009년 1월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형사2부장
2009년 8월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2008년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대검정보통신과장	법무연수원 교수-진주지청장

2009년 1월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법무연수원 기획 과장	인천지검 형사1 부장
2009년 8월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중앙지검 총 무부장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2009년 1월	노승권	대구	대구심 인고	서울대 법대	31	서울서부지검 사5부장	형 대검 중수1과장
2009년 8월	위재천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법대	31	서울동부지검 사4부장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2008년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강릉지청장-부 천지청 차장
2009년 1월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법무부 상사법무 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2009년 8월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대검 조직범죄과 장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2008년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 외사 부장	서울고검 검사 (국민권익위 파견)
2009년 1월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서울동부지검 사2부장	서산지청장
2009년 8월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서울남부지검 사4부장	-

6. 2008 ~ 2009년 법무부 주요 직책 보직자들

- 참여연대가 살펴본 법무부의 주요 직책은 국실장급인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그리고 과장급 가운데 요직이라고 평가되는 검찰과장, 형사기획 과장, 공안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법무부 대변인,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법 질서/규제개혁담당관 등 모두 10개 직책이다.
- 이들 주요 직책을 맡은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을 거친 후 어떤 직책으로 옮겨갔는지', 또 이들 주요 직책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대구경북(TK) 지역 출신과 고려대 출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 법무부 주요 10개 직책 담당자 중 대구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 현황

인사시점	법무부 주요 직책	검사	지연/학연
2008년	법무실장	한상대	고려대
	범죄예방정책국장	박기준	경북고
	감찰관	곽상욱	고려대
	공공형사과장(현 공안기획과장)	이금로	고려대
2009년 1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	고려대
	검찰국장	한상대	고려대
	기획조정실장	김수남	대구
	감찰관	곽상욱	고려대
2009년 8월	공공형사과장(현 공안기획과장)	이상호	고려대
	검찰국장	최교일	고려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구고
	공안기획과장	이상호	고려대
	대변인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법무부의 10개 주요 직책에 임명된 검사 중에서 대구경북(TK)지역 출신과 고려대 출신의 인물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 쉽게 확인되었다.

특히 2009년 1월과 8월 두 차례의 인사에서는 이들 10개 직책 중에서도 핵심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공안 관련 직책인 법무부 검찰국의 공안기획과장(과거 공공형사과장 또는 검찰3과장)은 줄곧 TK와 고려대 출신들을 임명했음을 알 수 있다.

검찰국장에는 2009년 1월에는 한상대 검사(고려대), 8월에는 최교일 검사(경북 영주, 경북고)가 임명되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2009년 1월에는 김수남 검사(대구), 8월에는 최재경 검사(대구고)가 임명되었다. 공안기획과장에는 2008년 3월에는 이금로 검사(고려대)가 임명되었고 2009년 1월에는 이상호 검사(고려대)가 임명되었고 8월 인사에서 이 검사는 유임되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말까지 세 차례의 검찰인사가 있었는데, 이들 법무부의 10개 주요 직책에는 총 22명이 임명되었고, 그 중 10명이 대구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이다(중복된 경우는 제외).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전인 2006년과 2007년 두 해 동안 이들 주요 직책(2008년에 신설된 법 질서규제개혁담당관 직책 제외 총 9개 직책)에 임명된 사람이 16명이었는데 그 중 대구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 비중은 3명에 불과하다.

-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는 현 집권세력과 가까운 지연과 학연을 가진 검사들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는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 직전 2년 법무부 주요 10개 직책 담당자 중
대구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 현황 (2006 ~ 2007년)

인사시점	법무부 주요 직책	검사	지연/학연
2006년 2,3월	홍보관리관	김수남	대구, 청구고
2007년 3월	법무실장	한상대	고려대
	보호국장	이상도	경북 영일, 대구고

3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주요 수사

○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1.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적용 수사
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수사
3. 법원의 세금소송 중재수용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 수사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및
교사 징계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5.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 참가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 수사
6.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관련 YTN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수사
7.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2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공동공갈·강요 혐의 적용 수사
8.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1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 혐의 적용 수사
9.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수사
10. 환경운동연합 공금횡령 사건 및 최열 환경재단대표 표적 수사

○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11. 박연차 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12.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휴캠프 인수 비리·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등 탈세 사건 수사
13.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연루된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 수사
14. 광영옥 대한통운 전 사장 비자금 조성·횡령 및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15.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기록물 보관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방에 대한 수사

16. 신성해운 불법로비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표적 수사
17. 강무현 참여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수사

○ 집권세력 관련 수사

18.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 청탁 '그림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19.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각종 의혹 수사
20. 스테이트윌서포장 공경식 대표 횡령 및 정·관계 로비와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21. 대통령 사돈관계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조성 및 해외부동산 취득·육군 마일즈 사업 납품 사기·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22.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수영 OCI 회장 일가·한승수 전 총리 아들 부부 등에 대한 OCI 주식 불법거래 의혹 수사
23.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촉발집회진압 경찰폭력 피고소 사건 수사
24. 대통령 부인의 사촌 김옥희 씨 공천로비 금품수수 사건 수사
25. 한나라당 유한열 고문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시도 사건 수사

○ 공안 관련 수사

26.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사건 수사
27.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수사
28.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적용 수사
29.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혐의 적용 수사
3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 선거 관련 수사

31. 4.9 총선 당선 국회의원 선거법 등 위반 사건 수사
32.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를 선거법 위반 사건과 전교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3. 김귀환 서울시의장 선거 금품제공 사건 수사

○ 기타 수사

34.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35.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 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적용 기소
36. 재벌가 2·3세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
37.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관련 수사
38. KT 남중수 및 KTF 조영주 사장 배임수재 사건 수사

1.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2부장 임수빈(2009.01까지)
- 수사/기소/1심 :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형사6부장 전현준 -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2009.02 이후,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06.21 검찰총장 후보자 이전)
- 1심/항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형사6부장 장호중 - 담당검사 위와 같음(2009.08~)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6월 19일, 검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사 의뢰 받음.
- 7월 3일, 7일, 검찰, MBC에 프로그램 원본자료 제출 요청(PD수첩측, 거부함)
- 7월 11일, 검찰 제작진 4명에게 검찰 출석통보(PD수첩측, 거부함)
- 7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 검사, “황우석 사건 때처럼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 진실 규명에 착수한다면 차장검사 개인의 소견으로는 수사를 보류할 의향이 있다”고 발언함.
- 7월 24일, 검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 7월 29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검찰은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PD수첩의 취재 원본 파일을 공개하는 식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보도 내용 가운데 대표적으로 ‘19군데’에서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 9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 하여금 출석 요구에 3번 이상 응하지 않는 피의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수사를 하거나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도록 하겠다’는 발언 이후

검찰 계속 소환 통보했으나 ‘PD수첩’ 측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수사 교착 상태

- 2009년 1월 7일, 수사주임검사 임수빈 형사2부장, 사표 제출,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강제소환 등과 관련하여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2월 정기인사 후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에 사건 재배당함.
- 2월 21일, 수입육협회 박 모 회장이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수입육 판매 가맹점들이 손해봤다며 ‘PD수첩’ 제작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 2월 26일, 해당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영문자료 번역한 정지민 씨를 상대로 제작진의 의도적 오역 여부 집중 조사함.
- 3월 3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PD수첩’ PD 6명 등 제작진 전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 접수함.
- 3월 19일, 검찰, ‘PD수첩’ 제작진 6명에 대해 소환 통보함. 김보슬 PD를 출국금지 조치함.
- 3월 25일, 검찰, 이춘근 전 ‘PD수첩’ PD 체포해 조사 후, 27일 석방함.
- 3월 26일, 조능희 ‘PD수첩’ 책임PD 등 제작진 6명의 자택 압수수색함.
- 4월 15일, 검찰, ‘PD수첩’ 김보슬 PD 체포해 조사 후, 17일 석방함.
- 4월 8일과 22일, 검찰, 두 차례에 걸쳐 취재 원본자료와 제작진 체포를 위해 MBC 여의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노조 반발 등으로 무산됨.
- 4월 27일, 조능희·송일준 PD와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후, 29일 석방함.
- 6월 18일, 검찰, ‘PD수첩’ 제작진 불구속 기소함.
조능희 CP(책임PD)와 김보슬·송일준·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당시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에 100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함. 이 때 검찰이 김은희 작가의 ‘다음 한메일넷’에 개설한 메일 계정에서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메일을 압수해 이 가운데 3건의 메일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됨.
- ※ 8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백서 -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촛불집회 관련 수사백서를 내놓으면서 촛불집회의 주요 원인과 배경으로 “PD수첩과 일부 신문 보도가 불안감을 증폭시켜 시위에 참가토록 하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주장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12월 21일, 검찰, 조능희 책임PD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 송일준·이춘근 PD에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함.

- 2010년 1월 20일, 법원, 'F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함.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 1월 21일, 검찰, 항소장 제출

5. 약평

언론의 기능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임에도 정부정책의 잘못을 따져보는 비판적 프로그램마저 극히 일부의 오류를 문제 삼아 형사범죄로 만든 사건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 수사임.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담당 부장검사가 지휘부와의 갈등 속에 사표를 제출한 사건으로서 검찰의 상명하복관계, 위계질서 등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보여주었으며, 검사도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음. 결국 법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검찰 수사와 기소의 문제가 확인된 사건임.

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경제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쓴 일부의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며 구속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

- 내사종결 :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5부장 김하중*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김주선 (2009.01 이전)

- 기소/1심 :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이두식
- 담당검사 오현철 (2009.01 이후)
- 1심/항소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김영진 - 위와 같음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11월 3일, 김경한 법무부장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과 관련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힘.
- 2008년 12월 5일, 검찰, 포탈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 인적사항 넘겨받음.
(2009년 2월 10일, 검찰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
- 2008년 12월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글에 대한 진정사건 접수 후 내사 착수, 신원파악함. 그러나 법적처벌 대상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함.
- 2008년 12월 29일, 검찰, '미네르바'의 12월 29일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 착수함.
- 2009년 1월 2일,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박대성 씨임을 확인함.
- 1월 7일, 검찰, 박대성 씨 긴급체포함.
- 1월 9일, 검찰, 박대성 씨가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함(10일 영장발부됨)
- 1월 22일, 검찰,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구속 기소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1월 28일, '미네르바' 박대성 씨,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유영현 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2월 5일, '미네르바' 박대성 씨, 보석 신청 기각(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
- 3월 11일, '미네르바' 박대성 씨 측 김갑배 변호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 추가 제출
- 4월 13일,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4월 20일, 박대성 씨 1심 무죄 판결 및 석방,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됨.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유영현 판사))
- 4월 23일, 검찰, 항소장 제출
- 12월 10일,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열림.

5. 약평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 논객에 대한 수사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의 대표적 사례임.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인지의 여부 모두 논란이 되었으며, ‘형사처벌’ 조항이 되기에는 애매모호한 ‘공익’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위헌성이 다분한 전기통신기본법 처벌 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도 검찰 수사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임.

실사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몰각한 수사인데,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시사 후 검찰이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발미삼아 구속수사에까지 이른 사건이며,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표현의 자유를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 기소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됨.

3. 법원의 세금소송 중재수용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KBS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정부와 보수정치세력의 압박이 매우 거센 2008년 여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한 것을 일부 세력이 문제삼자, 검찰이 회사가 실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액인 2천448억 원을 다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수사한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조사부장 박은석 - 담당검사 이기욱, 장성훈
- 1심 :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조사부장 최종원 - 담당검사 장성훈
- 항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조사부장 손준호 - 담당검사 장성훈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5월 14일, 세금 소송을 담당했던 KBS 전직 간부 조 모 씨, 정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검찰, 정연주 사장 6월 17일과 19일, 26일 1,2, 3차 소환 통보함.
- 8월 12일, 검찰, 정연주 전 사장 체포해 조사 후 14일 석방함.
- **8월 20일, 검찰, 정연주 전 사장 불구속 기소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6월 22일, 검찰, 정 전 사장에 징역 5년 구형
- **2009년 8월 18일, 법원,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이규진 부장판사, 장재용 · 최규진 판사))
- 2009년 8월 21일, 검찰, 항소장 제출

5. 약평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소송중단이었으며,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했는데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 비정상적인 수사로 검찰 기소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매우 컸음. 실제 1심 무죄 판결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남.

대표적 언론기관인 KBS를 통한 여론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친정부 인사가 아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형사처벌까지 시도한 사건으로 검찰권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 실현에 동원된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됨.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및 교사 징계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검찰 등 교육·공안당국이 총망라되어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와 처벌을 강행했던 사건임.

특히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짐.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수사

< 대검찰청(수사지휘) >

- 대검차장 문성우(검찰총장 공석) - 공안부장 노환균 - 공안기획관 오세인 (2009.08 이전)
- 검찰총장 김준규 - 공안부장 신종대 - 공안기획관 봉 옥 (2009.08 이후)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공석 - 1차장 정병두 - 공안2부장 윤웅걸 (2009.08 이전)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2009.08 이후)

< 전국 각 해당 지검 및 지청 >

*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

< 수원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박영렬 - 2차장 윤갑근 - 공안부장 변창훈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6월 18일, 전교조 1차 시국선언 발표함.(소속 교사 17,147명 서명)

- 6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적극 가담한 교사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참여 교사 명단과 관련 증거를 수집할 것을 지시함.

- 6월 22일, 전교조, 1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명단 공개함.(소속 교사 16,172명 참여)

- 6월 26일, 교과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 지도부 88명을 중징계(정진후 위원장 등 중앙집행위원 10명은 해임, 시도지부장 및 전임자 78명은 정직)와 함께 검찰 고발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 전원 징계방침을 결정함.(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 위배로 판단함.)

- 6월 28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안병만 교과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고발 결정함.

- 6월 29일, 경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16명이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철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하려던 것을 모두 강제연행함. 30일, 모두 석방됨.

- 7월 2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문 초안 형태로 발표함.

- 7월 3일, 경찰, 전교조 본부(영등포경찰서)와 전교조 서울지부(동작경찰서) 압수수색함. 경찰 관계자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6월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힘.

창원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4명 고발한 경남교육청 관계자 조사함. 대구지검 김천지청(대구지검 공안부장 : 이정희, 김천지청장 : 박진영), 전교조 경북지부 간부 4명에게 출두요구서 발송함.

- 7월 6·7일, 경찰,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10일부터 13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통보함.

- 7월 8일, 교과부,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간부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직권으로 고발함.(다른 15개 시도교육청과 달리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아 왔음.)

- 7월 14일, 부산지검 공안부(김승식 부장검사),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과 남광우 사무처장을 소환 조사함.

- 2009년 7월 17일, 정부, 대검에서 공안대책협의회 열고 공무원·교사의 시국대회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함.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야당 및 재야 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공격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비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 7월 19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함.(전교조 비소속 교사 포함 28,635명 참여)

- 7월 23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명단 공개함.(28,711명 참여)
- 7월 31일, 교과부,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 지도부 89명을 중징계(정진후 위원장은 파면,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지부장 21명은 해임)와 함께 검찰에 재고발하기로 결정함.
- 8월 25일, 교과부, 전교조 지도부 83명(경기지부 간부 6명 제외)을 검찰에 재고발함.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1차 시국선언 당시와 같이 “법리 검토 등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고발 거부한데 따른 것.)
- 8월 28일, 경찰, 전교조 본부 간부 25명의 인터넷 이메일 계정과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함.
- 9월 29일, 경찰, 전교조 본부 및 지부 간부들의 계좌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착수함.
- 10월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 정진후 위원장·김현주 수석부위원장·박석균 부위원장·임춘근 사무처장·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간부 5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함.(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부산지검 공안부(임석필 부장검사),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 등 2명에 대해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 10월 21일, 대검 공안부, 전교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 40명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 약식기소(벌금형)함.** 봉 옥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함.
- 11월 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자회견을 열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 등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에 대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힘.
- 11월 3일, 교과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힘.
- 11월 18일, 경찰, “2차 시국선언 수사과정에서 전교조 간부 27명이 모두 묵비권을 행사해 시국선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다”고 밝힘.
김상곤 경기교육감, 대법원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냄.
- 12월 10일, 교과부, 김상곤 경기교육감 검찰에 고발함.(직무유기 혐의)
- 12월 22일,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 김 경기교육감 고발 건에 대해 “늦어도 1월 초까지는 피고발인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힘.
- 1월 11일, 수원지검 공안부, 김 경기교육감에 대해 14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함.

- 1월 14일, 수원지검 공안부, 김 경기교육감에 대해 20일까지 출석할 것을 재통보함.
- 2010년 1월 25일, 경찰, 전교조·전공노 간부 69명에 출석 통보함.(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 :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박용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으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
- 1월 27일, 경찰, 전교조·전공노 소속 조합원 224명에 추가로 출석 통보함.(경찰의 출석요구대상이 293명으로 늘어남.)
- 1월 28일, 김상곤 경기교육감, 수원지검에 출석함. 검찰은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이유 등을 물었다”며 “김 교육감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이미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힘.
- 2월 1일, 전교조,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함.(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 2월 25일, 경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소환 조사함.(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 3월 2일,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84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함.)
- **3월 5일, 수원지검 공안부,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함(직무유기 혐의)**
윤갑근 2차장 검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관련법을 위반했고, 검찰의 이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일까지 해당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는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또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며 “법치 확립 과정에서 전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다”고 밝힘.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10년 1월 19일, 법원,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 선고함.**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조한연 사무처장·김지성 정책실장·김재균 교권국장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함.(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근태 판사) 검찰은 앞서 노 지부장에는 징역 8월, 간부 3명에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함.
- **2월 4일, 법원,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 판결함.**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벌금 100만원을,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함.(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 검찰은 앞서 임 지부장에는 징역 1년, 김 정책실장과 이 사무처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함.

- 2월 11일, 법원,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에 대해 유죄 판결함.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이상은 약식기소돼 정식재판 청구)함.(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 검찰은 앞서 윤 지부장에는 징역 10월, 다른 3명에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구형함.

- 2월 25일, 법원,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 판결함.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영주 수석부지부장, 오완근 사무처장에 대해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찬현 지부장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함.(대전지법 형사 5단독 김동현 판사) 검찰은 앞서 이 지부장에는 징역 1년, 김 부지부장과 오 사무처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함.

5. 약평

지난 2009년 6월 18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과부의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에서 교과부는 스스로 "시국선언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교과부는 이 문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성실·복종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서도 "서명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음. 또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음.

전교조 전북지부와 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인천지부·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도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 시국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권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 평가됨.

5.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 참가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2009년 7월 19일에 주최한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2차 범국민대회'에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등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의 범국민대회 참가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교조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계와 처벌에 나섬.

또 별건수사 형태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로 올라가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계좌추적과 함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을 벌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대검 공안부 >

- 수사 : 검찰총장 김준규 - 대검 공안부장 노환균 - 공안기획관 오세인(2009.08 이전)

- 수사/기소 : 검찰총장 김준규 - 대검 공안부장 신종대 - 공안기획관 봉욱(2009.08 이후)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공석 - 1차장 정병두 - 공안2부장 윤응걸(2009.08 이전)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2009.08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7월 16일, 민주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2차 범국민대회(시국대회)를 19일에 열겠다"고 밝힘.

- 2009년 7월 17일, 정부, 대검에서 공안대책협의회 열고 공무원·교사의 시국대회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함.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야당 및 재야 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공격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 원칙에 비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주재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는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 행안부 복무담당관, 노동부 공공노사관계정책단장, 경찰청 정보4과장, 대검 공안 2·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이 참석함.)

- 8월 4일, 행정안전부, 시국대회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검찰 고발함. 또 이 중 15명을 포함한 105명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소속기관에 통보함.
- 8월 6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담당 국·과장 등을 검찰에 고발함.(직권남용 혐의)
- 8 ~ 9월중, 세 노조 위원장 소환 조사함.(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 **10월 21일, 대검 공안부,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정연재 민공노 위원장·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세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불구속 기소함.**
봉 옥 공안기획관은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함.
- 12월 1일,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공노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함.
- 2010년 1월 25일, 경찰, 전공노·전교조 간부 69명에 출석 통보함.(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 :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박용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으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
- 1월 27일, 경찰, 전공노·전교조 소속 조합원 224명에 추가로 출석 통보함.(경찰의 출석요구대상이 293명으로 늘어남.)
- 3월 2일,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84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10년 1월 20일, 법원, 김 모 민공노 부산본부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함.(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

6.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관련 YTN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지난 2008년 5월 29일, YTN 이사회가 구본홍 전 MBS 보도본부장(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방송상임특보)을 사장으로 내정하고, 7월 17일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구 사장이 선임되면서 YTN 노조가 2009년 4월 1일까지 258일간에 걸쳐 주주총회 무효와 구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음.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한 YTN 노조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수사·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공안2부장 윤웅걸

(2009.08 이전. 단 천성관 지검장은 2009.06.21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 공소유지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2009.08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5월 29일, YTN 이사회, 구본홍 전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상임특보를 차기 사장으로 내정함.(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
- 7월 14일, YTN 노조의 저지로 사장 선임 위한 임시주주총회 연기됨.
- 7월 17일, YTN 임시주주총회에서 구본홍 사장 선임.
전국언론노조, YTN 주주총회 무효와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및 8월 1일 파업 결의.
- 7월 18일, YTN 노조, 사장실 점거·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함.
- 8월 4일, 구본홍 사장, 사장실 출근 강행해 실·국장 회의 주재하고,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조치’ 등을 경고함.

구 사장은 사내계시관 통해 “조합원의 비서실 집단 점거 농성으로 사장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특가법상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뒤, 특히 “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노사관계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이와는 별도로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며 거듭 형사처벌을 경고한 뒤,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관계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8월 12일, YTN 새 노조위원장에 노종면 씨 선출됨.
- 10월 6일, YTN 인사위원회, 노종면 위원장, 권석재 사무국장, 현덕수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에는 해임·임장혁 ‘돌발영상’팀장 등 6명에는 1~6개월 정직·8명에는 1~3개월 감봉·13명에는 경고조치함.
- 10월 31일, 구본홍 당시 YTN 사장, 노조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대해 업무방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냄.
- 12월 8일, 법원, 구본홍 당시 YTN 사장이 YTN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 재판장 이동명 판사) 재판부는 “구 사장의 출퇴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하는 행위, 구 사장이나 실국장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때마다 노조는 1천만 원, 노조원은 100만원씩 내야 한다”고 밝힘.
- 재판부는 또 노조원들이 “학살자는 물러가라”, “위선자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도 사용해서 안 된다고 결정함. 그러나 재판부는 “구본홍은 물러가라”, “구본홍은 집에 가라” 등 구호까지 금지해 달라는 구 사장 측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런 구호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 2009년 3월 21일, 법원,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현덕수 전 위원장·조승호 기자·임장혁 전 ‘돌발영상’팀장 등 집행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함.
- 3월 22일, 경찰(서울 남대문경찰서), 노종면 위원장·현덕수 전 위원장·조승호 기자·임장혁 전 ‘돌발영상’팀장 등 집행부 4명 긴급체포함. 경찰은 ‘YTN 사측이 그동안 노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5차례 고소·고발했으며, 노 위원장 등이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함.
- 노종면 위원장은 “지금까지 네 차례 이상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더욱이 경찰의 최근 출석 요구에 대해선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담당 형사와 통화까지 마쳤다”며 “경찰이 23일부터 예정된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체포시기를 맞춘 것”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함.

- 3월 24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 구속. 현덕수 전 위원장·조승호 기자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임장혁 전 팀장은 불구속 수사 지휘 내림.(영장실질심사 :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찰이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임장혁 전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함.
- 3월 24일, YTN 노조, 노종면 위원장에 대해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해 구속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요구일(17일)보다 늦은 18일에 도착하도록 의도적으로 발송을 지연했다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은 23일부터 시작되는 합법적인 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주장함. 그 증거로 22일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과 YTN 취재진간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함.
- 김기용 서장은 “노조원 체포가 파업 때문이냐”는 YTN 기자의 질문에 “23일이 총파업을 하는 시점이니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답함. “결국 파업 때문이나, 파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나”는 YTN 기자의 질문에 김 서장은 “다는 그렇게 얘기할 순 없는데 아마 총파업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 같다”며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와 함께 “검찰 쪽에서도 나름대로 해당 관련 기관의 다른 시각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3월 30일, 경찰,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20명 사건 검찰 송치함.
노종면 위원장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함.
- 4월 1일, YTN 노조, 노사 합의에 따라 258일간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끝남.(노사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취하하고 노조의 총파업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
- 4월 2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 석방 결정함.(구속적부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양재영 부장판사), YTN 노사 협상 타결로 노조 총파업 끝남.
- 5월 22일, 검찰,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노조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함.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 등 3명을 각각 벌금 200~300만원에 약식기소, 13명은 기소유예함.(구본홍 사장의 출근 저지·사장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 업무방해 등) 검찰은 “YTN 노사 합의로 사측이 고소 취하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노 위원장 등 주동자 4명에 대해) 기소 결정했다”고 밝힘.
- 6월 30일, YTN 노조, “2009년 3월 24일 경찰(서울 남대문경찰서)이 조합원 20명의 이메일 9개월분(2008.7~2009.3)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7월 1일, 경찰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줌.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8월 27일, 검찰, 노종면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구형함.
- 9월 1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선고함. 현덕수 전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 12월 10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에 대한 2심에서 벌금 2천만원 선고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30부 : 최완주 부장판사)

※ 2009년 11월 13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 등 YTN 노조 조합원 3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10월 16일에 제기)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과중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 박기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노조는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 출신이 대표 이사로 선임되자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이익 도모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며 “또 7월 17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9월 2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공백 초래 등 배경에 비춰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과중하다”고 말함. 그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6명과 감봉 처분을 받은 8명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함.

5. 약평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현직 언론인이 구속 수사를 받은 것은 지난 1999년 ‘통합방송법’에 반대해 연대파업을 벌인 KBS와 MBC 노조 간부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의 사태임. 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법조출입기자 등이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음.
국내 뿐 아니라, ‘국제엠네스티’, ‘유엔인권이사회’, ‘국경 없는 기자회’,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사회와 해외 언론인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특히 258일간의 구분홍 사장 반대 투쟁과정에서 5차례에 걸친 사측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단체 협상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 진행된 YTN 노조의 합법적 파업 직전에 출석요구서 발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이를 빌미로 노종면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파업 등 노조 활동의 무력화를 염두해둔 정권 차원의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검찰과 경찰이 집권세력의 이 같은 의도에 부응해 현직 언론인을 구속 수사한 부끄러운 사례로 남게 되었음.

7.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2차 조종동 광고불매운동 공동공갈·강요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1차 조종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운동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오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법원이 누리꾼들의 집단적 항의전화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하면서도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해 조·중·동에 광고하되 <한겨레>와 <경향신문>엔 광고를 내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적극적 불매운동으로 전환함.

이에 대해 검찰이 1차 불매운동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김성균 언소주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함.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첨단범죄수사2부장 노승권

(2009/08 이전. 단 천성관 지검장은 2009.06.21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첨단범죄수사2부장 위재천(2009.08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6월 5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8일부터 2차 조종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6월 8일, 언소주, ‘조종동 집중 광고기업’ 중 ‘광동제약’을 ‘불매운동 1호 기업’으로 선포하고 운동 돌입함. 9일, ‘광동제약’ 측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광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 6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조종동 광고주 불매운동’ 형사처벌 여부 검토 중이라고 밝힘.
- 6월 11일, 언소주, ‘불매운동 2호 기업’으로 삼성그룹 5개 계열사 대상 품목 20여개를 선

정하고, 불매운동에 돌입함.

- 6월 11·12일, 검찰, 광동계약 임원 1명과 연소주와의 광고 협상 담당자 1명을 참고인 조사함.
- 6월 18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정언론시민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 김성균 연소주 대표와 카페 운영진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인 공갈 및 강요 혐의)
- 6월 30일, 검찰, 김성균 연소주 대표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함.
- 7월 13일, 연소주, '불매운동 3호 기업'으로 자유투어·하나투어·롯데관광을 선정했다고 밝힘.
- 7월 29일, 검찰, 김성균 연소주 대표와 석 모 미디어행동단 팀장을 불구속 기소함.(공동공갈·공동강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9월 3일, 연소주,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는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9월 21일, 법원, 연소주의 2차 불매운동 공판에서 비공개로 재판 진행함. 재판부는 “검찰은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단과의 협의 아래 피고인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 퇴정을 명령했다”고 밝힘.(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 김정원 부장판사)
- 9월 28일, 검찰, 김성균 연소주 대표에 징역 4년을, 석 모 미디어행동단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함.
- 10월 29일, 법원, 연소주 2차 불매운동에 대한 1심에서 김성균 연소주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석 모 미디어행동단 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함.(공동공갈 혐의는 유죄, 강요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5. 약평

법원 1심 판결에서조차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범주로 인정한 연소주의 2차 불매운동에 대해서 검찰은 처음부터 법리적 판단에 앞서 해당 업체의 피해만을 주시하면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실제 검찰은 1차 때와는 달리 업무방해가 아닌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끌어들이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이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글을 범죄화하기 위해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기소권을 남용한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사례라 평가할 수 있음.

8.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1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촛불시위에 대한 조중동 신문의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한 대항으로 벌어진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누리꾼 2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첨단범죄수사부장 구분진 - 검사 이영재 등(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6월 20일 김경한 법무부장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단속 특별지시
- 6월 20일, 검찰, 수사 착수
- 6월 23일, 대검 형사부(민유태 부장검사)가 주최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 참석자 :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 이동열 첨단범죄수사과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구분진 첨단범죄수사부장, 이조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나현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장
- 7월 3일,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팀장 구분진 첨단범죄수사부장),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자와 글을 올린 빈도가 높은 누리꾼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힘.
- 7월 8일, 검찰, 누리꾼 20여 명 출국금지 조치
- 8월 19일, 검찰, 카페 운영진 이모 씨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8월 21일, 검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와 광고 중단 운동 글을 많이 올린 양모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함.

- 8월 29일, 검찰, 누리꾼 24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함.(2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기소, 나머지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기소 - 피고인 전원 정식재판 청구)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2월 19일,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유죄 선고함.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나머지 누리꾼 23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4월에 집유 2년, 징역 6월에 집유 2년, 벌금 100만~300만원씩의 유죄 선고. 이 가운데 벌금 100만원을 받은 10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

- 2009년 12월 18일, 2심 재판에서 24명의 피고인 가운데 9명에 대해서만 무죄 판결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이용세 부장판사)

카페 개설자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는 등 나머지 누리꾼 15명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해 집행유예나 벌금 200만~300만원, 선고유예 등 판결함.

- 2010년 1월 21일, 누리꾼 24명,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제출함.(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배당된 것에 따른 것)
- 2010년 2월 6일, 대법원, 누리꾼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은 각하했으나, 사건을 대법원 1부로 재배당함.

5. 약평

비록 1심에서 검찰의 기소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의 행위방식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자유로운 주체들인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참여를 제안하고 방법을 설명한 것에 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한 것이 매우 부당한 사건임.

9.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개요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5월 2일부터 서울시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연 인원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벌였던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 혐의, 교통방해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근거로 수사, 기소한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대검찰청 >

- 검찰총장 임채진 - 공안부장 박한철 - 공안1과장 정점식 등

< 서울중앙지검 >

-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2차장 국민수, 3차장 김수남
- 형사4부장 지익상, 공안2부장 이영만, 첨단범죄수사부장 구본진 등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5월 27일, 검찰, 공안대책회의 개최, 촛불집회에 대한 처벌 방침 발표
- 그 후 집회참가자 연행 되는데로 입건, 일부는 약식기소, 일부는 불구속기소, 일부는 구속기소함
- 7월 1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 구속기소
- 11월 8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5명 구속
- 11월 24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5명 구속기소
- 10월 2일 현재, 집회참가자 34명 구속 기소, 90명 불구속 기소, 1100여 명을 50~4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 등 진행(12월 6일 현재, 구속 기소자는 70명)

4. 재판 경과 및 결과

- 단순참가자 일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선고됨.
- 벌금형에서 집행유예형, 실형 등 다양하게 선고됨
- 일부의 경우는 무죄 선고되기도 함(단체휴교시위 휴대전화 메일발송 사건의 경우, 무죄)
-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조항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재판 또는 선고가 연기된 경우가 있음.
- 2008년 8월 11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사건과 관련해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함.
- 10월 9일, 집시법상 야간 옥외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함.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 2009년 4월 15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2007년 6월2 9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사건과 관련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함.
- 2009년 5월 1일,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함.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이만영 부장판사)
-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5(위헌) : 2(헌법불합치) :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함.
- 11월 8일,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함.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재식 판사)

5. 약평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참가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구시대적이자 위헌적인 야간집회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해 불법집회로 규정함으로써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려 한 것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문제 삼아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임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수사임. 지난 2009년 9월 24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음.

10. 환경운동연합 공금 횡령 사건 및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1. 사건개요

환경운동연합의 일부 실무진들이 정부나 기업, 시민들이 낸 보조금이나 후원금 일부를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수사한 사건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환경련의 공금을 횡령했거나 또는 다른 비리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주장하며 수사에 나선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3부장 김광준 (2009.01 이전)
- 수사/기소 :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특수3부장 김기동 (2009.01 ~ 08)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 9월 19일, 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출국금지조치
- 10월 13일, 공금횡령(원고료 등 개인계좌 보관 등) 혐의로 환경련 전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15일, 기각됨)
- 10월, 검찰, 최열 대표 관련 오 모 씨(개발업체 대표이사) 소환조사
- 10월 31일, ‘서해안 살리기’ 시민성금 횡령 등 혐의로 환경련 전 간부(기획운영국) 김 모씨 구속
- 11월 7일, 검찰, 환경재단 압수수색
- 11월 10일, 산림조합중앙회 지원금 횡령 등 혐의로 환경련 전 간부(시민사업국) 김 모씨 소환
- 11월 13일, 검찰, 최열 대표 소환조사
- 11월 19일, 검찰, 최열 대표 2차 소환조사

- 12월 1일, 검찰, 최열 대표 구속영장 청구(3일, 기각됨)
- 12월 19일, 검찰, 최열 대표 관련 오 모 씨 2차 소환조사
- 2009년 1월 15일, 2월 24일, 최열 대표 관련 오 모 씨 3차, 4차 소환조사
- * 최열 대표 관련 수사를 위해 2009년 3월초까지 6개월여 동안 76여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음.
- 2009년 4월 1일, 검찰, 최열 대표·환경련 전 간부 김도 씨 불구속 기소함.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제)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4월 24일, 1심 첫 공판 열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5. 약평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범죄혐의를 수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 과도한 검찰권 행사였다는 비판을 받았음.

특히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관련하여서는 범죄혐의가 뚜렷해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관련 사실을 유포하였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등 한반도대운하 등 환경과괴 개발위주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사인 최열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를 의도한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했음.

11. 박연차 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박연차 회장의 휴캠프 인수 비리·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각종 조세포탈·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박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는 진술을 했고, 대검 중수부가 이를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가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됨.

이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하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어짐.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대검 중앙수사부 : 박연차 게이트 수사 >

- 수사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 중수1과장 박경호, 중수2과장 박정식 (2009.01 이전)

- 수사/기소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 중수1과장 우병우, 중수2과장 이석환

(이상은 2009.01 이후, 특히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음.)

- 부부장 조재연 - 검사 이선봉(부산지검에서 파견) · 이주형
- 김형욱(대구지검에서 파견) 등 (이상은 2009.02.10 이후)

< 서울중앙지검 : 대검 중수부 등 수사진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 >

- 수사/불기소 처분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형사1부장 오정돈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7월, 국세청(서울국세청 조사4부),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
- 9월, 대검 중수부,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 착수
- 12월 4일, 검찰, 노건평 씨 구속.(특경가법상 알선수제 혐의 :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 12월 1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구속.(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뇌물공여)
- 12월 29일, 검찰,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 확보했다고 밝힘. 당시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 등 관계인의 진술이나 계좌추적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이 건네진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힘.
- 2009년 3월 26일, 이광재 의원 구속.(박 회장으로 부터 14만달러·2천만원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3월 31일, 대검, 박 회장이 태광실업 홍콩 현지법인(APC) 계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 송금한 정황 포착했다고 밝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홍콩 당국에 요청한 계좌추적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노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2008년 12월부터 연철호 씨 출국금지 조치함.
- 4월 6일, 대검,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각각 소환 조사함.(박 회장으로 부터 불법자금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환 조사함.
- 4월 7일, 노 전 대통령,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정 전 비서관과 연철호 씨가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돈 받은 것과 관련해 정 비서관이 받은 돈은 권양숙 씨가 부탁한 것이고, 연 씨에게 간 돈은 사업 투자 용도로 쓰인 것으로 퇴임 후에 알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함.
- 4월 7일, 대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자택과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함.(박 회장으로 부터 3억여원 받은 혐의 :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소환 조사함.(박 회장으로 부터 10만달러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박관용 전 국회의장 재소환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사과 글은 수사에 참고하겠다"며 "그 글에 대한 조사 여부는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함.
대전지검 특수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함.(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 4월 8일, 대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소환 조사함.(박 회장으로 부터 상품권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4월 9일, 대검, "2008년 2월 22일, 노 전 대통령 쪽 요구로 연철호 씨에게 500만달러 줬다", "정 전 비서관 통해 권양숙 씨에게 전해진 100만달러는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

라는 박 회장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힘.

-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 브리핑에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가방에 담긴 현금 100만달러를 박 회장한테서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아니면 권양숙 씨에게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함. "(이 돈은) 차용증도 없고, 박 회장은 '빌려줬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힘.
- 4월 9일,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박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를 권양숙 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적으로 박 회장으로 부터 상품권 1억원·현금 3억원을, 정대권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 : 특가법상 뇌물 혐의)했으나, 10일 새벽에 법원으로부터 기각됨.(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
- 4월 10일, 대검, 연철호 씨 체포·자택 압수수색함.(외국환거래법 위반)
권양숙 씨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에게 소환 통보함. 이광재 의원 구속기소함.
대전지검 특수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구속함. 강 회장 사건 대검으로 이관함.
- 4월 11일, 대검, 권양숙 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함.(부산지검에 중수부 검사 2명 파견해 조사) "권 씨가 100만달러와 3억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함.
- 4월 12일, 대검, 노건호 씨 소환 조사함. 연철호 씨 석방함.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올림. 이 글에서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언론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놓아서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 소재는 주로 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언론을 비판함.
- 4월 14일, 대검, 노건호 씨 재소환·연철호 씨 3차 소환함. 권양숙 씨의 동생인 권기문 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박 회장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게 자백을 했는데, (박 회장 진술이) '맞긴 맞느냐'는 표현은 저희 입장에서는 거슬린다"고 밝힘.
- 4월 15일, 대검, 노건호 씨가 대주주로 있는 창업투자사 엘리쉬엔파트너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 정 모 대표 조사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엘리쉬엔파트너스의 돈 가운데 일부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나, 노건호 씨 측은 "국내로 유입된 돈은 없다"고 부인함. (회사자금 중 일부를 해외업체 거쳐 국내업체에 우회투자했고, 권기문 씨함께 투자한 단서에 따른 것, *엘리쉬엔파트너스는 연철호 씨가 박 회장으로 부터 받은 500만달러 가운데 250만달러를 재투자해 세운 회사임.)
- 4월 16일, 대검, 노건호 씨 참고인 자격으로 3차 소환함. 정상문 전 비서관·강금원 회장

도 소환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500만달러에 대해 노씨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낼 것”며 “‘아들이 사용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상식에 기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함. 또 홍 기획관은 “강 회장이 (주)봉화에 투자한 돈의 규모가 왜 70억원인지가 중요하다”며 이 돈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준비를 위한 정상문·강금원·박연차 3자회동의 결과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밝힘.

- 4월 17일, 대검, 노건호 씨 참고인 자격으로 4차 소환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0만달러가 박 회장한테서 넘어오는 단계부터 노씨와 연씨가 같이 운용한 것으로 보이고, 노씨의 지배력이 상당한 정도”라며, “5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했던 건호 씨의 처음 진술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해 많이 번복됐고,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 4월 19일,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 긴급체포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8월 건넌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밝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이 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보고 수사했는데 왜 갑자기 권 여사가 썼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해결됐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줄여주기 위해 권 여사가 허위진술한 것은 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처벌된다”고 말함.

- 4월 20일, 대검, 노건호 씨 5차 소환함.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 횡령(국고 손실)·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원과 상품권 1억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매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고 말함.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와 사위 박상문 씨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에 나섬. 이와 관련해 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부부가 2006년 미국에 거주할 때 국내에서 송금된 돈이 있어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보고 있다”고 말함.

- 4월 21일,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손실·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

이날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브리핑에 앞서 “브리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언론이 정치권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말한 내용을 대문짝만 하게 쓸 수 있느냐”고 말함. 또 “검찰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어 수사를 하는 건데, 한 언론은 ‘너무 지지부진한 수사’라는 외부 평가를 보도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 거듭 반론을 펴.

- 4월 22일, 대검, 노 전 대통령에게 7쪽 분량의 서면질의서 보냄.

이와는 별도로 ‘검찰이 박 회장이 지난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 때 명품시계 2개를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됨.

이날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지지자)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정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며 “여러분은 저를 버려셔야 한다”고 말하며 홈페이지 폐쇄를 선언함.

- 4월 23일, 대검, 정 전 비서관과 정 씨가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차명으로 관리한 지인 2명을 소환조사함.

- 4월 25일, 노 전 대통령, 답변서 제출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답변은 11쪽 분량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취지로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포괄적인 답변 형식을 취했다”고 말함.

- 4월 26일, 대검, 노 전 대통령에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통보함.(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와 명품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 : 특가법상 뇌물 혐의)

- 4월 29일, 대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의 노트북이 500만달러 송금일(2008년 2월 22일)보다 앞선 2월 4일 택배를 통해 경기 분당 오르고스 사무실(건호 씨가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서 대통령 관저로 배달된 사실에 주목, 택배사 직원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500만 달러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 사항을 살펴본 것은 맞지만 노트북에 500만 달러를 이용한 투자계획서가 저장된 것은 아니고 노트북 또한 청와대 비품이 아닌 건호 씨 개인의 것”이라고 밝힘.

- 4월 30일,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함.

이날 홍만표 기획관은 “전직 대통령께서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을 방문한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피의자 권리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사안의 실체는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 5월 4일, 대검 중수부,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기록 검토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함. 홍만표 기획관은 “(15쪽 분량으로 요약된 보고를 들은 검찰 간부들은) 많은 의혹이 규명됐으며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함.

- 5월 8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구속 기소함.

- 5월 8·9일, 노 전 대통령,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 사용처 추가 답변서 2차례 걸

쳐 이메일을 통해 대검으로 보냄.

- 5월 11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 부부 소환 조사함.

12일 홍 기획관은 수사브리핑을 통해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가 2007년 9월 정연 씨 지인의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연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짜리 주택을 계약하는데 이 돈을 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힘. 홍 기획관은 또 "40만 달러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에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노 전 대통령 측의 소명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며 "정 전 비서관이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며 '집 사는데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어르신께서 전하셨다'고 말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따라 40만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검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함.

검찰, 조은석 대변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라는 내용의 애도성명을 내놓음. 조 대변인은 이날 소집된 긴급간부회의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그에 따른 충격으로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임 총장은 사인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예우를 갖춰 검시하고, 대검 형사부가 일선 검찰청과 경찰을 지휘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전함.

법무부,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망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신속히 규명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압니다.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힘.

- 5월 23일,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함.

- 5월 25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임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함.

법무부와 대검, "임 총장이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뒤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 때문에 곧바로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사표를 냈으며, 김 장관은 25일 오후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양해를 얻어 사표를 반려했다"고 밝힘.

- 6월 1일, 대검, 임 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 개최함.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사 배경과 경과, 신병 처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방법으로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하며,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함.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수사 브리핑에 대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향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내놓음.

- 6월 2일, 민주당,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함.(노 전 대통령 수사 실무 책임자들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

- 6월 3일,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다시 제출함. 청와대는 반려함.

임 총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함.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힘.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이날 "수사와 관련된 참고인들도 이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편에선 책임론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 총장이 검찰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것 같다"고 전함.

- 6월 12일,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함. 박연차 회장·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천신일 세종나도여행 회장 등 10명을 추가해 모두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21명 기소함. 이외에도 6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함.(내사종결 대상자 중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박성철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경우는 각각 징계청구·징계통보함.)

대검 중수부는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박연차 전 대광실업 회장의 자백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 사실은 인정됨"이라고 밝혀 노 전 대통령의 수뢰 의혹이 인정되는 것으로 적시함.

이인규 중수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준 내용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 7월 12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했다는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오보 방지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예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7월 14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퇴임.

이 중수부장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로 인해 검찰이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수뢰사건 수사중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사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비난과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함. 야권의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해서 "더욱이 중수부 폐지까지 거론되는 것은 도저히 수궁할

수가 없다"고 밝힘.

- 2010년 1월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에 대해 모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함.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브리핑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이나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사용처를 밝힌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힘. 검찰은 또 수사 경과를 브리핑에서 밝힌 것 등은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관련)

박연차 게이트 연루 피고인 이름/직책	공소사실(혐의)	
	1심 선고형량	2심 선고형량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 2004년 12월 박연차에게서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사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1) 징역 3월6월, 추징금 9,400만원	2) 항소기각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 부산·창원지검 근무 당시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1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	2) 항소기각
이택순 전 경찰청장	- 2007년 7월 경찰청장 재직 중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뇌물 수수)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	2) 항소기각
박관용 전 국회의장	-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1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	2) 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만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2005년 1월, 2006년 8월 박연차 돈 4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 2004년11월부터 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 뇌물수수및 횡령한 범죄수익 15억5,0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징역 6년, 추징금 16억4,400만원	2) 항소기각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8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1년6월, 추징금 8억원	2) 징역 8월, 추징금 8억원(석방)
송은복 전 김해시장	- 2006년 5월까지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제18대 총선(김해읍 국회의원) 관련, 2006년 3월 중순 및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 걸쳐 10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2년6월, 추징금 10억원	2) 징역 1년, 추징금 10억원
이정옥 전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장	- 2005년 4월 재보선(김해갑 국회의원) 때 박연차 돈 5억원·노건평 돈 2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2년, 추징금 7억원	2) 징역 1년, 추징금 7억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 2004년 10월 및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	2) 항소 포기로 형 확정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 2008년 9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돈 2억원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1)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	2)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제직 당시 태광실업, 휴켄스 등 기사개제와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배임수재)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2) 진행중
이광재 민주당 의원	- 2006년 8월 및 2008년 3월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5만 달러, 현금 2,000만원 수수	
	- 2004년 5월에서부터 2006년 4월까지 박연차, 정대근에게서 4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9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박진 한나라당 의원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	2) 진행중
	- 2008년 3월 제18대 총선 관련해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및 1,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서갑원 민주당 의원	1)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13만원	2) 진행중
	-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박연차에게서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및 미화 2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	2) 진행중
최철국 민주당 의원	- 2008년 3월부터 4월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18대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2) 진행중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18대 총선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1인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초과)(정치자금법 위반) 1) 무죄	2) 무죄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 2008년 8월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약2500만원)수수 및 6억2300만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특가법상 알선수재) - 2003년 9월부터 2006년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증여세 101억 2400만원,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 2006년 8월부터 2008년 11월 세종나모여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증권거래법 위반) 1) - 정역 2년, 집행유예 2년 (특가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조세,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은 무죄)	2) 진행중

5. 약평

검찰의 표적·편파·과잉수사 의혹으로 국가의 권력남용과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다시 정권의 시녀로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정권과 검찰의 수상한 유착관계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분노의 여론이 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음. 특히 검찰의 수사방식과 함께 매일같이 계속된 언론브리핑 등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짐.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권을 견제할 시민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 권력의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음.

12.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휴캠프 인수 비리,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등 탈세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첫째 2006. 2. 중순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이었던 정대근에게 휴캠프 지분 인수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주고, 정대근 및 그의 지시를 받은 농협 실무자들이 태광 실업에 휴캠프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시켜 태광실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도와주며 태광실업의 인수대금 중 322억 원을 감액해 준 것, 둘째, 해외 배당 소득 미신고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42억 원, 주식 매매차익 관련 양도소득세 37억 원 등을 포탈한 혐의, 셋째, 2005년 6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협의 진행이던 때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매수하였다가 인수가 공식 발표된 2005년 12월에 집중매각하여 25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대검 중앙수사부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7월 국세청,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세무조사 후 박연차 회장 탈세 확인
- 9월 박연차 회장 출국금지
- 11월 중순 국세청, 박연차 탈세 혐의 고발. 검찰, 정화삼 사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
- 11월 19일 검찰,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 체포
- 11월 23일 홍기욱 세종캐피탈 사장 구속
- 11월 24일 정화삼 씨 형제 구속, 정대근 소환조사
- 12월 1일 노건평 씨 소환조사
- 12월 2일 검찰, 노건평씨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구속

- 12월 12일 조세포탈과 뇌물 등의 혐의로 박연차 회장 구속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구속 기소(뇌물공여, 입찰방해, 조세포탈)

-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불구속 기소(뇌물, 입찰방해, 별건으로 구속상태)

-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입찰방해)

- 오세환 농협중앙회 상무이사 불구속 기소(입찰방해)

-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세종증권 주식 시세차익 사건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수사를 통해 보강할 것이라 2008년 12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힘.

*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과 관련하여서는 탈세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이용해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가 더 있고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진행중

4. 재판 경과 및 결과

* 다음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등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 수사 > 자료 참고

13.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연루된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05~2006년 경 세종캐피탈 회장 김형진과 사장 홍기옥이 농협중앙회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과 그의 동생 정광용 등을 통하여 정대근 회장과 가까운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시 농협사료 대표 남경우를 통하여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9월 검찰,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 금품로비 첩보 입수 내사 착수

- 11월 19일, 세종캐피탈 등 압수수색,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과 홍기옥 사장 체포

- 11월 22일, 홍기옥 사장 구속

- 11월 24일, 정화삼, 정광용 형제 구속

- 12월 4일, 노건평 씨 구속

- 12월 10일, 홍기옥 사장 구속 기소

- 12월 16일, 정화삼, 정광용 형제 구속 기소

- 12월 22일, 노건평 씨 구속 기소,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남 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 노건평 씨 구속기소(알선 수재 등)

- 정화삼 씨(노무현 대통령 고교동창)구속기소(알선 수재 등)

- 정광용 씨(정화삼 씨의 동생) 구속기소(알선 수재)

- 박종식, 오경자 씨 불구속 기소(알선 수재)

-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뇌물, 별건 구속)

-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불구속 기소,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구속 기소(뇌물공여)

4. 재판 경과 및 결과

박연차 게이트 연루 피고인 이름/직책	공소사실(혐의)	
	1심 선고형량	2심 선고형량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 2003~2007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뒤 종합소득세 242억원 포탈 - 2005~2006년, 차명계좌 이용해 세종 및 휴켄스 주식 대량거래로 205억원 시세차익 얻고 47억원 양도세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 2006년 2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남 전 사장에게 농협의	

	자회사인 휴켄스 인수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 줌(뇌물공여) -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제공(뇌물공여, 배임증제)	
	1) 정역 3년 6월, 벌금 300억원	2) 정역 2년 6월, 벌금 300억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 세종증권 매각비리 관련, 농협사료 남경우 전 사장과 공모. 2006년 2월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 받음(뇌물수수) - 휴켄스 인수 비리 관련, 2006년 2월 박연차에게서 농협 자회사인 휴켄스 인수 청탁 받고 20억원 받음(뇌물수수) - 2007년 6월 휴켄스 지분 인수 대가로 박연차에게서 250만 달러 추가 수수(뇌물수수) - 농협 직원들에게 태광실업에 입찰정보 제공토록 지시한 혐의(입찰 방해) - 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 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품업자로부터 3회 걸쳐 박연차에게서 1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1) 정역 10년, 추징금 78억여원	2) 정역 5년, 추징금 51억여원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	- 정대근 전 회장과 공모.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받음(뇌물수수)	
	1) 정역 5년, 추징금 25억원	2) 무죄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 홍기옥 사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과 정대근 전 회장에게서 50억원을 건넨(뇌물공여)	
	1) 정역 2년	2) 무죄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 김형진 회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과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뇌물 공여)	
	1) 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항소 포기로 형 확정
오세환 농협 상무	- 2006년 2월, 태광실업에 입찰정보 제공(입찰방해)	
	1) 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항소 기각
정승영 전 정산OC 대표	- 2006년 2월, 오씨 등을 통해 입찰정보 사전 입수(입찰방해)	
	1) 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정역 1년, 집행유예 2년
노건평 (노 전 대통령의 형)	- 세종증권 매각비리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62) 형제와 공모.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59)으로부터 농협 정대근 전 회장(59)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9억6300만 원 받음(특가법상 알선수재). - 노씨 소유 정원토건 관련, 2004년부터 2년 간 인건비 과대 계상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3억8000만 원 및 증여세 1억4000만 원 포탈(탈세). - 정원토건 관련, 2004년 3월~2005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주식 매수 등에 임의 사용(횡령).	

	1) 정역 4년, 추징금 5억 7천만원	2) 정역 2년6월, 추징금 3억원 (대법 상고심으로 확정됨)
정화삼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 2005년 2월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생 광용 씨와 공모해 노건평 씨를 통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접촉, 인수를 성사시킨 뒤 성공사례금 29억6300만 원을 받아 건평 씨와 함께 관리함(특가법상 알선수재) - 홍기옥 사장에게 받은 23억7040만 원 부동산 구입 등으로 은닉(범죄수익 은닉)	
	1) 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 6천만원	2) 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 6천만원
정광용 (정화삼의 동생)	- 2005년 2월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형 화삼 씨와 공모해 노건평 씨를 통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접촉, 인수를 성사시킨 뒤 성공사례금 29억6300만 원을 받아 건평 씨와 함께 관리함(특가법상 알선수재)	
	1) 정역 3년, 추징금 11억 9천만원	2) 정역 2년, 추징금 13억2천760만원

5. 약평

전임 정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 개입된 불법금품로비를 수사한 사건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일부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실제 불법금품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건임.

14. 박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횡령 및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박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1999~2005년에 걸쳐 8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31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국동 사장이 마산지사와 함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 89억여원 횡령한 혐의에 대한 수사로 시작한 사건임.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에의 총리 재임 당시 인사 청탁 목적으로 5만달러를 건넸다는 박 전 사장의 진술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옮겨간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2부장 권오성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9월 22일, 대한통운 부산·마산지사를 압수수색함.(일부 임직원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9월 24일, 검찰,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체포영장 발부, 유 모 마산지사장 구속, 대한통운 본사 압수수색함.
- 9월 25일, 이국동 사장 소환 조사함.(유 모 마산지사와 함께 회사자금 89억여원 횡령한 혐의)
- 9월 28일, 검찰, 이국동 사장 구속 기소함.
- 11월 6일, 검찰, 박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구속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11월 25일, 검찰, 박영욱 전 사장 구속 기소함.(1999~2005년에 걸쳐 8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31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12월 4일, 검찰, 박영욱 전 사장에게서 “2007년 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당시 총

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 수사에 착수함.(박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것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중)

- 12월 6일, 검찰, 박 전 사장과 한 전 총리 관련 계좌를 추적중이며, 한 전 총리 소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12월 7일, 검찰,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명과 한국남동발전 감사 이 모 씨 소환 조사함.

한명숙 전 총리, 박 전 사장으로부터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함.

- 12월 9일, 검찰, 한 전 총리에게 11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함.

- 12월 11일, 검찰, 한 전 총리의 출석 거부에 따라 14일 소환 재통보함.

한 전 총리, 검찰 수사진을 피의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함.

- 12월 14일,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 전 총리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함.

- 12월 16일, 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함.

- 12월 18일, 검찰, 한 전 총리 체포함. 박 전 사장과 대질신문 벌임.

- 12월 22일,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박영욱 전 사장 혐의 추가 기소함.(뇌물공여)

- 12월 2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에서 한 전 총리 수사에서 나타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의사실 유출 방지만큼은 꼭 유념하겠다”며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도 대충 검찰직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함.

- 2010년 1월 15일, 박 전 사장이 대한통운 사장 재임 시절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검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남.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검찰이 박 전 사장을 이용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작수사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 조선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정치공세”라며 “정치의 그런 주장을 언론이 보도하니까, 그들(정치인)도 신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 언론도 국익을 위해선 그런 주장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횡령액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

통운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내사에 들어갔지만 특정 시기에 대량 매입·매도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곽씨의 주식거래 관련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12월 23일, 광영욱 전 사장 첫 공판 열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
- 2010년 1월 28일, 한명숙 전 총리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 열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
- 3월 8일, 한명숙 전 총리 첫 공판 열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김형두 부장판사))

5. 약평

대표적인 ‘친노’ 인사이자 ‘도덕성의 상징’인 한명숙의 비리 혐의를 터뜨린 것은 표적수사의 전형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유사한 사건임.

광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시계 사건처럼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도 없는 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기존의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했거나, 한 전 총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함. 검찰수사와 언론플레이가 맞물린 표적수사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충격을 너무나 쉽게 잊은 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

한명숙 전 총리 기소의 유일한 증거는 광 전 사장의 진술 뿐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여전히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검찰이 광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내사종결하고 4년 전 미국 하와이의 고급 콘도를 매입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자금출처와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플리바게닝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15.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기록물 보관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방에 대한 수사

1. 사건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대통령 기록물을 퇴임후 거주하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기록물이 원본여부인지를 비롯해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신, 구 대통령측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고,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고발한 것을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2008년), 천성관(2009년) - 3차장 김수남(2008년), 최재경(2009년) - 첨단범죄수사부장 구본진(2008년), 이혁(2009년)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4명과 외부지원 검사 1~2명으로 수사팀 구성)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7월 28일, 검찰,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7월 30일, 검찰,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 고발인과 함께 피고발인인 디네드 허모 대표와 실무 직원 1명을 불러 조사
- 8월 1~2일,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의 ‘이지원’ 서버 압수수색 조사
- 8월 5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소환조사
- 8월 8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소환조사
- 9월 1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 * 이후 봉하마을 방문조사와 대통령 서면조사를 추진하다 진척 없이 사실상 종결됨.

16. 신성해운 불법로비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표적 수사

1. 사건 개요

2004년 신성해운이 4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참여정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前) 사위 등을 이용해 로비를 벌였으며, 정 전 비서관이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또 당시 열린우리당의 실세였던 이광재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하려했다고 한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제 혐의 등으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2부장 윤갑근(주임검사)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말다가 특수2부로 교체

3. 수사 경과

- 2008년 2월 2일, 검찰, 신성해운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 청와대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수사착수
- 3월 말, 검찰,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에서 특수2부(부장 윤갑근)로 재배당
- 4월 24일, 검찰, 이재철 로비리스트에 포함된 이광재 의원 부인 소환조사
- 5월 1일, 검찰, 이주성 전 국세청장 소환조사
- 5월 29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정상문 전 비서관 등 기소

- 정상문, 불구속 기소(1억 원 수뢰, 특가법 알선수제 혐의)
- 신성해운 김상봉 전무, 구속 기소(비자금 조성해 68억을 횡령한 특정법상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 송파경찰서 경찰관 이 모씨, 불구속 기소(2천만 원 수뢰, 제3자 뇌물취득죄)
- 정 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 씨와 부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기타 2명 변호

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 2008년 9월 5일,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민병훈 부장판사))
- 2009년 5월 1일, 2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 조병현 부장판사))
- 2009년 9월 10일,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됨.(대법원 2부(주심 : 전수안 대법관))

* 정 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 씨, 1·2심 유죄

- 1심, 징역3년 6월 · 추징금 5억 5천만원
- 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추징금 2억 6천여만원

5. 약평

이명박 정부 들어 최초의 전임 참여정부 핵심 인사 중의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으나, 결국 핵심 피고인이자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무리가 있었음이 확인된 사건임.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청와대 인사뿐만 아니라 법조계(검찰간부)에 대한 로비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이 점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부실수사라는 비난도 초래하였음.

17. 강무현 참여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임 시절 직무와 관련해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금품을 받은 점과 관련하여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2부장 윤갑근 - 검사 김형길(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5월, 검찰,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균 국토해양부(옛 해양수산부) 제2차관이 해양수산부 시절 한 해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수사 중임을 밝힘
- 5월 강무현 전 장관 소환조사
- 7월 18일 검찰 강무현 전 장관 긴급체포
- 7월 20일 강무현 전 장관 구속(5개 해운사와 3개 조합 등으로부터 항로 조정과 선박 증편 등의 청탁과 함께 8천여 만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 강무현 전 장관, 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 1심 유죄 선고

2008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이경준 부장판사, 징역 2년, 추징금 7,650만원 선고

- 2심 유죄 선고

2009년 2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부 서기석 부장판사, 징역 1년 및 추징금 7,850만원 선고

18.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 청탁 '그림 로비'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차장 재임 때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故) 최옥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과 국토해양부 장관직 또는 국세청장 유임 청탁을 위해 현 정권 실세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인사 로비' 의혹, 2005년 신성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진행중임. 특히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장이었다는 점에서 박연차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주요 로비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음.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 인사 청탁 그림 로비 사건 >

- 수사 :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특수2부장 박정식

(2009. 01 이후,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까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2부장 권오성(2009.08 이후)

< 서울중앙지검 :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1부장 김기동

< 대검 중앙수사부 : 태광실업 세무조사 로비 사건 >

- 수사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3. 수사 경과 및 결과

- [한겨레]의 2009년 1월 14일 보도에서 대검 관계자가 "민정수석실 쪽에서 내사한 구체적인 의혹 내용과 한 청장 해명 등 내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함. 한편, 한 전 청장의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조기 교체하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 전해짐.

- 1월 15일, 사정당국이 국세청에 그림 5점 전달 첩보 입수하고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한상률 전 청장의 차장 재임 당시 ‘학동마을’을 포함해 5점의 그림이 국세청에 전달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
- 1월 15일, 한상률 청장, 청와대에 사의 표명.
- 3월 21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현 정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체포됨.(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23일 사전구속영장 청구되면서 구속 수감됨.
- 3월 22일, 한상률 전 청장, 공무 목적으로 15일에 돌연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시기가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여서 한 전 청장에 대한 로비 여부를 밝혀야 하고 ‘그림 로비’ 의혹 수사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기획출국설이 제기됨. 검찰은 “공교로운 것 같다. 한 전 청장과 추 전 비서관이 만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3월 24일, 검찰, 한 전 청장의 소재와 연락처 확보했다고 밝힘.(한 전 청장이 추부길 전 비서관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 엿두)
- [한겨레]의 2009년 4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관계자가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한테 돈을 받은 시점을 전후해 한 전 청장과 통화한 내역이 없고, 당사자인 추 전 비서관도 입을 다물고 있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밝힘.
- 5월 6일, 대검 중수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전격 압수수색(태광실업 세무조사 담당). 2008년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 담당국장·과장·계장 등 소환해 세무조사 착수배경과 과정 한 전 청장의 지시내용 보고서 작성 경위 및 전달경로 등을 조사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필요할 경우, 한 전 청장도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말함.
- 5월 7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청장과 접촉하고 있다”며 “국세청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한 전 청장과 통화를 했는데, 한 전 청장이 ‘숨길 이유가 없다. 진상 규명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며, 조사 일정 조율중임을 밝힘.
- 5월 8일, 대검 중수부, 한 전 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확보해 현 여권 실세의 로비 여부 확인중이라고 밝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흥회 당시 조사4국장 전 단계에서 세무조사 보고 관련 축소·왜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5월 14일, 대검 중수부, 한 전 청장과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내주 소환하겠다고 밝힘. 천 회장이 2008년 하반기 한 전 청장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청

탁한 단서를 포착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관계자들을 소환해 박연차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의 통화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함.

- 5월 17일, 대검 중수부, 귀국 거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이메일로 질의서 보냄. “한 전 청장에 대해서는 발견된 혐의가 없다”고 설명함.
- 5월 19일, 대검 중수부, 한 전 청장으로부터 20여장의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음.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함. (수사팀 관계자, “한 전 청장으로부터 수사상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 등 세무조사 지휘라인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태광실업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수사팀이 한 전 청장에게 “천 회장과 통화를 한 배경에 국세청장직 유임 목적도 있었지 않았나”고 물었으나, 한 전 청장은 이를 부인했다고 함.)
- 5월 20일, 대검 중수부, 수사 브리핑에서 한 전 청장의 직접조사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유선(전화통화)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성 일축함.
- 11월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학동마을’ 취급했던 ‘가인 갤러리’ 압수수색함.
- 11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가인 갤러리’ 주인인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부부의 계좌추적중임. 안원구 국장 등 일부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함.
-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국세청 안원구 국장 체포하고 부인 홍혜경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함.(2006~2008년 부인 홍혜경 씨가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의 미술품 수십억원 어치를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시세보다 비싼 값에 강매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
- 11월 19일 안원구 국장 구속영장 청구함.
-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안원구 국장 구속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부인 홍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공범으로 처벌 검토.
- 11월 22일, 안원구 국장의 부인 홍혜경 씨, ‘한 전 청장이 2007년 12월 현 정권 실세에게 건넨 1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함.
- 11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한 전 청장의 인사 청탁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전 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를 소환 조사했고,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보도됨.
- 11월 24일, 안원구 국장의 부인 홍혜경 씨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함. 홍 씨는 검찰 소환에 앞서 이상득 의원을 통해 한 전 청장의 국세청장 유임 로비를 벌인 사실과 함께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 측이 안원국 국장에 대한 명예퇴직 권고 내용 등이 담긴 녹취 공개함.

- 11월 25일, 한 전 청장, 뉴욕특파원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인사 청탁 로비와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등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며 귀국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
- 11월 26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008년 초에 한 전 청장을 만나 ‘국세청이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MB 파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 11월 27일, 검찰, “한 전 청장은 그림 로비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어떤 방법으로는 직접 불러 조사를 할 것. 안원국 국장이 제기한 의혹들도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까지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이거나 한쪽의 주장일 뿐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혀 체포영장 발부·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한 강제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11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전 청장을 즉각 소환수사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범죄단서가 될 만한 것이 포착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려면) 구속할 만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 요청 사안에 이르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변함. 안원구 국장의 폭로로 BBK 수사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도 하고 특검까지 해서 (이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일축함.
-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세청 직원 장 모 씨로부터 한 전 청장의 지시로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한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한 전 청장이 2009년 1월 ‘그림을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이라고 밝힌 것과 달라 직접대면조사가 불가피하게 됨.
- 12월 7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2008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신성해운 이사 이 모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2억원, 한상률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함. 이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성해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서울지검에서 철저히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 12월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안원구 국장 구속 기소함. (5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뒤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에서 고가에 미술품을 강매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안 국장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뇌물을 건넨 기업들에 대한 기소는 “향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함.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한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어려운 상태”라는 검찰의 당초 입장을 되풀이함.

- 1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그림 로비’ 사건과 관련해 한상률 전 청장의 부인 김 모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힘.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10년 1월 14일, 안원구 전 국장 첫 재판 열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5. 약평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폭로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의 로비의혹과 비리에 대하여 거악척결을 외치는 검찰은 우리 사회의 부패의 심각성과 비리사슬을 밝혀야 했지만 수사의지 부족으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임.

현 정권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것도 기획출국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도곡동 땅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원구 전 국장을 긴급 체포하고 그의 폭로를 막기 위한 접견금지조치를 취하면서 언론보도를 차단한 것으로 보아 관련자들이 다각도로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당장 범죄인 인도요청에 나서야 하지만 검찰은 혐의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더구나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가 이번 사건 담당 검사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19.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각종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해달라며 채무 면제와 편법 주식거래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현 정권 실세를 향한 검찰의 수사로 관심이 모아진 사건임. 또 천 회장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등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하고, 비상장 계열사를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모아짐.

이 밖에도 천신일 회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 당비 30억 대납 등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으나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빠짐.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대검 중앙수사부 >

- 수사/기소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3월 30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박연차 사건 수사 브리핑에서 “천 회장 관련 의혹을 보고 있다”고 밝히며 천 회장이 수사선상에 있음을 시사함.
- 4월 9일, 검찰이 천신일 회장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 확인됨.
- 4월 17일, 검찰, 국세청으로부터 2007년 4~11월(대선 전)로 천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300여억원의 과세자료 받아 양도소득세 증여세 포탈 등에 혐의를 두고 분석 시작함.
- 4월 24일, 천 회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레슬링 선수 격려금 차원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4월 26일, 검찰, 천 회장과 그 가족들이 2007년 11월 대선 직전에 171억 4,500만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대통령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용처 수사중임을 밝힘.

- 4월 28일, 천 회장과 그 가족들이 2007년 4월 49억 2,800만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8월 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혹이 불거짐.)
- 5월 4일, 천 회장이 2007년 4~5월 계열사 주식 85억여원 어치를 팔아 현금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천 회장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총액이 306여억원으로 늘어남.)
- 5월 7일, 대검 중수부, 천 회장 자택과 사무실, 천 회장과 돈 거래한 10여명의 자택 등 총 18곳에 대해 압수수색함.
- 5월 8일, 대검 중수부, 박연차 회장이 천 회장 관련 주식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천 회장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단서를 확보해 7일 압수수색 대상 중 1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시작함.
- 5월 12일, 천 회장 회사의 자금관리인을 소환해 박 회장과 주식 차명거래 경위 등을 조사함.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박연차 회장의 사돈) 소환 조사해 천신일 회장과 김정복 전 청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8년 7월 서울의 모 호텔에서 두 차례 대책회의를 연 사실이 밝혀짐.
- 5월 13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천 회장 관련 수사는 박연차 회장과 관계를 보는 데 맞춰져 있고, 대선자금 의혹은 보지 않는다”고 밝힘. 천 회장 수사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함.
- 5월 14일, 대검 중수부, 한 전 청장과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내주 소환하겠다고 밝힘. 천 회장이 2008년 하반기 한 전 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청탁한 단서를 포착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 5월 19일, 대검 중수부, 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함.
(대검, 한 전 청장으로부터 20여장의 진술서를 이메일을 통해 “한 전 청장으로부터 수사상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 등 세무조사 지휘라인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태광실업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수사팀이 한 전 청장에게 “천 회장과 통화를 한 배경에 국세청장직 유임 목적도 있었지 않았나”고 물었으나, 한 전 청장은 이를 부인했다고 함.)
- 5월 21일, 대검 중수부, 천 회장 재소환함.
- 5월 22일, 천 회장 3차 소환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예정.
- 5월 23일,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연기됨.(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박연차 회

장 관련 수사 전면 중단)

- 5월 31일,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됨.(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앞선수재·조세포탈·시세조종,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 6월 2일,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됨.(서울중앙지법 형사42단독 김형두 부장판사, “검찰이 밝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구속의 목적은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함.)
- 6월 7·9일, 천 회장 소환조사
- 6월 12일, 대검 중수부, 천 회장 불구속 기소함.(박연차 회장 관련사건 수사 최종결과 발표)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10년 1월 6일, 검찰, 천신일 회장에 대해 징역 4년·벌금 150억원 구형함.
- 2월 5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함.(증권거래법 위반만 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앞선수재·시세조종은 무죄)

5. 약평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의도된 부실수사’에 따른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음.

천 회장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5만위안을 받은 혐의와 채무 6억2000여만원을 탕감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불법증여한 뒤 우회상장하는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검찰의 부실수사를 확인시켜 준. 지난해 6월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발표를 앞두고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앞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포기하고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함. 또 검찰은 천 회장이 청탁과정에서 이상득 전 국회의원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 부의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신한 뒤 무혐의 처리하여 권력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수사의 의지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냄.

또한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의원에 대한 청탁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1심 재판부에 의해 판결문에 적시되어 밝혀짐으로써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엄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사건으로 ‘죽은 권력에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조롱을 받고 그야말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자초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됨.

20. 스테이트윌서골프장 공경식 대표의 횡령 및 정·관계 로비와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금품수수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공경식 스테이트윌서 대표가 2004년 골프장 부지 용도로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의 임야를 사면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돈을 준 뒤 실거래가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101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던 중 스테이트윌서 골프장 인허가 관련한 정·관계 로비에 썼다는 혐의가 드러난 사건임.

특히 공경식 대표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등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1부장 김기동
- 검사 손영배(안산지청에서 파견됨), 진동균(원주지청에서 파견됨)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10월 26일, 스테이트윌서 시행사 이 모 대표와 김 모 상무 체포.

- 10월 27일, 스테이트윌서 공경식 회장 체포·스테이트윌서 골프장과 시행사 압수수색함.
- 10월 28일, 스테이트윌서 공 회장 구속영장 청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10월 29일, 스테이트윌서 공 회장 구속.(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
- 11월 5일,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한나라당 의원 2~3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공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옴. 이에 대해 김주현 서울중앙지법 3차장은 “현재로서는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소환 계획도 없다”고 밝힘.
- 11월 13일, 공 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은 김 모 안성시의회 전 의장(1억 5,100만원 수뢰 : 특가법상 알선수제)·장 모 대우자동차판매 영업팀장(10억 3천여만원 수뢰 : 배임수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
- 11월 13일, 민주당,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함.(국가위기관리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 모 업체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6,6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을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11월 15일, 김 모 안성시의회 전 의장·장 모 대우자동차판매 영업팀장 구속.
- **11월 16일, 스테이트윌서 공경식 회장 구속 기소함.**(특가법상 횡령·배임)
- 11월 19일, 한 모 행정안전부 국장 체포·20일 구속영장 청구(현금 3,500만원·미화 1만달러·상품권 1천만원 수뢰 :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21일 구속(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판사)
- 11월 26일, 김준규 검찰총장, “앞으로 권력과 여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정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함.(취임 100일을 맞아 소집한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회의)
- 11월 27일, 이동희 안성시장 소환 조사(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16일 공 회장으로 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한 모 행안부 국장·장 모 대우자동차판매 전 영업팀장 구속 기소함.
- 11월 30일, 동 모 환경부 과장 소환 조사함.(한강유역환경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년 12월과 200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개입해 수치를 조작해준 대가로 공 회장으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 뇌물수수 혐의)
- 12월 1일, 검찰, 공성진 의원에게 불법자금 제공 의혹 있는 업체 등 5~6곳 압수수색함.(공 의원이 운영하는 여의도의 국가위기관리포럼 사무실, 골프카트 제작업체 C사, 면역항균업체 L사 등)
- **12월 2일, 검찰, 이동희 안성시장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김 모 안성시의회 전 의장 구속 기소함**(특가법상 알선수제).

- 검찰, 한나라당 환경병 의원의 김 모 보좌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공 회장이 환경병 의원에게 3천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골프카트 제작업체 C사 김 모 영업총괄사장을 소환 조사함.(공성진 의원이 총재로 있는 단체 등의 후원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카트 납품 영업 등에 도움을 받은 혐의)
- 12월 4일, 검찰, 환경병 의원의 김 모 보좌관 체포영장 재청구·긴급체포함. 5일 석방함. 김 보좌관으로부터 “공 회장에게서 1억원 받아 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확보함.
- 12월 9일, 검찰, 환경병 의원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함.
- 12월 11일, 검찰, 환경병 의원 소환 조사함.
- **12월 21일, 검찰, 환경병 의원 불구속 기소함.**(공 회장으로 부터 1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12월 23일, 검찰, 공성진 의원 소환 조사함.
- 12월 24일, 검찰, 공 의원의 친인척이자 한나라당 중앙위원 배 모 씨 구속영장 청구함.(특가법상 알선수제·정치자금법 위반 등)
- 12월 28일, 공 의원의 친인척 배 모 씨 구속.(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
- **12월 30일,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함.**(스테이트윌서 공 회장으로 부터 2만달러와 현금 2,100만원, 골프카트 제작업체 C사로부터 1억 1,800여만원을, 면역항균업체 L사로부터 4,1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친인척 배모 씨 구속 기소함. 공 의원의 홍 모 보좌관과 염 모 보좌관 불구속 기소함.
- 2010년 1월 12일, 동 모 환경부 과장 구속 기소함.(한강유역환경청 국장과 환경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개입해 수치를 조작해준 대가 등으로 공 회장으로 부터 네 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 : 뇌물수수)

4. 재판 경과 및 결과

- 12월 18일, 법원, 스테이트윌서 공경식 회장 보석으로 석방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 12월 30일, 검찰, 스테이트윌서 공경식 회장에 징역 3년 구형함.
- 2010년 1월 7일, 법원, 공성진 의원 해외 출국 허가함. 공판은 2월에 시작될 예정임.(1/9~16,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녹색성장 실천 선진국 방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 1월 8일, 환경병 의원 1심 공판 시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이규진 부장판

사))

- 1월 15일, 법원, 공경식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함.

- 1월 28일, 검찰, 이동희 안성시장에 징역 1년·추징금 3천만원 구형함.

- 2월 18일, 법원, 이동희 안성시장에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추징금 3천만원 선고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이규진 부장판사))

- 2월 18일, 법원, 공성진 의원 친인척 배 모 씨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추징금 2억원 선고함.(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이규진 부장판사))

- 2월 25일, 공성진 의원 1심 공판 시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5. 약평

스테이트윌서 사건은 “골프장 인·허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탈법 사례의 집합체”라 불릴 정도의 부패사건이며,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비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실히 보여 준 사건임.

특히 공 최고위원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볼 때, 공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불구속 기소에 그친 점은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이광재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피의사실을 흘리며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갔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 의지와는 참으로 대조적임. ‘살아 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검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21. 효성그룹 총수 일가 불법 비자금 조성·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의혹·육군 마일즈 사업 납품 사기 혐의 등 수사

1. 사건 개요

2007년 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2008년 2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보 등에 기초해 효성그룹 계열사의 해외법인들을 통해 수백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어 대검에서도 효성그룹과 관련해 10여 가지의 혐의를 담은 범죄정보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일부 임직원만 기소됨.

이후 이같이 조성된 비자금으로 조현준 (주)효성 사장 등이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상당히 뒤늦게 기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임.

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생인 주관엽 씨가 연루된 로우테크놀로지에서 육군 마일즈 사업과 관련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의 군납 사기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주 씨가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됨. 주관엽 씨는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패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음.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 효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

- 수사 : 지검장 안영욱·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1부장 최재경

- 주임검사 박광배, 보조검사 1명(2007.05 ~ 2008.03)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1부장 문무일

- 주임검사 박광배, 보조검사 2명(2008.03 ~ 2009.02)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특수1부장 김오수

- 주임검사 소진, 보조검사 1명 (2009.02 ~ 2009.08,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까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1부장 김기동

- 주임검사 황현덕, 보조검사 1명(2009.08 이후)

< 서울중앙지검 : 효성그룹 일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의혹 >

- 수사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1부장 김기동 (2009.10 이전)

- 수사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외사부장 함윤근 (2009.10 이후)

< 서울중앙지검 : 육군 마일즈 사업 장비 납품가 부풀리기 관련(로우테크놀로지) 사건 >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2009.01 이전)

- 기소 :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금융조세조사2부장 안태근

(2009.01 ~ 2009.08,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까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금융조세조사2부장 진경준(2009.08 ~ 2009.10)

< 대구지검 : 육군 마일즈 사업 장비 납품가 부풀리기 관련(로우테크놀로지) 사건 >

- 수사/기소 : 대구지검장 김영한 - 2차장 박규홍 - 김천지청장 박진영(2009.10 이후)

< 서울중앙지검 : 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천성관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1부장 봉욱(2009/01 이전)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금융조세조사1부장 김강욱

(2009/01 ~ 2009/08,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6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추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효성그룹이 돈세탁을 통한 비자금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함.
- 2008년 2월 초, 검찰, 국가청렴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사건 자료 이첩받음
- 4월, 검찰,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관련 사건('육군의 마일즈 사업관련 납품가 부풀리기') 자료를 이첩 받음.
- 4월,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수사개시
- 9월, 검찰, 관련자 소환조사 시작
- 2009년 1월, 효성건설 비자금 사건 수사 관련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 소환조사
- 2009년 1월 12일, 검찰, (주)효성 중공업퍼지(PC) 김 모 전무 구속영장 청구(납품단가 부풀려 한국전력에 300억원 과다청구 사기혐의)

- 2009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주관업 씨(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동생) 기소중지·로우테크놀로지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함. (2003년 3월~2005년 5월 국방부에 육군 마일즈 장비를 납품하면서 로우테크 실소유주로 도급업체와의 위장거래를 통해 납품 단가를 부풀려 64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함.)

- 4월 14일, 검찰,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안 모 효성건설 상무 사전구속영장 청구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 4월 16일, 법원,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안 모 효성건설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함.

- 9월 18일, 검찰,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안 모 효성건설 상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함.

- 9월 22일,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안 모 효성건설 상무 사전구속영장 기각됨.(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설명이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힘.)

- 9월 30일, 검찰,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안 모 효성건설 상무 불구속 기소와 함께 효성 비자금 사건 수사를 종결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 10월 7일, 2007년 말~2008년 초 검찰에서 효성그룹 관련 범죄정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됨.

- 10월 8일,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주)효성 사장이 2002년 미국 LA에서 450만 달러짜리 고급 빌라를 구입한 사실 확인됨.(재미동포 안치용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공개됨.)

- 10월 12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효성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거부함. 노 지검장은 “법원에 가 있는 기록도 있고 일부는 종결한 사안”이라며 “개인 명에나 사생활, 기업 신인도와 관련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

- 10월 15일, 검찰, 지난 2009년 4월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민주당 박지원·박영선 의원(국회 법사위)과의 면담에서 효성 관련 수사자료 공개 끝내 거부함.

- 10월 1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육군 마일즈 장비 납품가 부풀리기와 관련해 이 모 로우테크 대표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19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힘.)

- 10월 19일, 김준규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조현준 사장의 美 부동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되는 대로 보고 받겠다"고 답변함.

- 10월 20일, 김준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에 효성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지시함. 로우테크 수사와 관련해 "10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 보고하겠다"고 밝힘.
- 10월 2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로우테크 실소유주인 주관엽 씨를 인터뷰에 수배 요청했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요청 사실 없다"며 "주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생각은 있으나, 재수사의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답변함. 이는 10월 12·19일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각각 "수배했다"고 답변한 것과 달라 위증 논란이 제기됨.
- 10월 23일, 조현준 (주) 효성 사장이 2004년 12월에도 美 샌프란시스코 고급 콘도 구입 사실이 드러남.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박영선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장한테서 지난 20일 효성그룹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확실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해외 부동산의 소유·지분 관계와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서 혐의점을 찾으면 수사하겠다"고 말함.
- 10월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이 모 로우테크 대표 구속함. 다른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됨.
- 10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효성 비자금 사건은 새로운 단서가 나와야 재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해외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확인 중이다. 로우테크는 효성 해외부동산과 전혀 관계 없다"고 밝힘.
- 11월 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에서 효성 해외부동산 수사 경과를 보고함. "효성이 거래한 美 부동산 5건의 구입자금 출처, 관계자들의 출입국·해외거주 기간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며 "위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중이나 추가 확인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힘.
- 11월 7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재미동포 안치용 씨, 조현준 사장이 2003년 7월 美 캘리포니아의 주택을 거래한 사실과 LA 한인타운의 고급 음식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추가 공개함.
- 11월 1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주관엽 씨(로우테크 실소유주) 지명수배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 11월 18일, 법무부, 미국 정부에 주관엽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청구함.
- 11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금 흐름 확인이 상당히 어렵다"며, "계좌주적 등 신속히 종결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힘.
- 12월 2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신속하게 하겠다. 해외자금이라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며 종전의 설명을 되풀이함.
-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주)효성 조현준 사장·조현상 전무 형제 소환 조사함.

- 1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조현준 (주)효성 사장 재소환함.
-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조현준 (주)효성 사장 불구속 기소함.(미국서 구입한 빌라 취득금액 총 85만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라며 "내년 1월9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점을 고려, 이 사건을 우선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함. 검찰은 또 "조현상 전무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가 2008년 8월께라 아직 시효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힘.
- 2010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조현준 (주) 효성 사장의 美 부동산 구입자금이 효성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힘.

*** 2009년 3월 25일, 검찰, 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증권거래법 위반) 무혐의 처분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 수사 진행중. 현재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함.

5. 약평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금융 국가청렴위 등으로 검찰로 넘어온 10여 가지 범죄의혹 첩보에 비해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어 축소·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음.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였음.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아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사임을 보여준 사건임. 이로 인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움.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재벌가 2·3세의 유사사건과 비교할 때 수사 진척이 거의 없다가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종결되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함.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이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줌.

22.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수영 OCI 회장 일가· 한승수 전 총리 아들 부부 등 OCI 주식 불법거래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발행인) 등이 2008년 1월 25일경부터 8월 즈음까지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2009년 6월 24일 검찰에 '수사통보'('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임. 이어 이수영 OCI 회장과 이 회장의 두 아들도 2007년 말 회사의 호재성 공시 이틀 전에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각각 3억 5천만원과 4억 8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됨. 특히 민주당이 한승수 전 총리의 아들 부부 역시 2007년 말 OCI의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공석) - 3차장 최재경 - 금융조세조사1부장 김강욱(2009/08 이전)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금융조세조사1부장 전현준(2009/08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6월 24일, 금융감독원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발행인)과 OCI 내부자들이 2008년 1월 25일경부터 8월 즈음까지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통보'('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함(2009년 7월 10일부터 <한겨레>의 연이은 보도와 7월 14일 <매일경제>의 보도 등으로 처음 알려지게 됨.)
-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 2명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수사 착수함.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앞으로 자료를 검토해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참고인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함.
- 8월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진 및 지휘라인 모두 교체되면서 수사 중단됨.
- 10월 6일, 검찰, OCI 본사 압수수색함.

- 11월 24일, 검찰,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 이우현 사업총괄부사장을 20일에,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를 23일에 각각 소환 조사했다고 밝힘.
- 12월 15일, 검찰,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에 대해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2010년 1월 16일,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미공개 정보 건수가 증가했다"며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에 대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힘.

4. 재판 경과 및 결과

- 현재 수사 진행중임.

5. 약평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OCI 주식을 처음 매입한 시점은 2008년 1월 25일이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시점은 2009년 6월 24일로 1년 7개월이나 지난 뒤이며, 금융당국의 핵심 관계자 또한 검찰 통보 결정 전에 동아일보 쪽 인사가 법률 대리인 등을 대동하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을 여러 차례 찾아와 따로 만났다고 전하는 등 로비 의혹이 불거져 있음.

실제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의 OCI 주식 매입 건을 다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 2009년 6월 10일 회의에서 당초 '검찰 고발'로 올라온 안건을 '수사통보'로 심의결과를 낮추었다는 점에서도 로비나 외압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사통보' 후 3개월이 지나서야 OCI 본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통상의 주가조작 사건과 비교할 때, 수사에 시간이 훨씬 더 걸리면서 한승수 전 총리의 아들 부부가 연루되어 있어 검찰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도 그러했듯이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임.

23.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진압 경찰폭력 피고소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촛불집회 참가한 시민들 중에 집회를 강제해산하거나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장비를 사용한 일들이 빈번하고 또 불법체포감금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였음. 이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그 지휘관들을 고소한 사건임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4부장 지익상 - 형사4부 안범진 검사, 정진기 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6월 19일, 6월 30일을 비롯해 7월과 8월에 걸쳐 곤봉과 방패로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거나 불법체포, 불법구금한 경찰관과 지휘관들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됨.

* 검찰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하고 고소인에 대한 1차 조사만 실시함

* 고소인 조사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등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지 않음.

* 2009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수사에 진척사항 전혀 없음.

4. 약평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준수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대야할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방치한 대표적 사건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검찰과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명정대함과 법질서 준수가 허구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는 수사임.

24. 대통령 부인의 사촌 김옥희 씨 공천로비 금품수수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옥희 씨가 지인인 김태환 씨오바 함께 2008년 2~3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접근해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게 해 주겠다고 수 십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 공천로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 - 검사 하담미

* 선거관련 사건 또는 금품로비 사건의 경우 통상 공안부나 특수부에서 맡게 되나,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하고 업무여력이 있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고 검찰측 설명함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천명목 금품수수 사건 파악

- 7월, 검찰, 청와대로부터 사건이첩 받음

- 8월 1일 김옥희 씨, 김태환 씨 사기 혐의로 구속

- 8월 13일, 김종원 이사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기소

- 8월 14일, 김옥희 씨와 김태환 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 1심, 200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광만 부장판사

: 김옥희 씨 유죄, 징역 3년, 추징금 31억8천만원

: 김종원 씨 유죄, 징역 1년 6월

: 김태환 씨 유죄, 징역 1년
- 2심, 2009년 1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박형남 부장판사
: 항소 기각

25. 한나라당 유한열 고문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시도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이 2008년 1월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대한전자통신의 이모 대표에게 국방부 사업의 납품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하며 계약 금액의 5%를 요구하고 인사비 등으로 약 5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3부장 김광준 - 검사 김정수(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8월 7일,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에 수사의뢰,
- 8월 8일, 검찰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긴급체포
- 8월 11일, 검찰,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속
- 8월 13일, 검찰, 공범 검거반 구성
- 8월 20, 25일, 검찰, 공범 한덕영 씨(20일), 김재현 씨(25일) 체포.
- 유한열, 한덕영, 김재현 씨, 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 1심, 2008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규진 부장판사
: 유한열 씨 유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3천만원
: 한덕영 씨 유죄,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 5천만 원
: 김재현 씨 유죄, 징역 2년, 추징금 1억 1천만 원
- 2심, 2009년 4월 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조병현 부장판사
: 유한열 씨 유죄, 징역 10개월, 추징금 2억 3천만원
: 한덕영 씨 유죄, 징역 2년, 추징금 1억 5백만원
: 김재현 씨 유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1천만원

26.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09년 1월 20일 오전 용산 재개발 4구역인 한강로 2가의 철거 예정 5층 상가 건물 옥상에 서 농성하던 중 상가세입자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회원 50여 명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강제해산 및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망루)으로 진입하고 농성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하여 화재발생 원인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의 불법행위, 철거민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을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수사본부 >

지검장 천성관 - 본부장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9년 인사이동 전까지) -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6명,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 서울중앙지검 : 수사본부 해체 이후 >

-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형사3부장 안상돈
(2009.01 ~ 08, 단 천성관 지검장은 2009.06.21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형사2부장 안상돈 (2009/08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1월 20일, 참사발생 당일, 검찰, 수사본부 구성, 농성자 22명 현행범 체포
- 1월 22일, 농성자 5명 구속,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소환조사
- 1월 23일, 서울경찰청 이송범 경비부장 · 이성규 정보관리부장 소환조사
- 1월 24일, 서울경찰청 김수정 차장 소환조사
- 1월 25일, 용역업체 본사 및 용산 사무소 압수수색
- 1월 28일,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체포(30일 구속)
- 1월 30일, 서울경찰청 · 용산경찰서 압수수색
- 1월 31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용산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 검찰에 제출
- 2월 3일, 검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서면조사
- 2월 4일, 김 청장 “청장실 무전기 꺼놔었다” 답변서 검찰에 제출, 검찰, 언론이 보도한 ‘용역업체 경찰 물대포 분사’ 등 수사시작
- 2월 5일, 수사 결과 발표 9일로 연기
- 2월 6일, 용역업체 직원 5명 소환조사
- 2월 8일, 농성자 5명 구속 기소
- **2월 9일, 최종수사결과발표**
: 농성철거민 5명 구속 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6명 계속 수사(이충연 씨 및 입원환자 등)
: 경찰, 무혐의 처리
: 철거용역업체 본부장 등 임직원 7명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4월 22일, 용산참사 첫 공판 열림.
- 10월 21일, 검찰, 피고인 9명에게 징역 5~8년 구형

- **10월 28일, 법원, 1심에서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6년,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 2010년 1월 13일,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 · 등사하게 해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임(서울고법 형사7부 이광범 부장판사)
- 2010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함.
- 2010년 1월 15일, 용산참사 변호인단,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 분 공개함.
- 2010년 2월 4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함.(서울고법 형사3부 이성호 부장판사)

5. 약평

검찰은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밝혀진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 일방적인 수사였다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또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 그 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이 같은 부실 수사 때문에 몇 차례나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편파수사와 소극적 수사로 일관한 수사였음.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조차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음으로써 공판준비절차의 강화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준수법기관이라는 검찰 스스로가 어겼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와 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입장에서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함.

27.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2009년 11월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지난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 김모 수석부위원장과 백 모 정책실장 등 철도노조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 부산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박기준 - 1차장 김정수 - 공안부장 임석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10월 30일, 철도노조, 11월 두 차례 파업 결정.

- 11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한부 파업 벌임.(철도(수도권)·발전산업·가스공사·국민연금·가스기술공사 노조 등 9개 노조·지부 소속 조합원 1만 5천여명 참가)

- 11월 6일, 대검찰청,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가짐.

철도노조 파업 등 공공시설 파업에 대비한 대책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41곳 지검과 지청의 공안·기획부장검사 43명 참석함. 이날 김준규 총장은 “공안 분야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일선청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공안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함.

- 11월 12일, 철도노조-공사 측 임금과 단체협약안에 대한 집중교섭 시작함.

- 11월 24일, 철도공사, 노조 측에 단협 해지 통보함.

- 11월 26일,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함.

- 11월 26일, 검찰·경찰·노동부 등 관계당국, 공안대책실무회의 가짐.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과정과 이후 진행된 파업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불법성 여부 검토함.

- 11월 27일, 철도공사, 철도노조 집행부 182명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소함.(업무방해 혐의)

- 11월 28일, 철도공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 등 5명을 추가 고소함.

-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될 것”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힘.

- 11월 29일, 대검 공안부, 철도노조 집행부 182명에 출석 통보와 함께 수사 착수함.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사건을 지체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찬·반 투표 절차도 지켜 그 자체로는 명확한 불법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파업을 시작하는 등 목적 자체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조사를 토대로 결론 낼 계획”이라고 밝힘.

- 11월 30일, 경찰(서울 용산경찰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5명을 우선 소환 대상으로 정하고, 소환 통보함. 노조 집행부 9명에 대해 소환 불응해 체포영장 신청함.

- 12월 1일, 경찰,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함.

대검찰청 공안부, “최종 판단은 수사가 끝난 뒤 내리겠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은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건 일종의 정치투쟁”이라며 “불법 파업이 명백한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파업’ 담화문 발표함.(기획재정부·노동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관세청 합동 기자회견)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인 손실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촉구함.

-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찾은 자리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힘.

이귀남 법무부장관, ‘MBN오를 1부’에 출연해 “노조가 계속 불법파업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함.

철도노조,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등 간부 65명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고발함.(대체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단체협약(제177조)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27건에 걸쳐 이루어짐.)

- 12월 3일, 철도노조, 조건부 파업 철회함. “파업 철회 후 교섭에 집중할 것이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12월 4일, 대검, “파업이 중단됐다 해도 고소·고발 사건 자체는 남아 있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힘.
- 12월 9일,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경찰에 자진 출두함.
- 12월 14일, 부산지법, 고창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함.(파업을 강행해 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 : 업무방해) 법원은 "고 본부장은 파업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힘.
- 12월 21일, 변호사·노무사·학계의 법조계 인사들 ‘법률가 선언’ 발표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8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7명,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14명 등 법조계 인사 289명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진상조사단과 공동변호인단 구성함.
- 12월 23일, 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불법파업이나 불법이 아니더라도 정치목적 파업 등 불법집단행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 밝힘.
특히 공공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추궁한다는 계획으로, 불법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단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는 방침임.
- 2010년 1월 6일, 검찰,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 김도 수석부위원장과 백 모 정책실장, 고창식 부산본부장 등 철도노조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함. (2009년 11월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지난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 : 업무방해 혐의)
- 2010년 2월 3일, 야4당 소속 국회의원 94명 전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파업유도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요구서 국회에 제출함.
“2009년 11월 철도노조 파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됐지만 철도공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철도공사가 파업을 유도·기획한 전모와 청와대·노동부·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힘.

4. 재판 경과 및 결과

- 재판 절차 진행중

5. 약평

철도노조의 최근 파업은 사업장 점거나 대체인력 투입 방해 행위도 없었고, 파업의 목적·절차·수단이 모두 노조법에 따른 합법·준법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검찰의 대응은 법률가 선언문에서도 언급했듯 “검찰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확대해석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임.

더구나 한국철도공사가 단체 협약 해지를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와 검찰의 강경대응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걸림돌이 될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통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까지 정부와 검찰이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끌어들이 무차별적으로 처벌로 일관하는 현실은 형법이라는 하위법이 헌법을 능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988~1991년 구속된 노동자 1400여명 중 785명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됨. 2002~2006년 노동형사사건 중 업무방해죄는 30.2%로 가장 많았음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2년 “파업을 범죄화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도 2009년 7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업무방해죄를 쟁의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낸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파업의 범죄화하는 정부와 검찰의 공안인식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

28.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2008년 2월 23일 결성한 조직으로, 혁명적 노동자계급 당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비정규직 철폐와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동자를 위한 정부를 세우는 것을 강령으로 갖고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이적단체’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

찰이 오세철 교수 등을 구속기소하려 한 사건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2부장 이영만 (2009/01 이전)
- 수사/기소 : 지검장 천성관 - 2차장 김희관 - 공안2부 윤웅걸 (2009/01 ~ 2009/08,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이전까지)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8월 28일 검찰, 오세철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기각됨)
- 11월 17일, 검찰, 오세철 교수 등 구속영장 재청구(기각됨)
- 12월 4일, 경찰, 사건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함
- 12월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하며 사노련 간부들을 모두 소환하겠다고 언론에 밝힘
- 12월 30일, 사노련 오세철 운영위원장 소환.
- 2009년 8월 11일, 오세철 운영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함.

4. 약평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다수의 국민들을 분열시키며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려다 실패한 사건임.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채수사라는 명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아울러 검찰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5만여 건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거의 없는 조직에 대해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전형적 사례로, 검찰이 지난 해 검찰창설 60주년을 맞아 마땅히 했어야 할 과거사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수사가 지금에도 행해지고 있는 것임.

29.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경남 간디학교의 역사교사인 최 모 씨의 수업교재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증거자료 중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광주시민결기문'과 '5월의 노래'를 포함하여 논란이 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진주지청장 조주태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7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 10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항의
- 10월, 이적표현물 증거자료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제외시킴.

4. 약평

감정의뢰 과정을 보면 경찰청 공안연구소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건으로, 검찰의 인식이 구시대적임을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임.

3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0년 10월 21일에 결성된 민간 통일운동의 연대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2008년 9월 27일 아침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24곳을 압수수색하고 간부들을 연행하여 조사, 검찰이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주요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최한욱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박동기 씨)(30일, 4명 영장 발부, 1명 기각)
- 10월 24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 구속 기소
- 12월 2일, 김승교 공동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추가)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4월 21일,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함. 강진구 조직위원장에는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최한욱 집행위원장에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박동기 정책위원에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 10월 22일, 앞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함. 강진구 조직위원장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 최한욱 집행위원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박동기 정책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이 선고됨.(서울고법 형사10부 이강원 부장판사)

- 11월 27일, 법원, 김승교 상임공동대표 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함. 함께 기소된 김 모 조직위원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윤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각 선고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 김기정 부장판사))

5. 약평

단체를 조직하고 동일한 내용의 활동을 한 지 수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적단체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성 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했으며, 검찰이 이적행위라고 판단한 이 단체와 구성원들의 활동과 주장중에 일부는 단지 북한과 주장이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이는 구시대적인 탄압일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의 존재여부라는 측면에서도 잘못된 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한 사건임.

31. 4.9 총선 당선 국회의원 선거법 등 위반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08년 4월 9일 총선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공천헌금 제공으로 양정례 의원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대검찰청 >

검찰총장 임채진 - 공안부장 박한철 - 공안1과장 정점식

< 서울중앙지검 >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 :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 검사 송규중(주임검사)

정국교 :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

- 검사 정진기(주임검사)

문국현 :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 검사 진동혁(주임검사)

< 전국 각 해당지검 및 지청 > 등

3. 수사 경과 및 결과 (주요 사건)

- 2008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4.9총선 막판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김성식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 2건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토록 이첩함.

- 5월 30일, 검찰,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양정례, 김노식 비례대표 의원,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 등 공천환급 사건 불구속 기소함.

- 9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뉴타운 헛공약 관련 정몽준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첫 소환함.

-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정몽준 의원 뉴타운 개발 관련 허위공약 혐의 무혐의 처분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박 진(종로) 의원 불구속 기소함.

서울북부지검, 뉴타운 헛공약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현경병(노원갑)·신지호(도봉갑)·유정현(중랑갑)의원 뉴타운 헛공약 관련 무혐의처분, 프랑스 대학 학위 허위기재 관련 현경병(노원갑) 의원 불구속 기소함.

서울남부지검, 뉴타운 헛공약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안형환(금천)·구상찬(강서갑) 의원 무혐의 처분, 하버드대학 학력 잘못 기재 관련 안형환(금천) 의원 불구속 기소함.

* 2009년 1월 5일, 뉴타운 헛공약 관련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정몽준, 안형환 의원 재정신청(민주당측 신청)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 내림.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사건 다시 배당됨(오세훈 시장,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됨).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공소제기 결정 내림.

- 2009년 1월 20일, 검찰, 정몽준 의원 불구속 기소함.

< 불구속 기소 >

강기갑(민주노동당, '08.9.29), 강용석(한나라당, '08.7.18), 강운태(무소속), 구분철(한나라당), 김

노식(친박연대, '08.5.30), 김성식(한나라당, '08.9.22), 김세웅(민주당), 김일윤(무소속, '08.9), 김재균(민주당, '08.10.9), 문국현(창조한국당, '08.10.7), 박진(한나라당, '08.9.26), 박종희(한나라당), 백원우(민주당, '08.9.22), 변재일(민주당, '08.9.26), 서청원(친박연대, '08.5.30), 신성범(한나라당, '08.9.29), 안형환(한나라당), 양정례(친박연대, '08.5.30), 유선호(민주당), 유재중(한나라당, '08.9.30), 윤두환(한나라당), 이무영(무소속), 이한정(창조한국당, '08.5.9), 임두성(한나라당), 정몽준(한나라당, '09.1.20), 정양석(한나라당), 조정식(민주당, '08.9.29), 조진형(한나라당), 최구식(한나라당, '08.9.30), 최욱철(무소속, '08.9.29), 현경병(한나라당, '08.9.26), 홍장표(한나라당, '08.8.28), 홍정욱(한나라당)

< 구속 기소 >

이한정(창조한국당 '08.7.17), 정국교(민주당, '08.5.9)

4. 재판 경과 및 결과

강기갑 - 1, 2, 3심 벌금 80만원(확정)

강용석 - 1심 벌금 80만원, 2심 벌금 50만원(확정)

강운태 - 1, 2, 3심 무죄(확정)

구분철 - 1, 2심 벌금 400만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김노식 - 1, 2심 징역 1년,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김성식 - 1심 벌금 80만원

김세웅 - 1, 2, 벌금 500만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김일윤 - 1, 2, 징역 1년 6월,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김재균 - 1, 2심 벌금 90만원

문국현 - 1심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박진 - 1심 벌금 70만원(확정)

박종희 - 1심 벌금 500만원, 2심 벌금 300만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백원우 - 1, 2심 벌금 80만원(확정)

변재일 - 1, 2심 벌금 80만원(확정)

서청원 - 1, 2심 징역 1년6월,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신성범 - 1심 벌금 80만원

안형환 - 1, 2심 벌금 150만원, 3심 일부 무죄 · 파기환송, 환송심 벌금 200만원 · 일부 무죄

양정례 - 1, 2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유선호 - 1심 벌금 70만원(확정)

유재중 - 1, 2, 3심 벌금 50만원(확정)

윤두환 - 1, 2심 벌금 150만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이무영 - 1, 2심 벌금 300만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이한정 - 1심 징역2년(선거법 위반) · 징역 1년(공사문서 위조),

2심 징역2년(선거법 위반) · 징역 6월(공사문서 위조), 3심 원심 확정

* 창조한국당 비례3 · 4번 후보들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패소로 의원직 상실

임두성 - 1심 벌금 90만원(확정)

전국교 - 1심 징역 3년, 벌금250억원(주가조작), 벌금 1천만원(선거법),

2심 징역3년, 벌금150억원(주가조작), 벌금 1천만원(선거법)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정몽준 - 1, 2심 벌금 80만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정양석 - 1, 2심 벌금 80만원(확정)

조전혁 - 1심 벌금 50만원(확정)

조정식 - 1심 벌금 70만원(확정)

조진형 - 1심 벌금 80만원(확정)

최구식 - 1, 2, 3심 무죄(확정)

최옥철 - 1, 2, 3심 벌금 300만원(확정)

허범도 - 의원직 상실

동생의 1,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상고 취하 · 확정)

회계책임자 김모 씨의 3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확정)

현경병 -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2심 벌금 80만원

홍장표 - 1, 2, 3심 벌금 500만원(확정)

홍정욱 - 1심 벌금 80만원, 2심 벌금 30만원(확정)

32.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들 선거법 위반 사건과 전교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공정택(당선) 후보가 학원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 등과 재산신고에서 부인의 차명계좌를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고발된 것을 수사하고, 같은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의 선거자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원한 것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9월 29일, 검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주경복 후보 관련 수사의뢰 받음
- 10월 7일 검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공정택 당선자 수사의뢰받음
- 12월 11일 검찰, 주경복 후보 수사관련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 압수수색
- 12월 15일 검찰, 공정택 당선자 수사관련 선거사무실과 종로M스쿨 사무실 압수수색
- 12월 16일 검찰, 주경복 후보 수사관련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영장 청구(18일 기각됨)
- 12월 17일 검찰, 공정택 당선자 첫 소환
- 12월 19일 검찰,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 12월 22일 검찰, 공정택 당선자 재소환,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5명 자택 압수수색
- 12월 24일 검찰, 주경복 후보 선거자금 불법지원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
- 12월 30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사무처장 구속영장 재청구. 주경복 후보 첫 소환

- 2009년 1월 1일 법원, 전교조 서울지부장 구속, 사무처장 영장 기각
- 1월 7일 검찰, 주경복 후보 재소환
- 1월 12일 검찰, 서울교육감 선거 중간수사발표
 -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부인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4억을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주경복 후보를, 교원단체와 교사들로부터 9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 선거비용 불법 지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조직국장 구속 기소, 사무처장 등 집행위원 6명과 회계책임자 1명을 불구속 기소
- 1월 22일, 검찰, 주경복 후보를 불법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13명 불구속기소
- **공정택 교육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주경복 후보,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조직국장, 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전교조 사무처장 등 집행위원 6명, 회계책임자, 전교조 서울지부지회장 13명 등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4. 재판 경과 및 결과

- 공정택 전 교육감, 1심 재판 유죄 선고
 - : 2009년 3월 10일, 벌금 150만원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용상)
 - :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 : 후보자 재산등록시 부인 명의 차명계좌 보관 4억원 누락 관련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유죄
- 공정택 전 교육감, 항소심 재판 유죄 선고
 - : 2009년 6월 10일, 벌금 150만원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박형남 부장판사)
- **공정택 전 교육감, 상고심 재판 유죄 확정(대법원 1부, 주심 이홍훈 대법관)**
 - : **2009년 10월 29일,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교육감직 상실**
- 주경복 후보, 1심 재판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용상)
 - : 2009년 9월 24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만6,059원 선고

- 2009년 12월 15일, 공정택 전 교육감, 서울행정법원에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 8,00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09년 12월 8일, 주경복 후보, 항소심 첫 공판

5. 약평

전교조 등의 지원을 받은 주경복 후보관련 수사에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당선자이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대표자격인 공정택 당선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아울러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 등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자금을 지원한 전교조 서울지부와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은 물론 다수의 관계자를 구속시킴으로써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를 넘어서 전교조 탄압을 위한 표적성 수사라는 비판을 초래한 사건임.

33. 김귀환 서울시의장 선거 금품제공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6월)를 앞둔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후에 걸쳐 김귀환 의장(당시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전원(28명)에게 3천5백여만 원의 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 검사 송규종(주임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 7월, 검찰, 김귀환 의장 구속영장 청구
- 9월 5일, 검찰,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28명 중 4월 국회의원 총선 전에 금품을 받은 25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총선 후에 금품을 받은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1명에게는 두 혐의 모두 적용)

4. 재판 경과 및 결과

- 김귀환 씨,
: 1심 유죄, 징역 1년6월(총선 전 제공 선거법 위반부분 징역1년, 총선 후 제공 뇌물혐의 징역 6월), 200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이광만
: 2심 유죄, 징역 1년(총선 전 제공 선거법 위반부분 징역8개월, 총선 후 제공 뇌물혐의 징역4개월, 2009년 1월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
- 금품을 총선 전에 받은 시의원들(선거법 위반 혐의)
: 1심, 벌금 60 ~ 80만 원 등, 추징금 50만~100만 원 등(확정), 200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 금품을 총선 후에 받은 시의원 4명(뇌물수수 혐의)
: 1심, 징역 4~8개월 등,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 등, 200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 : 2심, 김동훈 시의원,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윤학원 시의원,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2009년 1월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34. 한상을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1. 사건 개요

2009년 5월 28일,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이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한상을 전 국세청장이 주도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징계와 함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광주지검 >

- 수사 : 지검장 박영렬 - 차장 정동민 - 형사2부장 김경석(2009.01 ~ 2009.08)
- 수사/기소 : 지검장 길태기 - 차장 강경필 - 형사2부장 김경석(2009.08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5월 28일,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이 국세청 내부통신망(인트라넷) ‘나의 의견’란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을 전 청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 또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왜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6월 8일, 국세청, 김동일 계장에 대해 직위해제 통보함.(국세청은 국가공무원법 63조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23조의 ‘품위 유지 위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근거로 밝힘. 김 계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에 직위해제 사유로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라고 명시함.)
- 6월 10일, 광주지방국세청, 12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동일 계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힘.

- 6월 11일, 김 계장, 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 제기함.
- 6월 12일, 광주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 열어 김동일 계장에 대해 ‘파면’을 공식 결정함.
- 6월 16일, 광주지검, 광주지방국세청이 김 계장을 검찰에 고소함(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라 형사2부(육전기 부장검사)에 사건 배당해 수사 착수함.
- 7월 3일, 김 계장,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함.
- 8월 24일, 광주남부경찰서, 김 계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 국세청 직원의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임.)
- 2010년 1월 7일, 광주지검, 김 계장을 불구속 기소함.(한상률 전 청장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국세청 소속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광주지검 강경필 차장검사는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의견일 뿐"이라며 "김 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함.
-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김 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징계 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결정함.
- 2010년 1월 18일, 김 계장, 행안부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 광주지법에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10년 2월 5일, 김 계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첫 공판 열림.(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

5. 약평

지난 2009년 8월 24일, 김동일 계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광주남부경찰서조차도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 국세청 직원의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그러나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진실규명 요구를 내부통신망에 올리는 것조차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오히려 검찰권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음.

35.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 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2009년 5월 29일, 경복궁 안뜰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이 헌화를 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두 번째로 헌화와 분향을 하려 제단으로 나가자 장례위원이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뛰쳐나오며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 사죄하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라고 소리치다가 경호원들에게 즉각 제지당함. 이에 대해 보수단체 소속 시민이 고발해 검찰이 백 의원을 장례식 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1부장 김주현(2009.01 이전)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형사1부장 이창재(2009.01 ~ 08)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형사1부장 오정돈(2009.08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9년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국민의병단’ 소속 전모 씨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힘.(특수공무집행 방해·명예훼손 혐의)
- 2009년 12월 23일, 검찰, 백원우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함.(장례식 방해 혐의) 검찰은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례식 방해 사건으로 처리된 2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힘.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10년 1월 21일, 법원, 백 의원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함.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고 사건내용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힘.(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서 재판을 맡게 됨.

5. 약평

백 의원은 “당시 나는 장례위원으로 상주나 유족과 다름 없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방해할 수 있냐”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으로, 실제 법조계에서도 유족이나 장례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았고, 영결식이 무산되거나 중단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행동을 보수단체 소속 시민 한 사람의 고발만으로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음.

상식적 법감정으로 볼 때 일종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을 굳이 검찰이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이 느꼈을 불쾌감에 대한 불경죄·괘씸죄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공교롭게도 검찰이 백 의원에게 적용한 장례식 방해 혐의는 1987년 5공화국 검찰이 당시 변호사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의 사인 규명에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을 구속할 때 노동법상 제3자 개입 금지 혐의와 함께 적용했던 조항이었다는 점에서 군부독재 당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정치검찰’로의 퇴행임.

36. 재벌가 2·3세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비롯해, 구본호(LG그룹가), 정일선(현대그룹가), 김영집(한국도자기), 박중원(두산그룹가) 등 재벌가의 2·3세대들이 미공개(내부)정보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주식시세차익을 얻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구본호 씨 사건 : 대검 중수부장 박용석 - 검사 박경호(주임검사)

* 박중원 씨 사건 :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1차장 최교일 - 금융조세조사1부

장 봉욱/조사부장 박은석

* 김영집 씨 사건 :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1부장 봉욱

* 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명동성·천성관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1부장 봉욱(2009/01 이전)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금융조세조사1부장 김강욱

(2009/01 ~ 2009/08,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3. 수사 경과 및 결과

* 구본호 씨(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

- 2008년 6월 19일, 대검 중수부, 구본호 씨 대우그룹 로비 의혹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

- 7월 9일, 대검 중수부, 구본호 씨 구속기소(미디어솔루션 주식 주가조작 혐의)

* 박중원 씨(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 7월 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박중원 씨가 최대주주였던 뉴월코프 압수수색

- 7월 28일, 검찰, 박중원 씨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 8월 18일, 검찰, 박중원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뉴월코프에 거액투자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 2009년 1월 2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박중원 씨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 미끼 투자금 20억 유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 김영집 씨(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엔디코프 전 사장)

-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김영집 씨 수사착수사실 공개

- 11월 28일, 검찰, 김영집 씨 구속

- 12월 16일, 검찰, 김영집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총 362억 원의 회사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

* 조현범 씨(한국타이어 부사장,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 9월 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코스닥 기업 엔디코프의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올렸는지, 또한 엔디코프 유상증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힘.

- 12월 30일,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소환조사

- **구본호 씨 구속 기소**(2008년 7월 9일, 구 씨가 대주주인 범한판토스 회삿돈 250억원 차용, 미디어솔루션 주식 주가조작 혐의)

- **박중원 씨, 김영집 씨 구속 기소**

-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무혐의 처분**

4.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1월 22일, 구본호 씨, 1심 유죄, 징역 3년, 벌금 172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 윤 경 부장판사))

- 박중원 씨, 김영집 씨, 재판 진행중

5. 약평

다른 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서만금은 수사에 진척이 없는데,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음.

37.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관련 수사

1. 사건 개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임원교체를 시도하는 상황속에서, 대검 중앙수사부를 비롯해 전국의 일선 검찰이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척결 대상 범죄’라는 명분으로 수십 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을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대검찰청 :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토지공사 등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 서울중앙지검 >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1부장 봉 옥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등)

- 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 특수3부장 김광준 (석탄공사, 산업은행-그랜드백화점 등)

< 서울남부지검 >

지검장 황희철 - 형사6부장 김 창 (증권예탁결제원, 한국도로공사 등)

< 전국 각 해당 지검 및 지청 >

3. 수사 경과 및 결과

- 2008년 3월, 대검 중수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 지시’,

- 4월, ‘공공기관 비리 단속 지시’ 전국 검찰청 시달

- 5월 12일, 대검 중수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지시
- 5월 13·14·15일, 산업은행 대출비리 관련 그랜드백화점,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 30여개 공기업 비리 적발, 82명 구속 기소, 168명 불구속 기소

◆ 공기업 대상 수사 결과(검찰 발표)

대상 기관	수사 내용	수사 청	총 단속 인원(구속)
한국도로공사	국유지 임대 매각 비리 관련 한국도로공사 前 인천지사 부지사장 등 3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	44명 (5명)
	승진 인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 前 국회의원 장○○ 불구속 기소		
	공사 발주 관련 호화 여행 등 금품 수수 前 도로공사 홍보실장 등 2명 구속 기소, 공사업자 등 3명 불구속 기소	부산동부	
	고객만족도 평가 방해 경기본부재무팀 3급 등 29명 불구속 기소	성남	
한국토지공사	감정평가업체 선정 관련 비리 인천지역 본부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	26명 (6명)
	공사 수주 명목 금품수수 前 토지공사 사장 김○○ 장남 구속 기소	수원	
	판교 신도시 도로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신도시계획처장 윤○○ 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무연고 토지 공탁금 관련 소송 비리 변호사 등 3명 구속 기소	청주	
대한주택공사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설계 변경 관련 금품 수수, 판교건설사업본부 전문위원 등 2명 구속 기소	수원	5명 (2명)
	아파트 재개발 공사 관련 금품 수수, 행복도시첨마을 사업단장 구속 기소, 경기지역본부 토목과장 불구속 기소	성남	6명 (1명)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관련 건설본부장 및 하도급업체 임원 등 5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수원	9명 (5명)
한국전력공사	전산 구축 사업 선정 비리 관련, IT지원처 과장 1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	2명 (1명)
인천국제 공항공사	민간 투자 사업 비리 관련 허브화 지원 부장 구속 기소	인천	1명 (1명)
대한석탄공사	특정 건설업체 부당 지원 관련 팀장 1명 구속 기소, 관리본부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3명 (1명)
한국지역난방 공사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비리 분당지사 과장 1명 구속 기소, 뇌물공여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5명 (1명)
한국석유공사	해외 유전사업 및 성공불 용자 관련 비리 前 해외개발본부장 등 4명 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4명 (4명)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및 대출 알선 비리 관련 신용보증기금 팀장 등 2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	3명 (3명)

	신입 직원 채용 비리 관련 전 인사본부장 구속 기소	서울서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외곽순환도로 지분 인수 관련 비리 공단 직원 등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2명
근로복지공단	경매 배당금 횡령 성남지사 5급 직원 구속 기소	성남	5명 (4명)
	근로자 채당금 횡령 통영지사 과장 구속 기소	통영	
	산재보험 요율 변경 편의제공 대가 뇌물 수수 전주시사 과장 등 2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창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 주식 공매 관련 금품수수 신용지원부장 등 3명 구속 기소, 브로커 1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4명 (3명)
한국주택금융공사	PF 대출 비리 관련 뇌물 수수 유동화관리부장 등 2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4명 (2명)
증권예탁결제원	직원 채용 비리 관련 경영지원본부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	5명
한국농촌공사	수의공사 관련 금품 수수 창녕지사 직원 등 2명 불구속 기소	밀양	2명
한국산업은행	대출 대가 금품 수수 여신관리실 팀장 등 2명 구속 기소	순천	6명 (2명)
	산업은행 자금 조달 및 운영 편의 비리 관련 前 산은 부총재 등 2명 불구속 기소	부산	
	검찰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산업은행 前 팀장 1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한국중부발전(주)	케너텍 관련 공사 수주 청탁 명목 금품 수수 前 중부발전 사장 구속 기소, 前 발전처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5명 (2명)
	보령화력발전소 납품 관련 금품 수수 보령화력본부 운영팀장 구속 기소	홍성	
강원랜드	호텔 증축 공사 관련 금품 수수 前 레저사업본부장 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7명 (5명)
	열병합발전소 공사 관련 금품 수수 前 시설관리팀장 등 2명 구속 기소		
	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취득 명목 금품 수수 산자부 사무관 구속 기소		
	강원랜드 하도급 건설업체로부터 도로공사 관련 뇌물 수수 강원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구속 기소		
	강원랜드 하도급 업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前 국회의원 조○○ 불구속 기소		
	금품 수수한 국회의원 최○○ 수사 중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하도급 업체 선정 비리 관련 식음료 파트장 등 4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	5명 (4명)
한국전기연구원	연구과제 선정 관련 뇌물수수 응용기술개발사업단장 1명 구속 기소	창원	1명 (1명)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비 횡령 에너지 재료 연구 그룹장 등 3명 구속 기소, 연구원 등 3명 불구속 기소	창원	6명 (3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입찰 비리 관련 연구원 총무과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대전	5명
코스콤	IT 설비 납품 관련 비리, 전 노조 위원장 등 3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	3명 (3명)
경기도시공사	승진 청탁 관련 뇌물 수수 前 경기도시공사 사장 오○○ 구속 기소, 후임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 불구속 기소	수원	23명 (7명)
	광고 신도시 보상 평가 법인 비리 관련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등 5명 구속 기소, 감정평가사 15명 불구속 기소		
	납품 청탁 관련 뇌물 공여 납품업체 대표 구속 기소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공단 업무 추진비 횡령 및 인사 비리 前 부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부산	5명 (1명)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채용 및 인사 청탁 비리 관련 금품 수수 前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기소	서울북부	1명 (1명)
농협	군납 육우 납품 비리 관련, 농협 인천 축산물가공업소 겸수실장 등 2명 구속 기소	부산	13명 (3명)
	농협 축산 관련 납품 청탁 금품 수수 등 前 농협 축산·경제 대표 구속 기소, 농협사료 대표 등 10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자금 투자 명목 금품 수수 前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 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2명 (2명)
	투자 관련 금품 수수, 前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 아들 구속 기소	대구	
한국철도시설공사	경부고속철도 공사장 쇄석암 편취 비리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3명 구속 기소, 5명 불구속 기소	경주	8명 (3명)

4. 재판 결과 (무죄 판결사례)

- 2008년 10월 16일, 김모 전 한국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신모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담당과장 등 임직원 2명에 대한 1심에서 무죄 선고됨.(아프리카 유전개발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
- 2009년 5월 28일, 앞선 김모·신모 두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됨.(서울고법 형사3부 이성호 부장판사)
- 2008년 11월 28일, 정장섭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추징금 550만원을 선고됨.(한국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시절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 뇌물수수) 케너텍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역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회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가법상 배임), 이사장 재직 시절 편의제공 청탁명목으로 받

은 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민병훈 부장판사))

- 2009년 12월 17일, 케너텍의 이상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서울고법에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뇌물공여·배임증제 혐의 :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 ※ 대검 중수부가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협력업체인 케너텍의 입찰비리를 포착해 이상선 회장과 장정섭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을 기소한 사건임.
- 2008년 12월 18일,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 선고됨.(에너지업체인 케너텍으로부터 투자 및 공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 배임수재·구속기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 윤 경 부장판사))
- 2009년 5월 21일, 앞선 김승광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추징금 6520만원이 선고됨.(서울고법 형사1부 조병현 부장판사)
- 2008년 3월,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만원 선고됨.(강원랜드 김 모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권이 바뀌더라도 본부장직을 유지하도록 힘써달라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구속기소,
- 2009년 6월 26일, 강경호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됨.(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2010년 1월 28일, 강경호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함. 재판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이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그 영향력의 행사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취급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힘. (대법원 3부(주심 : 신영철 대법관))
- 2009년 7월 23일,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무죄 선고됨.(현역 의원 시절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S종합건설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 2010년 1월 15일, 조일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됨.(서울고법 형사9부 임시규 부장판사)

- 2009년 7월 3일,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2700만원을 선고됨.(예식장 업자들과 실버타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 배임수재) 반면 코스닥 등록기업인 이노츠 주식 매입으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직원들에게 준 성과급의 일부를 상납받아 6천만원을 챙겼다는 혐의, 직원들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상납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5. 약평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검찰이 전격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6개월 이상 대검 중수부의 전면 수사인력 투입으로 전개되었지만, 애초 감사원이 적발해서 넘기고 검찰은 사법처리만 한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저인망식 압수수색과 겹가지 수사로 논란을 빚은 부분도 있음.

또 전반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의 개인비리에 집중되어 구조적인 비리사슬을 발본색원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음. 특히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해 일부 사건은 검찰이 호언장담한 핵심임원의 비리는 결코 발견하지 못한 채 하급 임직원 일부의 개인적 비리를 들춰내는 선에서 그쳤고, 일부의 경우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정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적 성격의 엄포성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38. KT 남중수 및 KTF 조영주 사장 배임수재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남중수 KT 사장과 조영주 KTF 사장 이들이 일부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2부장 윤갑근

3. 수사 경과 및 결과

- 9월 22일, 검찰, 조영주 KTF 사장 배임수재 및 배임증제 혐의 구속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 10월 16일, 검찰, KT본사와 남중수 사장 집 압수수색
- 11월 5일, 검찰, 남중수 KT 사장 배임수재혐의(계열사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구속
- 11월 7일, 검찰,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측근 노모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영주 KTF 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속
- 남중수 KT 사장 구속 기소(배임수재 혐의)
- 조영주 KTF 사장 구속 기소(배임수재 및 배임증제 혐의)

5. 재판 경과 및 결과

- 2009년 2월 12일, 남중수 KT 사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2억 7천만원·사회봉사 200시간 선고됨.(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 : 배임수재)
- 2009년 2월 12일, 조영주 KTF 사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년·추징금 24억 28만원 선고됨.(남중수 사장에게 KTF 사장을 연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8,500만원을 전달하고 납품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 : 배임증제·배임수재, 이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 윤경 부장판사))
- 2009년 8월 21일, 남중수 KT 사장에 대한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추징금 5천만원 선고됨. 조영주 KTF 사장에 대한 2심에서는 징역 2년·추징금 23억 5,900만원 선고됨. 항소심 재판부는 조영주 전 사장이 남중수 전 사장에게 8,500만원을 건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감형해 줌.(서울고법 형사4부 김창석 부장판사)
- 2010년 1월 28일, 남중수·조영주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함.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영주가 피고인 남중수에게 송금한 8,500만원을 조영주의 KTF 사장 연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도 청탁혐의와 결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대법원 3부(주심 : 신영철 대법관))

4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법무) 주요 일지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 중순 사이의 검찰(법무) 주요 일지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검찰(법무)의 인사·정책·개혁논의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실는 2009년 1월 ~ 2010년 2월의 일지는 이번 2년 검찰 보고서에 새로 실는 것으로, 이전 부분은 작년에 발행한 1년 검찰 보고서에서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이 일지에는 지난 2년간 검찰(법무)이 국민의 주목을 받은 것들인 동시에, 검찰(법무)를 평가하는 데 빠지면 안 될 기본적 사항들을 모았다.

‘개별 주요사건 수사’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앞서 3부에서 정치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으로 뽑은 것들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상 배열하였다. ‘법무검찰 인사·정책·개혁논의 등’은 정기·부정기 인사 및 검찰권 행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공식회의나 지휘부의 발언, 제도시행과 검찰개혁 논의 등을 정리했다.

개별 주요사건 수사	법무검찰 인사·정책·개혁논의 등
	2008. 3. 19 법무장관 ‘불법시위 엄단’ 방침 밝힘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불법집단행동 엄단, 불법폭력집회 주동자와 상습시위자 엄단, 온정적 처리 탈피, 고소고발관계없이 능동적 검찰권 행사, 시위대 검거 경찰에 면책 보장’ ‘친시장 법 정비, 행정법규 위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임직원과 기업 양벌 규정 완화’
2008. 4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특수1부에 배당 이명박 대통령 사돈 조석래씨가 회장인 효성그룹 계열 효성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2009년 2월까지 수사결론맺지 못함)	2008. 5. 7 검찰총장, ‘광우병 괴담 엄단’ 방침 ‘전국민생침해사범전담 부장검사 회의’, “거짓과 과장된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왜곡해 사회 전반에 불신을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
	2008. 5. 12 대검, 공기업 비리 특별단속 지시 청와대가 공기업 사장 물갈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때에 맞춰 대검(중수부), 공기업 20여 곳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발표 *

	11월 수사 종료까지 전체 공기업 및 공공 기관의 10%에 해당하는 33곳, 250명 기소
2008. 5. 26	법무장관, ‘촛불이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 긴급간부회의, “촛불집회가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 “극렬행위 자뿐 아니라 이를 선동, 배후 조종한 자에 대해 끝까지 검거해 엄정 처리”
2008. 5. 27	대검, ‘촛불시위에 3無원칙 적용’ 대검 공안부장(박한철) 주재 공안대책협의회, ‘촛불시위에 관하여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한 무관용, 무폭력, 무질서 추방의 3無원칙 적용하여 엄격한 법집행 할 것’ 결의
2008. 5. 29	
검찰, 신성해운 비자금 관련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 기소	
* 9월 5일, 정상문 전 비서관 1심 무죄 판결	
2008. 5. 30	
검찰,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당선자 기소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양정례, 김노식 비례대표 의원,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등 공천헌금 사건 불구속 기소	
2008. 6. 8	
법무장관, 촛불시위 공동담화문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공동 담화, “불법·폭력시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2008. 6. 20	2008. 6. 20
재벌가 2,3세 주가의혹 사건 수사 진행공개	(오전) 법무장관, 조종동 광고불매운동 포함 정부정책 비판 누리꾼 수사 지시
* LG가 구본호씨 구속(6월 21일), 두산가 4세 박종원씨 구속기소(8월 18일),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 김영집씨 구속기소(12월 16일)	(오후) 대검, 조종동 광고불매운동 포함 정부정책 비판 누리꾼 수사 방침 발표(‘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유해환경사법 특별단속’)
* 이명박 대통령 사위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 씨에 대해 2009년 3월 25일에 무혐의 처분함.	
	2008. 6. 20
	청와대, 전국 검사장급 이상 검찰본부 초청만찬
	* 애초 6. 20 개최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비판 의식해 행사 며칠 앞두고 취소함
	2008. 6. 23
	대검, 조종동 광고불매운동 처벌 유관기관 대책회의
	민유태 형사부장 주재, 대검 형사1과장/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첨단범죄수사부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참석, 조종동 광고불매운동 단속·처벌 논의
	‘인터넷 괴담’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전담팀 구성, 경찰수사 지휘하기로 함
2008. 6. 23	
검찰,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 개시	
	2008. 6. 24

	법무장관, '광고불매운동 수사강화' 국무회의, “신문 광고 압박을 광고주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위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 ‘인터넷 괴담’ 수사팀장, 부장검사로 격상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 팀장을 부부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격상시키고, 구분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배치함. 전국 지검과 지청에 56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가동
2008. 6. 30	
검찰총장, “과격시위 주도 세력, 끝까지 책임 물어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	
2008. 7. 8	
조중동광고불매운동 누리꾼 20여명 출국금지	
	2008. 7. 16 법무장관, 경찰과잉진압 외면 국회 현안질의 답변,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보는 것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 뿐”
2008. 7. 20	
해운사 불법로비 관련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구속	
	2008. 7. 22 법무장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발표 국무총리 주재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원장, 법무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참석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회의,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협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심각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필요성 밝힘
2008. 7. 28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08. 8. 1 BBK 수사 정영섭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2급 행정관 임명됨
2008. 8. 11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국방부 납품 청탁 혐의 구속	
2008. 8. 14	
대통령 부인 사촌 김옥희 씨 공천명목 금품수수 혐의 구속기소	
2008. 8. 20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2008. 8. 28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오세철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기각)	
*11월 17일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2008. 8. 29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누리꾼 24명 업무방해 혐의 기소	
2008. 8.	
창원지검 진주지청, 7대안학교 교사 역사교재에 이적표현물 혐의 적용 기소	
* 5.18 광주민주항쟁 관련 ‘결기문’, ‘오월의	

노래' 등이 이적표현물 증거로 제시된 것이 비판(2008.10)받자 이를 제외함	
	2008. 9. 3 법무장관, '경찰폭력 면책' 주장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 "경찰관이 범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하도록 하겠다"
2008. 9. 6 검찰,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뇌물사건 기소 금품 받은 서울시 의원 28명 불구속 기소 (선거법위반 24명, 뇌물수수 혐의 4명)	
	2008. 9. 8 검찰총장, "던져지는 수사말고 이제는 우리 수사를 사자" 대검 주례 간부회의
	2008. 9. 9 검찰총장, "과잉 표적수사 논란이 없도록 절제되고 품격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배려해야 한다." 수원지검 방문 훈시
	2008. 9. 대검, 대검찰청 공안3과 부활 추진, 언론을 통해 알려짐
2008. 9. 26 검찰,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뉴타운 거짓공약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2009. 1. 5 서울고법 정몽준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내림. 검찰, 무혐의처분 내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재배당함	
2008. 9. 2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주요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2008. 10. 31 검찰60년 기념식 법무장관 축사, "법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공안정국 조성이나 표적수사 운운하며 폄훼하는 일부 시각이 있다" 검찰총장 기념사,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다."
	2008. 11. 3 법무장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수사 시사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미네르바'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된다는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지적에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힘
	2008. 11. 4 검찰총장, '경제침체 고려 기업수사 자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불필요한 자료는 압수를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압수한 서류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돌려줄 것", "경제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수사 진행"
2008. 11. 7	

서울중앙지검, 최열 환경재단 대표 관련 환경재단 압수수색 2008. 12. 2	
대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 평씨 알선수재 혐의 구속 2008. 12. 3	
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 보조금 횡 령혐의 구속영장 청구(기각됨)	2008. 12. 29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집회시위 강 경대처’ 공언 대통령 업무보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사태 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법무장관),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 처해 법치의 새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 (검찰총장)
	2009. 1. 2 검찰총장, 신년사 “국법질서를 굳건히 확립함으로써, 경제 위 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갑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 서 친북좌익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2009. 1. 7 검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긴급체포 *1월 9일 구속영장청구	2009. 1. 7 PD수첩 담당 주임검사 사표 제출 임수빈 형사2부장, 기소반대 주장하며 지휘 부와의 갈등 끝에 사표제출. *형사6부(전현 준 부장검사)에 사건 재배당
2009. 1. 12	

검찰,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정 택 당선자,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간 부 기소	2009. 1. 13 검사장급 인사(19일자) △서울중앙지검장 천성관(수원지검장) △법 무부 검찰국장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 대검중수부장 이인규(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공안부장 노환균(울산지검장) △대 검차장 문성우(법무부차관) △법무부차관 이귀남(대구고검장) 등
2009. 1. 20 용산철거민 참사 수사본부 구성 용산철거민 참사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본 부 구성. 검사 8명과 수사관 13명 배치	2009. 1. 21 검찰, 2005년 여의도 시위농민 사망 사건 경찰 기소증지처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증지처분을 내림
	2009. 1. 28 평검사 515명 인사(2월 9일자)
2009. 1. 29 검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불구 속 기소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9. 2. 9 용산참사 사건, 경찰책임면제 수사결 과 발표 최중수사결과 발표. 철거민 농성자 6명 구

속 기소, 철거민 농성자 15명 불구속 기소, 용역업체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과잉진압 관련 경찰 불기소 처분	
2009. 2. 11	
‘미네르바 박 씨’ 검찰 발표 최초 수사시점, 거짓으로 드러남	
2008년 12월 29일에 쓴 글이 범죄혐의 있어 그 이후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그동안 검찰이 말했으나, 사실 12월초부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음이 밝혀짐	
2009. 2. 13	
법무장관, “사형집행 심각하게 고민 중”	
국회 대정부질문,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사형집행 여부는 인간 생명을 다루는 문제라 여러 고려 요소가 많다”고 답변	
2009. 2. 20	
법무부, 흉악범에 ‘전자발찌’ 추진	
국회 법사위 업무현황 보고, 성폭력법에 이어 특정강력범에 대한 제도도입 추진 밝힘	
2009. 3. 3	
법무장관, “국회 폭력 엄정 대처”	
국무회의 발언. 전날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우려 표시 후 법무부가 ‘국회 폭력사태에 관한 법무부 방침’ 발표	
2009. 3. 12	
법무차관, “야간 옥외집회 위험성 심각”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심판 공개 변론서 이귀남 법무차관 발언, “야간이 되	

	자 익명성에 기대 폭력화된 것을 보면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 심각한 것 알 수 있다.”
2009. 3. 21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체포(23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세무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	
2009. 3. 25	2009. 3. 25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의혹(증권거래법 위반) 무혐의 처분	법무부, ‘흉악범 얼굴 공개’ 입법예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법원 확정 판결 전에 얼굴공개를 허용
2009. 3. 26	
검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 구속	
2009. 4. 1	
검찰, 주관업(조석래 회장 막내동서) 기소중지(조세처벌법 위반 혐의)	
2009. 4. 7	
검찰, 박연차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체포	
(5월 8일 구속기소)	
2009. 4. 10	
검찰, 연철호(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 씨를 체포(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구속(횡령·탈세 등 혐의)	
2009. 4. 11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 소환조사	2009. 4. 28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제2의 촛불 막겠다” 대검 공안부, 경찰청, 노동부 등 공안대책협의회. 촛불시위 1주년, 용산참사 100일 등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엄정 대응할 것 밝힘
2009. 4. 30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	2009. 5. 2 법무부 등 3개 부처, “폭력시위를 자제해달라”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폭력시위를 자제해야 하며 불법시위는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을 강조하는 담화문 발표
2009. 5. 6 대검 중수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태광실업 세무조사 담당) 압수수색	2009. 5. 13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천신일 회장 관련수사에서 대선자금 의혹은 보이지 않는다”
2009. 5. 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노 전 대통령 일가에 ‘공소권 없음’ 결정	2009. 5. 26 법무부, ‘범죄자 DNA 국가관리’ 입법

예고 홍악·강력 범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 DB 구축 내용을 담은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09. 5. 31 검찰, 천신일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6월 2일 ‘범죄소명 부족’으로 기각)
2009. 6. 1 시민사회단체,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 요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 성명,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통치 중단 등을 요구	2009. 6. 1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요구 민주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상건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 사과, 법무장관·검찰총장·중수부장 파면, 국회 진상조사, 한상률·천신일 특검 등을 요구
2009. 6. 1 대검, “수사 브리핑에 대해 개선할 점 점검 필요” 대검 확대간부회의,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에 대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수사공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2009. 6. 3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 2009. 6. 4 민주당, 검찰개혁 3대과제 및 ‘검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2009 의원 워크숍,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죄 제도개선 등 3대 개혁과제 확정
	2009. 6. 5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사, “조·중·동 광주불매사건 때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했다”
	2009. 6. 11 법무부,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수사브리핑 기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문제 △수사 상황 유출문제 등 논의 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09. 6. 12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 최종결과 발표	
천신일 회장 불구속 기소	
2009. 6. 16	
검찰, 문학진(민주당)·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불구속기소	
한미FTA 비준동의안 기습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	
	2009. 6. 21 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 천성관(서울중앙지검장) 지명

	2009. 6월말 김준규 대전고검장, 이귀남 법무부차관 사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2009. 7. 7 이인규 중수부장 사직 박연차 변호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이인규 영입(9월 11일)
	2009. 7. 13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09. 7. 14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직 사퇴 발표, 청와대 사의 수용
	2009. 7. 15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검사직 퇴임 정동기 민정수석 사의
	2009. 7. 17 정부, 대검에서 공안대책협의회 공무원·교사의 시국대회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대응 방침
	2009. 7. 28 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전 대전고검장) 지명
2009. 7. 29	
검찰, 조·중·동 2차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 불구속기소(공동공갈·공동강요 등)	

2009. 8. 10

검사장급 인사(12일자)

△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대검 공안부장)
△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서울고검 차장)
△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 대검 공안부장 신종대(춘천지검장) 등

2009. 8. 11

법무부 8·15 특별사면 발표, “부패 정치인, 공직자, 비리 경제인, 조직폭력, 흉악범 배제했다”

2009. 8. 17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09. 8월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2009. 8. 25

검찰 중간간부 309명 인사(31일자)

2009. 8. 27

검찰총장, “중수부 예비군 식으로 운영하겠다”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검찰 DB에서 고향·출신지 삭제” 등을 밝힘

2009. 8. 31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지명으로 6월 21일 사임)

2009. 9. 2

법무부, “검찰 수사 브리핑 서면 대체하겠다”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10월 중 훈령으로 공포 예정

2009. 9. 3

대통령,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귀남(전 법무부차관) 지명

(전임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 내각일부교체에 따라)

2009. 9. 17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09. 9. 17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취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낙마로 7월 사임)

2009. 9. 23

법무장관 등, “공무원노조 정치투쟁 땀 엄벌”

행안부·법무부·노동부 장관 공동 대국민담화문,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우려 표명

2009. 9. 30

검찰,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안모 효성건설 상무 불구속기소하고 수사종결(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2009. 9. 30

이귀남 법무부장관 취임

2009. 10. 5

야5당, 국회 검찰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대표 회동, 정기국회 공조 합의

2009. 10. 7

2007년 말~2008년 초 검찰에서 효성 그룹 관련 범죄정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2009. 10. 13 검찰 내부 범죄정보 수집기능 강화에 대한 보도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직후 '범죄정보수집 강화' 지시에 따른 것
2009. 10. 15 검찰, 4월에 조석래 효성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사실이 확인됨	
2009. 10. 20 검찰총장, 효성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 지시	
2009. 10. 21 검찰, 전교조 1차 시국선언 참가자 등 40명 불구속 기소, 46명 약식기소	
2009. 10. 21 검찰, 시국대회에 참여한 공무원 노조간부 14명 불구속기소	
	2009. 11. 3 김준규 검찰총장, 법원검찰 출입기자들에 금품제공
	2009. 11. 9 참여연대, 김준규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구서를 법무부장관에 제출
2009. 11. 18 법무부, 미국 정부에 주관엽(로우테크 실소유주) 범죄인 인도요청 청구	
2009. 11. 18 검찰, 안원구 국세청 국장 체포(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미술품 강매 혐의)	

(12월 8일 구속기소)	
2009. 11. 25 검찰, 광영옥 전 대한통운 사장 구속 기소(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2009. 11. 25 법무부, "아동 성폭력범 최장 징역 30년으로 늘린다"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규정 강화 등
	2009. 12. 1 검찰, 수사 관련 공무수행 시 배지 달기로 했다고 보도됨 검찰총장 취임 직후 지시. 체포나 압수수색 때 신분을 드러내는 배지 패용
	2009. 12. 3 / 12. 31 법무부장관, 참여연대의 검찰총장 징계요구에 대해 두 차례 '징계하지 않을 것' 공식 답변
2009. 12. 4 검찰, 광영옥 전 사장이 "한명숙 당시 총리에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착수	
2009. 12. 11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진을 피의 사실 공표혐의로 고발	
2009. 12. 15 검찰,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에 대해 동양제철화학 주식불법거래 혐의로 소환조사(피내사자 자격)	
2009. 12. 18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체포	
2009. 12. 21 검찰,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2009. 12. 22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2009. 12. 23 법무부, “불법 집단행동에 무관용”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시위문화 정착’ 최우선 과제 추진. 영장항고제, 참고인 구인제, 사법방해죄 등을 사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포함
2009. 12. 24 검찰, 조현준 (주)호성사장, 조현상 전무 형제 소환 조사	2009. 12. 23 대통령, “표적수사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 대통령 업무보고 중, “겉핥하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는 등 검찰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하라”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2009. 12. 30 검찰,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2009. 12. 29 대통령, 이건희 전 삼성회장 단독사면 법무장관, “2018년 겨울올림픽 평창유치를 위해” 31일자로 사면한다고 밝힘
2009. 12. 30 검찰, 조현준 (주)호성 사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2010. 1. 7 검찰, 국세청 내부통신망을 통해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김동일 계장 불구속기소	2010. 1. 7 강기갑 의원 1심 무죄 선고 대검 공안부, “이것이 무죄면 무얼 처벌하란 말인가”라며 강한 반발
2010. 1. 14 검찰총장, 용산참사 재판부 수사기록 공개에 철저 대응 지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니 철저하게 대응하라”	2010. 1. 14 2010. 1. 18 법무부, 면책조건부진술제·영장항고제·피해자 참가제도 연내 도입 추진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추진과제로 결정. 상반기 중 개정안 마련한 뒤 12월 국회 제출 예정. 플리바게닝·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방안도 도입여부 검토
2010. 1. 20 검찰총장, “사법부 판단에 대해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PD수	2010. 1. 18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제정, 22일부터 시행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 금지 △사건 담당 검사 등 수사진의 언론인 접촉 금지 등을 담음 2010. 1. 20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검찰개혁 분야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 포

**첩 무죄선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판결”**

‘PD수첩’ 제작진 무죄선고 직후 검찰 간부
회의,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항소를
지시하며 ‘철저대응’ 주문

함. 주요논의 주제는 법원판결과 우리법연
구회 등

2010. 1. 20

대법원, 사면심사위 명단 공개 판결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 정보공개 거부결정
취소소송 확정판결

2010. 1. 21

전국 18개 검찰청 화상회의

검찰총장, “주변 국면이 어수선하다. 우리
가 가야 할 길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가자”

2010. 1. 21

검찰, 조현준 (주)효성 사장의 美 부
동산 구입자금인 효성 미국법인에서
나온 정황 포착 밝힘

2010. 1. 21

법무장관, “특정판사에 대한 폭력 행
사나 위협 등에 엄정 대처하라”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및 항의시위가 이어진 데 따른 것

2010. 1. 25

대검, 검찰총장 직속 형사정책단 신설

2010. 2. 4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산화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5월부터 시행

2010. 2. 10

여야, 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 합의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구성시점부
터 6개월간 활동, 법원·검찰·변호사 소위

2010. 3. 5

수원지검 공안부, 김상곤 경기교육감
불구속 기소(직무유기 혐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